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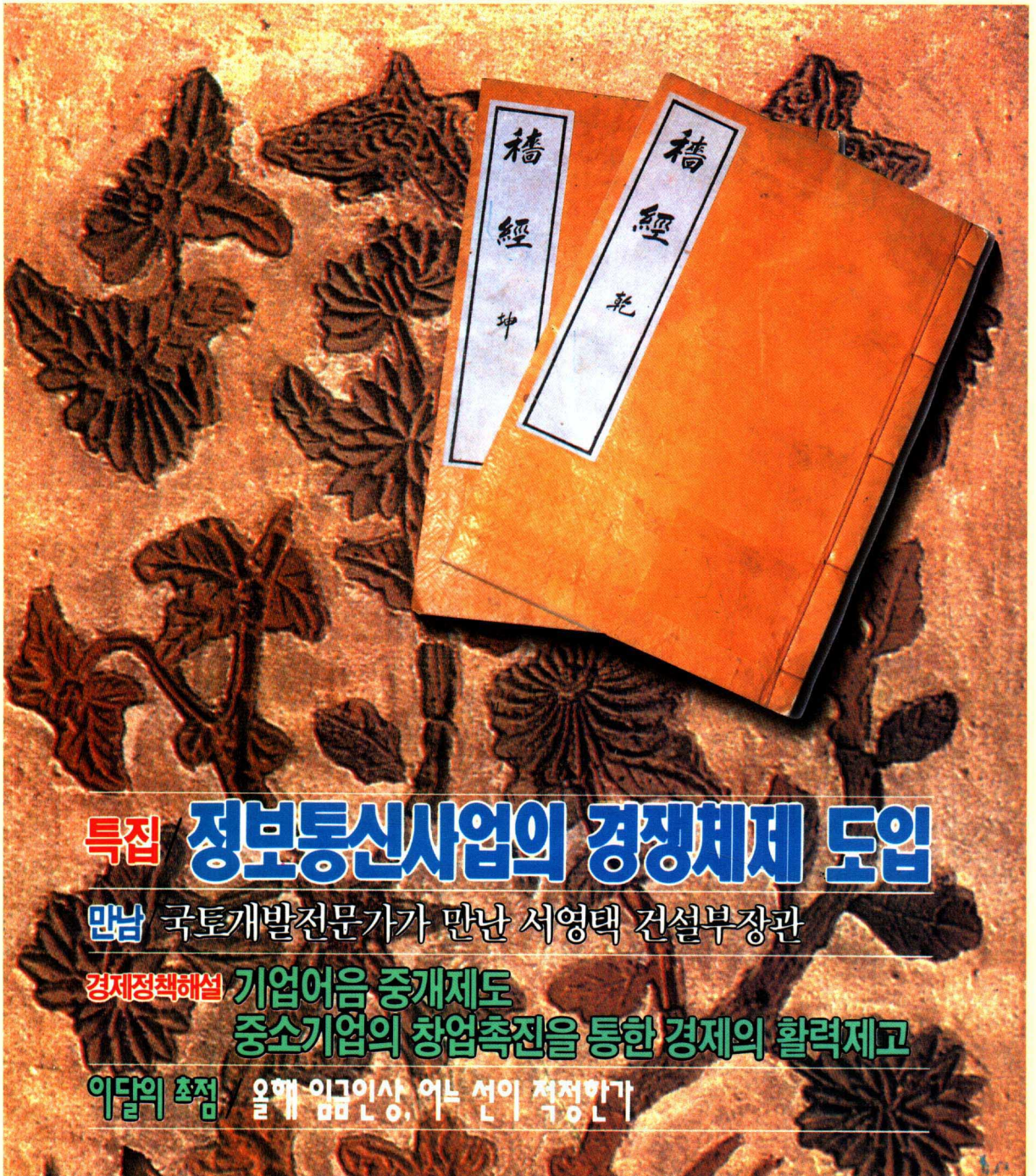
# 나라경제

제17호

1992

4

나라경제·1992년 4월 1일 발행·제3권 제4호·1990년 11월 14일 등록·등록번호 라-4859호 발행처/국민경제교육연구소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전화 (02) 561-1400 1991년 8월 30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유통



## 특집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만남 국토개발전문가가 만난 서영택 건설부장관

경제정책해설 기업어음 중개제도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의 활력제고

이달의 초점 / 올해 임금인상 어느 선이 적정한가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부田農法 보급을 통해 농업기술진보를 추구한 農業書



## 박세당(朴世堂, 1629~1703)

조선시대 현종·숙종조의 대실학자로 자는 季肯, 호는 西溪이고, 시호는 文貞이며 본관은 潘南이다. 참판을 지낸 朴堧의 아들로서 인조 7년에 태어나 숙종 29년까지 살았다.

31세 때인 현종 1년(1660년)에 증광시에 장원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현종 8년에는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당시의 對淸政策을 둘러싸고 崇明排淸論者들로부터 ‘五邪’의 일원으로 몰리던 터여서, 부임치 않은 죄로 장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해에는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청국을 다녀오으로써 안목을 크게 넓히기도 하였다.

西溪는 정계를 떠나 ‘스스로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현종 9년에야 楊州郡 水落山 西谷의 石泉洞에 귀농하여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농법도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20년(1694년) 갑술옥사로 소론이 득세하자 승지로 기용되었고, 이어서 공조·이조·형조판서를 지냈다. 그러나 74세 때인 숙종 29년에 주자학을 비판하는 思辨錄을 저술함으로써, 斯文亂賊으로 몰려 삭탈관직당하고 유배가던 도중 玉果에서 죽었다.

西溪는 이종환, 안정복보다 앞선 시대의 학자로서 농촌생활에 토대를 둔 새로운 학풍을 이루었으며, 특히 당시의 주요 사상이었던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사회개혁을 꿈꾼 진보적인 학자였다.

## 벼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농업경영방식을 모색

『**穡**經』은 17세기 후반의 농서로서 숙종 2년(1676년)에 편찬되었으나, 이후 계속 보완되면서 지금과 같은 농서의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朴世堂이 정치사상에서 反朱子學의 기수였던 것처럼, 이 책에 나타난 그의 농학 체계도 앞서 간행된 벼농사 중심의 농서인 『農家集成』과는 사뭇 달랐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주자학 계열의 학자들이 저술한 기존 농서의 획일적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농업을 창출해 내고자 하였다. 『색경』은 주로 중국의 고농서를 우리 농업의 환경에 맞도록 새로이 편찬한 것으로 朴世堂이 주로 인용한 중국농서는 『農桑輯要』였는데, 이밖에도 『呂氏春秋』, 『農桑撮要』, 『禮記月令』, 『田家五行』 등 여러 고농서를 참고하였다.

박세당은 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송시열의 주자학풍과 대립하여 『농가집성』과는 다른 성격의 농서인 『색경』을 편찬하게 되었지만, 이는 또한 두 농서가 바탕하고 있었던 지역적 기반에 근거한 것이어서 단순한 정치적 반감의 소산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농가집성』이 농업선진지역인 남부지방의 우수농법을 수록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것이었음에 반해, 『색경』은 그의 농학사상의 실천지였던 중부 이북의 풍토에 적합한 旱田農法을 찾아 보급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지방관리로 일한 지역이 모두 중부 이북지역이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색경』은 크게 상하 2권으로 구분된다. 상권에서는 번토, 耕地, 播種과 같은 기본적인 농법과 조(粟), 대소맥, 수도, 대소두 등 기본작물을 설명하였고, 그외에도 種諸瓜采法, 種諸果法, 種諸樹法, 種諸花藥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권에는 養桑法, 養蠶經, 田家月令 등의 농업관계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穡經』의 농업기술상의 특징은 『농가집성』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화북지방의 한전농법을 수용하려는 것이었지만 특히 耕種法에 대해서도 기존 농법과 크게 대립되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전농업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水稻作에도 追肥法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농업기술상의 큰 진전이였다. 그러나 중요기술인 乾耕法이 생략되고 있는데, 이는 물이 부족한 논은 과감히 한전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다는 그의 한전중심적 농업관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穡經』이 비록 중국농서의 편찬체계와 농업기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필사본으로만 오랫동안 전해져와 우리 농학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벼농사 위주의 우리 농업·농학을 탈피해야 한다는 시각과 한국적 농업경영 모색을 위한 새로운 인목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朴世堂의 선구적인 실학사상은 오늘날 ‘쌀에만 매달려온 농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새로운 우리 농업 건설운동의 큰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농학연구

# 나라경제

1992 4 제17호



만남 / 서영택 건설부장관

## 권두칼럼

우리의 온힘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때  
/ 신현확·전 국무총리 6

##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해외에너지자원 개발로 미래에 대비한다  
-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 / 김왕기·객원기자 8

## 특집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통신사업의 경쟁정책방향 / 김창곤·체신부 14

정보통신과 산업의 경쟁력 / 이수성·통신개발연구원 19

정보통신기술 개발대책 / 박창환·체신부 24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의 육성대책 / 구영보·체신부 28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 김상국·한국통신 33

국제전화 사업에의 경쟁도입 / 박재천·(주) 데이콤 38

## 만남 국토개발전문가가 만난 서영택 건설부장관

21세기 국토개발의 확고한 좌표를 세운다  
/ 김안제·서울대교수 60

## 나라경제 만평

정보통신도 경쟁시대 / 이원복·덕성여대교수 64

## 이달의 초점 · 올해 임금인상, 어느 선이 적정한가

올해 임금인상, 생계비 기준으로 정해야  
/ 이정식·한국노동조합총연맹 102

올해 임금인상, 상실된 경쟁력 회복에 맞춰야  
/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105

올해 임금안정 정책의 배경과 의의 / 안희원·경제기획원 108

## 출입기자코너

정부조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 최성범·서울경제신문 기자 / 상공부 111

## 경제수상

석유절약의 필요성과 대책 / 이 원·동력자원부 45

노사교육 유감 / 홍종달·노동부 46

觀光小考 / 백남근·교통부 47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 김동욱·환경처 48

꿈과 호랑이를 통해 본 한국인의 덕목 / 장홍열·재무부 49

## 외국인이 본 한국경제

내수과열기미 보이는 한국경제  
/ 니시후지 노보루·일본총합연구소 소장 42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

## 경제정책해설

<b>기업어음 중개제도</b> / 강권석·재무부	68
<b>농림수산물 수출촉진방향</b> / 김영욱·농림수산부	71
<b>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의 활력제고</b> / 홍순직·상공부	75
<b>장기 전력수급계획</b> / 김장근·동력자원부	80
<b>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b> / 최종수·건설부	86
<b>‘좋은 식단’의 개발보급</b> / 김행진·보건사회부	90
<b>기술사의 사기진작과 능력제고를 위한 대책</b> - 기술사법(안)을 중심으로 / 송봉현·과학기술처	94
<b>부산항, 어떻게 개발되나</b> - 4단계 계획과 전망 / 이종천·해운항만청	98

## 경제동향

나라안 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지표 개선추세 / 김영과·경제기획원	50
나라밖 원화 및 주요경쟁국 통화의 최근 추이와 전망 / 안중조·산업연구원	55

<b>나라경제 화랑</b>	65
----------------	----

## 나라경제 논단

계량경제학의 발전과 한국에의 적용 / 하영호·농림수산부	112
육상운송업 개방에 따른 대응방향 / 김선태·교통부	117
<b>생활경제정보시리즈</b> 경제정책상담전화 ‘우리의 경제’를 통해 본 궁금증 생활경제관련 주요 문의사항 해설 / 오성환·경제기획원	120
<b>건강한 삶을 위하여</b>	
심장병 - 현대인의 중요한 사망원인 / 홍명호·고려의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장	133
<b>노영하 바둑칼럼</b>	
爛柯	134
<b>경제부처 동정</b> 정책일지·인사이동 / 편집실	123
<b>경제부처 발간자료 안내</b> / 편집실	129
<b>권말부록</b> 3월중 경제동향과 생활물가안정대책	135
<b>나라경제를 읽고</b>	141

권두칼럼

# 우리의 온힘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때

申鉉碯

前 國務總理

前 副總理 經濟企劃院長官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 과정에 있다. 무력의 시대는 가고 경제가 모든 걸 말해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시대는 가고 分權과 민주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새로 펼쳐질 세계 질서에 대한 개념이나 모습을 그려보기란 아직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에서 볼 때 최소한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살리는 정치체제, 즉 자유민주주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를 두고 각국이 전쟁마저 불사할 정도로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한 공산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세계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두가 함께 추구하여야 할 가치로서 이를 두고 각국간에 이해가 相馳할 일이란 없다.

경제는 원래 서로 주고 받는 것(give and take)을 기본으로 한다. 서로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 경제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평화와 협조 관계를 그 바탕으로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정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양상을 띠기 쉽다.

특히 세계경제는 국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하나의 단일시장이 되기보다는 지역경제화의 경향

을 더욱 뚜렷이 보이고 있다. 공동 대응함으로써 自國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나라들이 모여 하나의 經濟圈域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유럽의 경제통합이라든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APEC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 있어서도 경제적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문제, 즉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지역화와 兩極化 현상은 자연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이르지 못한 중진국들이 설 자리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임금수준은 높은 데 비해 기술이 여기에 맞춰 고도화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최근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급속도로 밀리고 있음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미치지 못한 결과로서 이는 세계 경제 속에서의 우리의 位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각국은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느냐, 자기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격렬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활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초미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무역적자의 심화, 불안정한 물가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보다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나 선거 분위기, 또 경제정책 등이나 닳아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정책이란 국가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경제에 대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책은 그런 연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나라든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몰라서 경제를 그르치는 경우란 없다. 요는 어떤 비전을 향해서 정책을 펼 것인지, 또 이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의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된다. 즉 비전과 실천에 의의가 關鍵인 것이다.

실천 가능성을 두고 '지도력'을 강조하는 소리도 많이 있어 왔다. 그렇다. 사실 어떤 사회에서도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특히 성숙하지 못한 사회, 급속히 발전하여야 하는 사회일수록 지도력은 더 강하고 확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도력은 호령만으로 수립되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불가결의 전제가 된다. 즉, 국민과 정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개별 경제정책에 대한 是非에 앞서 국민의 이해가 정책의 기본에 깔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共感帶는 올바른 비전의 제시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일단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방향 감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정책의 혼선은 물론 국민적 방황 또한 불가피하게 된다.

지금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비전과 나아가갈 방향을 두고 국민과 정부 당국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이상 홍보 차원의 발상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실천 프로그램의 제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인 것이다. 나라경제

# 해외에너지자원 개발로 미래에 대비한다

##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

객원기자/김왕기(중앙경제신문 기자)

시대에 따라 주역이 바뀌듯이 여건에 따라 역할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資源開發局은 동자부, 아니 우리 경제에 있어 '미래의 主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 에너지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상황에서는 해외자원의 개발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자원개발국은 中東 산유국을 비롯, 러시아·中國·베트남 등과의 경제외교에 열의를 쏟고 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파시르유연탄광 개발 장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 바로 動資部의 자원개발국이기 때문이다. 하긴 이미 주역으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90년말과 작年初에 걸쳐 진행됐던 걸프戰과 거의 위험수위에까지 이르렀던 電力難은 우리 주위에서 잠시 잊혀져가던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줬고, 이에 따라 자원개발국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自律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 10부제운행과

급증하고 있는 北韓과의 자원교류, 그리고 베트남의 빅베어 해상유전 개발 참여계획 등이 모두 자원개발국 직원들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이곳의 주업무는 한마디로 해외에 나가 광산·유전개발 등을 통해 각종 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지원해 주고 에너지의 소비절약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원개발국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局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원개발국은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해외자원과 그리고 국제협력과 등 6개課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개발국은 지난 78년 동자부가 생길 때 창설멤버로 상공부에서 옮겨온 고시10회 출신의 韓竣皓국장이 진두지휘를 맡고 있다.

에너지정책과(과장:鄭元翊)는 장·단기 에너지 수급계획, 에너지 가격 및 제도의 종합·조정, 석유사업기금 관리,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종합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과(과장:金東源)는





에너지 소비절약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 그리고 관련기술 개발 등을 맡고 있으며, 에너지지도과(과장: 柳東沃)는 집단에너지 공급 및 관련 업무와 熱사용기자재의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앞으로 가장 활발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은 대체에너지과(과장: 張基憲)로 91년 현재 국내 에너지소비의 57.7%를 차지하는 石油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개발된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舊蘇聯·中國 등 공산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부쩍 바빠진 곳은 해외자원과(과장: 曹基鳳)와 국제협력과(과장: 金虎徹).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

집·분석하는 한편 이 분야의 국제 회의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자원개발국의 최대과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과 한정된 에너지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느냐는 것.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을 새로이 시작했다. 무작정 에너지소비를 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하고 각 에너지 사용부문에 있어서 절약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과거처럼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이 겪는 불편은 최소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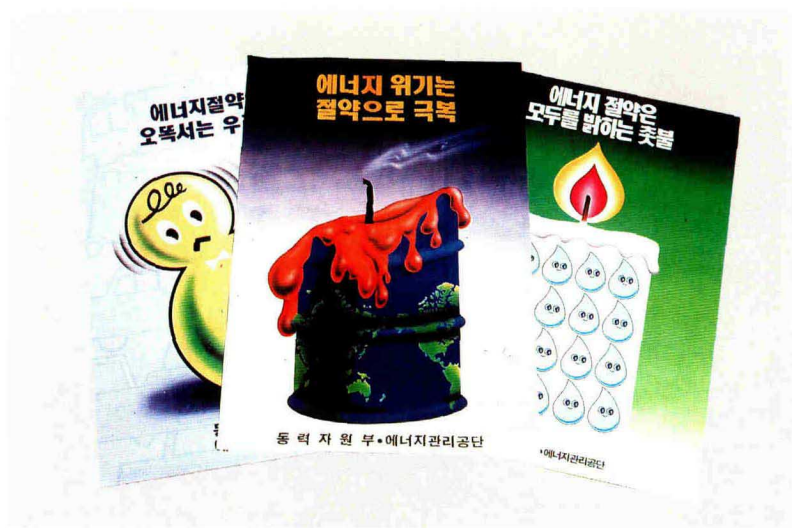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全文개정은 자원개발국이 이룩해낸 성과 중에서도 奮心作으로 꼽힌다.

면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없이는 효율적인 절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韓坡皓국장은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부문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예컨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多消費업종의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일정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에너지 관리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경우 시내버스의 路線정비 등이 주요 과제에 포함되

자원개발국의 최대과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과 한정된 에너지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나는 것이다.



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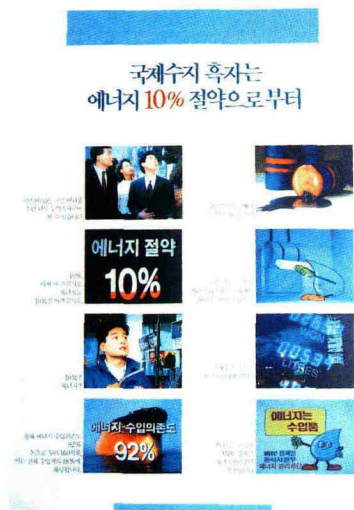
가장 어려운 부문은 역시 가정분야. 공공부문과는 달리 개별가정은 일일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제도가 없다 보니 ‘자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의 사회분위기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절약이 美德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에너지 뿐 아니라 모든 소비부문에서 너무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日本이나 美國에서도 건전소비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韓國장은 우리 사회에 불건전한 소비행태가 만연돼 있는 현실을 걱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이나마 협조하는 성의를 표시해 주면 목표가 어렵잖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자원개발국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물론 어려움도 적지않다.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시행하기보다는



주로 종합하고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으레 ‘功’은 다른 파트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그래서 자원개발국 직원들은 스스로를 ‘陰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라 이에 따른 어려움도 크다. 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외국

의 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한 관계자는 하소연한다.

애로사항은 또 있다. 명색이 해외 에너지 개발을 총괄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해외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곳은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인도네시아는 지난 90년에, 러시아는 작년어야 주재관이 파견됐다. 그래서 자원개발국 관계자들은 우선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와 濠州만에라도 주재관이 파견됐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다. 물론 세계石油시장에 대한 정보가 집약되는 유럽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도 주재관을 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焉敢生心 말도 못 꺼내는 형편이다.

소위 ‘긱발’에서 밀리다 보니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약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總論에서는 찬성이지만 各論에서는 자신의 조그만 불편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일부 他부처에 야속함을 느끼는 게 한두번이 아니란다.

실권이 없다 보니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계획’들이 탁상공론으로 끝나 버리거나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자원개발국 전 局員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지난 80년대初 ‘大局大課원칙’에 따라 2局이 뭉쳐서 만

들어진 자원개발국이 △국내외 油田·유연탄·대체에너지개발 등 순수한 자원개발업무만을 담당하는 局과 △에너지 절약업무를 담당하는 局 등 2개의 局으로 개편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韓국장은 ‘우리 局은 너무 異質의 인 업무가 합쳐져 있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언젠가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보람도 적지않다. 지난 70년 대만 하더라도 연탄이나 석탄이 없으면 큰일나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가스·석유·전기 등 에너지源이 다양해져 국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골라쓸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는 게 한 관계자의 이야기다.

기업체나 단체들이 격층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거나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빈방에 불을 끄는 모습 등에서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낀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北예멘의 마리브油田 개발 등 해외사업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때면 그동안의 피로가 순식간에 가신다고 한 관계자는 말한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全文개정은 자원개발국이 이룩해낸 성과 중에서도 會心作으로 꼽힌다.

또다른 자랑거리로는 다른 곳에 비해 젊고 패기만만한 중간실무진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고 한 관계자는 자부심 섞인 모습으로 설명한다. 보기 드물게 화공학을 전공한 박사 사무관도 있다.

**자원개발국의 주업무는 해외에 나가 광산·유전개발 등을 통해 각종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지원해 주고, 에너지의 소비절약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상일이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國際原油價가 배럴당 30달러 까지 치솟았던 지난 80년대초에는 장관이 가도 산유국의 고위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崔圭夏 前대통령께서 직접 원유확보를 위해 中東行 비행기에 올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 그 콧대높던 야마니 사우디 석유상을 비롯,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고위인사들이 원유구매협상을 위해 우리나라를 경쟁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塞翁之馬란 속담은 바로 이런 경우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曹基鳳과장은 그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회고한다.

그렇다고 現狀에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현실인식이다. 지난해 걸프戰 때 경험했듯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자원富國들과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개발국은 지금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中東 산유국을 비롯, 러시아·中國·베트남 등과의 경제외교에 열의를 쏟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각료로는 처음으로 진념장관이 베트남을 방

문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하순경에는 韓국장이 韓電·石公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 2주간 베트남을 방문했다.

鄭元翊에너지정책과장은 베트남과의 교류확대에 대해 ‘日本이 발빠르게 대부분의 자원보유국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직 베트남은 예외라 우리가 먼저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원개발국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자원개발국이 에너지절약 부문에 자원의 개발부문 못지않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빈방에 불끄기, 수도물 한 방울 아껴쓰기, 냉장고문 한번 덜 열기 등... 이런 조그마한 문제들만 실천되면 에너지 10% 절약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원의 개발이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한정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韓국장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풍조가 정착되고, 절약이 美德으로 평가되는 사회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자가용 10부제가 정착되면 1년에 약 2,800억원,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1도만 낮춰도 연간 1,400억원이 절약된다는 그의 설명에서 우리가 자원개발국의 ‘작은’ 노력에 적극 호응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 통신사업의 경쟁정책 방향

정부에서는 지난해 전기통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마련된 法的·制度的 기반을 토대로 무선통신 분야와 데이터통신 분야에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곤  
체신부 통신기획과장

최근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일대 變革期를 맞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신사업의 民營化와 自律化·開放化 趨勢의 확산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고조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업의 민영화와 개방화 추세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과 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技術의 革新으로 통신장비의 가격이 하락되어 통신사업에 필요한 설비투자 비용이 감소되고 있고, 컴퓨터의 보급 확산과 사회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수요도 컴퓨터 통신을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서비스 수요의 고도화와 다양화 및 기술발달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의 감소는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 욕구와 필요성을 계속 증대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수준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전신·전화와 같은 基本通信 部門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無線通信部門과 附加通信部門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89년 3월 산·학·연 등 사계의 전문가 96명으로 구성된 情報通信發展

協議會(위원장 신태환)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을 검토하였다. 同 協議會는 그해 11월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업 구조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90년 7월 동 協議會의 건의를 토대로 公聽會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通信事業構造調整計劃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종전의 公衆電氣通信事業과 情報通信役務提供業者로 2원화되어 있던 통신사업을 일반통신사업·특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적정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 통신사업 구조조정 내용

### 경쟁의 기본구조

통신사업의 경쟁 기본구조로는 첫째, 대규모 설비가 소요되는 시내전화사업은 獨占體制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둘째,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고 기술변화가 급속한 장거리·국제전화 및 移動通信分野는 점진적으로 경쟁을 허용하며 셋째,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요구되는 VAN(Value Added Network) 등 附加通信分野는 조기에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 사업자 분류

통신사업자는 통신회선 설비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통신 등 회선설비를 보유한 基幹通信事業者 및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전신·전화 이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附加通信事業者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영업구역·서비스 종류 및 기술적 특성에 따라 전국 규모의 통신회선 설비를 보유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一般通信事業者와 한국이동통신(株), 항만전화(株)와 같이 특정서비스만을 제공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特定通信事業者로 재구분하였다(〈표 1〉 참조).

### 사업별 경쟁체제

사업별 경쟁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통신사업 영역 중 시내전화 사업은 계속하여 한국통신에서 경영하고, 國際電話는 한국통신과(주)데이콤간의 複占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여, 지난 90년 10월에는 업무영역을 조정, (주)데이콤의 국제전화사업에 대한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91년 12월부터 미국·일본·홍콩 3개 국가에 한국통신과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의 대상국가를 52개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외전화 분야는 국제전화의 경쟁도입 성과와 전국 단일통화권 추진 등 주요인을 감안하여 96년까지 경쟁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둘째, 특정통신사업 영역 중 無線電話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개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하여 韓國移動通信(株)과 전국 複占體制를 유지하고, 無線呼出은 지역별로 신규사업자를 허가하여 한국이동통신과 지역별로 複占 또는 寡占體制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부가통신사업은 이미 90년 7월에 일정한 설비를 갖추면 遞信部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완전경쟁을 허용하였으며, 92년 3월 현재 30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업별 참여요건

통신사업자별 참여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의 指定을 받아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인의 소유한도

〈표 1〉 신·구 통신사업제도 비교

	기 간 통 신 사 업 자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개 정	○통신 회선설비 보유 ○통신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없음	○자기업무용 통신회선 설비 보유 ○지역적·기술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	○통신회선 임차 ○전신·전화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종 전	공 중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정보통신업무 제공업자

는 사업의 公共性 확보와 國家安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특정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인의 소유한도는 有線에 비해 낮아져 있는 無線通信 技術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의 활력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3분의 1까지 확대 허용하였다.

그리고 통신기기 제조업체 소유한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垂直 統合을 방지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는 기존의 사업자와 公正競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통신사업은 100분의 3으로, 특정통신사업은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외국인 참여에 대해서는 일반통신사업은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였고, 특정통신사업은 선진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여 낮아져 있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의 조기 발전을

**통신서비스 수요의 고도화와  
다양화 및 기술발달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의 감소는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 욕구와 필요성을  
계속 증대시켜 오고 있다.**

촉진하기 위해 3분의 1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표 2〉 참조).

**이동통신 분야 신규 사업자 허가**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다양화 등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차량전화를 위시한 이동통신 수요가 급증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단말기 가격의 하락으로 이동통신 이용계층이 확산됨에 따라 당분간 국내 이동통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0년에는 이동전화가 약 450만, 무선호

출은 약 400만 가입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보안 등 規制爲主의 政策으로 통신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內需基盤이 취약하여 이동통신 기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시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동전화와 무선호출분야에 제2사업자를 허가하여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적극 유입함으로써 무선통신분야를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고도화된 이동통신 서비스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내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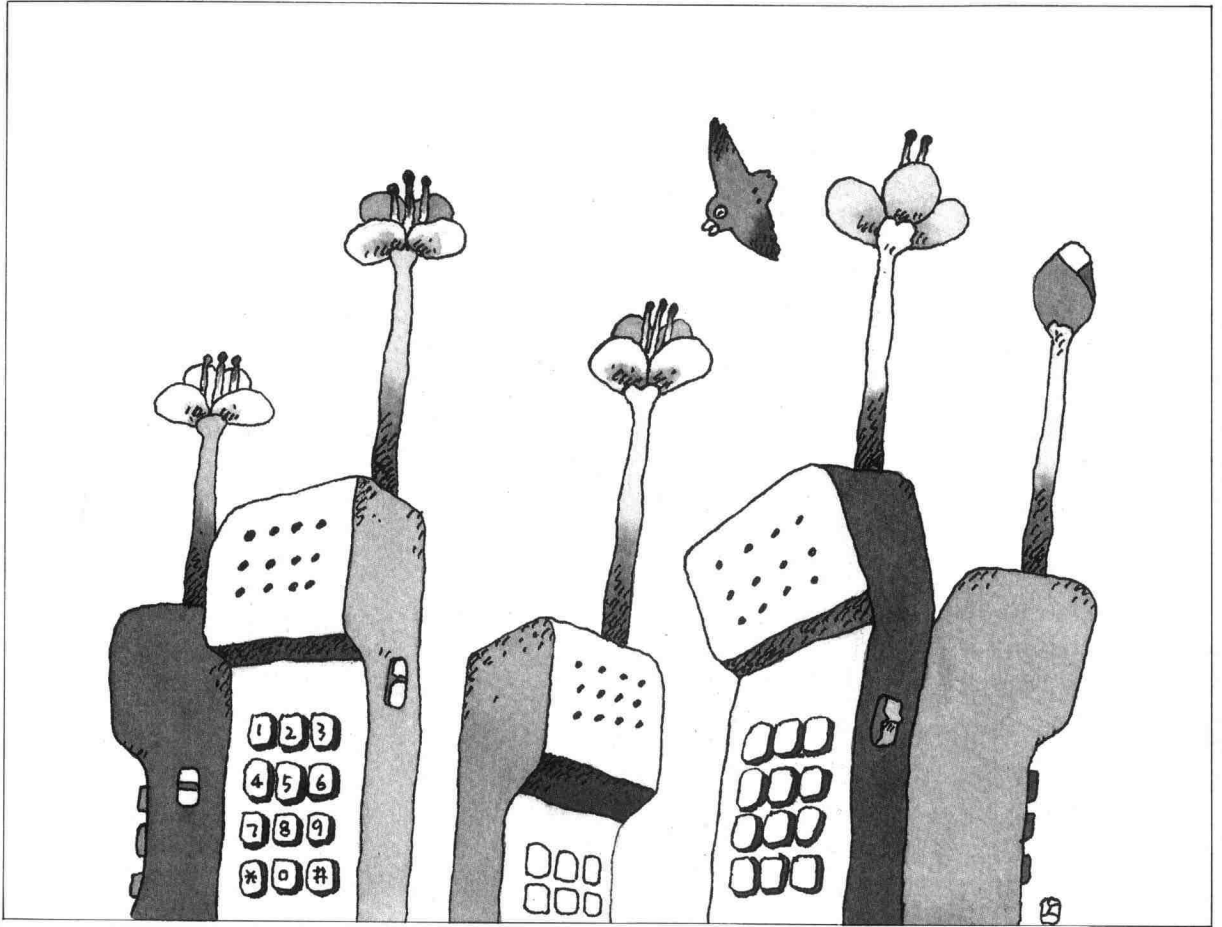
이동전화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개의 사업자를 신규허가하여 기존의 한국이동통신과 복점 경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고, 무선호출은 사업구역을 지역생활문화권 및 地域經濟 활성화 촉진 그리고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한국이동통신과 같이 하되 다만, 충청권은 충남·북으로 나누어 전국을 9개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구역별로 1개 사업자를, 수도권은 2개 사업자를 신규로 허가할 계획이다.

**허가 절차**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허가신청 요령은 동시에 공고하고, 허가 신청서도 같이 접수하며, 허가신청 방식을 公開競爭方式으로 추진하여 사업참여 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콘소시움을 구성하되, 중복신청은 금지하여 '1개 사업자·1 콘소시움'에

〈표 2〉 사업별 참여요건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비 고
동일인 (특수관계자 포함)	100분의 10 이하	3분의 1 이하	일반적인 소유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제한 없음	대주주 금지, 100분의 10 이하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포함)	100분의 10 이하	대주주 금지, 100분의 10 이하	
통신설비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대주주 금지, 100분의 3 이하	대주주 금지, 100분의 10 이하	단말설비 제 조업자 제외
통신사업자	타 일반통신사업자 주식소유 금지	타 특정통신사업자 주식소유 금지	
외 국 인 (임원)	금 지 (금 지)	지분합계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하)	



만 참여를 허용하여 희망업체에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허가심사는 1, 2차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탈락한 기업도 승복하게 될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차로 주요 주주의 財務狀態 및 자금조달능력·영업계획·기술계획을 심사하여 제공역무별·사업구역별로 2~3개 업체를 선발한 후, 2차로 通信網 건설능력과 통신사업 발전 특히 無線通信技術研究開發에 대한 寄與 계획 등을 심사하여 최종 허가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독일·홍콩 등 6개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였고, 91년 11월에는 체신부·연구소 및 회계사 등 전문가 17명으로 허가추진실무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실무전담반은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방법, 주요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許可申請要領을 작성하였고, 학계·관련업계·언론계·법조계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가신청요령은 최종적으로 通信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고, 심사기준의 주요내

용을 公告할 때 이를 미리 공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개시일·서비스보급률·연구개발 출연계획서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여 사업계획서의 適定性和 허가후의 현실성을 사전에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나라의 통신수준은 91년말 현재 전화시설이 1,700만회선을 능가하여 施設面에서는 세계 9위 수준으로 발전하여 전국전화가 자동화되는 등 기본통신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과 데이터통신 등 고도통신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정보이용의 대중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신의 양적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고도화와 고객 중심의 복지통신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왔다.

또한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한정된 조직과 재원에도 불구하고 TDX를 독자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선통신·데이터통신 등 고도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로 外國技術의 消化·改良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전기통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마련된 法的·制度的 기반을 토대로 무선통신 분야와 데이터통신 분야에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첫째, 무선통신 분야의 경쟁을 확대하고 적정경쟁 체제를 구축하면서 통신사업의 경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간 公正競爭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이를 위해 상호접속 방법과 서비스공급 조건 등을 규정한 通信網公開規定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과 통신망간 접속료 산정을 위한 統一會計制度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체신부에 準立法·司法的 기능을 수행할 通信委員會를 설치하여 신규사업자의 지정·허가에 관한 사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과거 供給者 爲主에서  
이용자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체제로 전환되어  
국민들의 通信選擇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항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항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審議토록 하고, 통신망간 설비의 상호 접속이나 설비 제공 등에 따른 사업자간의 분쟁과 손실보상 등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裁決토록 할 계획이다.

### 통신수요의 適期 충족

둘째, 전신·전화 등의 기본통신은 언제·어디서·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 고도화·다양화되는 통신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경제사회 발전과 福祉社會 具現을 위한 통신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만 회선의 디지털 교환기를 신규로 공급하고, 이동전화는 전국의 市 이상 지역에 대한 서비스망 구축을 완료하며, 통화완료율도 6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95년 무궁화위성 상용 서비스 개시에 대비하여 국제사업위성 통신기구(INTELSAT)로부터 임차한 국제위성 중계기를 이용하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범 위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선진국 수준의 통신기술 확보

셋째,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국내 통신기술을 조속한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9.6%가 늘어난 2,488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화율이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의 조기 자립을 위해 89년부터 96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과 단말기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개발 계획을 보강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시기를 94년으로 앞당기고 연구비도 7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民間企業體를 참여시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과거 供給者 爲主에서 이용자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체제로 전환되어 국민들의 通信選擇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강화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의 競爭力이 강화되고, 기술개발에도 경쟁이 도입될 뿐 아니라 신규 서비스 도입 추진으로 다양한 良質의 서비스가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경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 정보통신과 산업의 경쟁력

정보통신의 발달은  
교통수요의 상당부분을 대체하여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채워줄 뿐 아니라,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情報通信基盤施設은  
어느 사회간접자본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수성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62년 이래 여섯 차례의 5개년계획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開途國의 맹렬한 추격과 선진국의 閉鎖的 技術保護主義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제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賃金의 급격한 상승,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기술낙후 등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일은 이제 焦眉의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국내 각종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데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으나 情報化는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정보통신 정보통신의 하부구조는 새로운 社會間接資本으로서 사회·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원료산지로부터 부품공장까지, 부품공장에서부터 조립현장까지, 생산공장에서부터 시장을 거쳐 소비자 가정까지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같은 정보통신시스템은 상품이 불필요하게 창고·도로·항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물류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완화해 준다. 또한 정보통신은 도로·항만·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 현재 겪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교통수요의 상당부분을 대체하여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채워줄 뿐 아니라,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情報通信基盤施設은 어느 사회간접자본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63년부터 82년 사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신서비스에 1달러를 소비할 경우, 교통비용은 1.64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다(〈표 1〉 참조).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보급된 팩시밀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전화와 같은 基本通信部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동전화나 위성통신, 데이터통신 등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高度情報通信部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연간 使用便益(팩시밀리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에 의존할 경우와의 차이)은 81억6,900만원에 달하며, 팩시밀리의 사용에 따른 도로 교통량의 감소로 절감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전화나 데이터통신 등 기타 통신의

편익까지 포함하면 그 총규모는 엄청난 수치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도로·항만·철도시설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情報通信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 타사회간접시설을 분리하는 과거의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데, 兩者의 밀접한 상관관계 및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새로운 건설에 드는 엄청난 투자비를 생각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전체가 점차 정보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정보통신이 새로운 사회간접시설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므로 향후에는 정보통신과 도로·항만·철도 등의 사회간접시설은 반드시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통신의 산업별 교통대체효과<sup>1)</sup>

(산업전체 평균 1.64 : 1)

산 업	효 과	산 업	효 과
부동산업	5.36	금융·보험	1.43
식품가공	3.57	인쇄·출판	1.41
유흥	3.37	농업	1.38
담배	2.01	비전기기계	1.37
건설	1.93	금속가공	1.36
자동차·장비	1.79	기타 운수장비	1.25
전기·전자장비	1.78	통신	1.23
운수·창고	1.73	기기제조	1.22
전기·수도·가스	1.63	화학제품	1.21
자동차수리	1.61	제지	1.15
기타 제조업	1.58	사업서비스	1.06
개인서비스	1.57	섬유	1.05
고무·플라스틱	1.54	가구	1.04
기타 서비스	1.53	피혁	1.03
도·소매업	1.52		

### 정보통신과 생산성 향상

정보통신은 인력수요를 절감하고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정보통신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경제·사회활동에서 시간과 거리를 크게 단축시켜 주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모든 산업활동을 效率化시킨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공장 및 사무실의 입지 비용이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되면 기업의 立地選擇 및 기업내부의 부서배치에 있어 공간적·경제적 제약을 완화시켜 전체적인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註 : 1) 미국의 각 산업에서 통신서비스에 1달러를 소비할 경우 교통과 인력에 드는 비용의 절감효과

자료 : DRI, *The Impact on the New Jersey Economy of Telecommunication Network Modernization*, 91. 2.

정보통신은 기업간 및 기업내부의 정보교환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관리·판매 관련 계획 및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고, 생산요소와 자원의 사용 및 在庫管理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산업사회는 흔히 규격화된 상품의 대량생산·대량소비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생산과정을 분화하여 전문화하고 반자동 조립라인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량생산체제는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개성화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통합된 일련의 생산과정 중 일부

에서 근로자의 파업이나 기술적 결합 등으로 야기되는 부분적인 생산 차질은 생산라인 전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을 통한 생산체제의 柔軟化는 급격한 시장변화 및 생산여건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부품공장-생산현장-R&D센터-시장을 연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생산에 반영하는 신속한 반주문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애프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

여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베네통'이라는 의류업체가 의류업이 絛陽産業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비자의 기호를 즉시 파악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생산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을 통한 전체적인 생산체제의 柔軟化 및 관리통제의 自動化는 예기치 못했던 생산라인에서의 사고나 결함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실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63~82년 사이에 통신에 대한 수요는 167%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융·보험 등 서비스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여 서비스분야가 전체 통신수요증가의 74.5%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중 미국 기업의 통신활용 확대는 똑같은 量과 質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으며(〈표 2〉 참조), 실제 측정된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의 절감규모는 총 81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통신이 미국 산업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정보통신기술은 또한 요소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광대하여 동기술의 발달은 타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현위치

이와 같이 정보통신은 산업전반의

〈표 2〉 통신에 의한 산업별 생산성 증대효과

(단위 : 백만달러, 90년 경상가격)

업종별	총 비용절감	정보생산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	정보이용의 확대에 의한 비용절감
도·소매	18,026	480	17,545
건설	9,631	766	8,865
기타 서비스	4,381	25	4,357
개인서비스	3,938	-92	4,030
금융·보험	2,702	218	2,483
전기·전자장비	2,498	-284	2,782
사업서비스	2,425	75	2,350
부동산	1,814	63	1,751
자동차수리	1,441	337	1,104
운수·창고	1,336	-11	1,348
전기·수도·가스	1,283	392	891
기타 제조	8,709	323	8,386
비 통신부문 소계	53,696	1,738	51,958
통신부문	27,590	44,754	-17,165
경제전반 총계	81,286	46,493	34,793

註 : 63~82년 사이 정보·통신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별 비용절감(90년 경상가격) 효과

자료 : DRI, *The Impact on the New Jersey Economy of Telecommunication Network Modernization*, 91. 2.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80년대에 통신 부문에 많은 財源을 투자하여 전국 전화를 廣域化하고 1가구 1전화시대를 실현하였으며, 91년말 현재 시설 수 1,750만여회선, 가입자수 1,457만명으로 세계 8위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100인당 전화 가입자수도 81년의 8.1명에서 34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병행하여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를 자체 개발하고, TDX(전전자교환기)를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화와 같은 基本通信部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동전화나 위성통신, 데이터통신 등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高度情報通信部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동남아의 경쟁상대국인 대만·싱가포르 등에도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년 현재 100인당 전화회선수나 전신·전화서비스 매출액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정보통신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 즉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통신부문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작게는 1.5배에서 크게는 5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보급대수, 1인당 데이터통신 매출액, 1인당 정보처리서비스 매출액 등으로 표시되는 고도정보통신부문은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여 그 격차는 13배에서 54배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통신이나 정보처리 등 고도 정보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경우에는 53.4%, 일본의 경우에는 41.2%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1.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기본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일본·영국·서독 등 선진국의 70년대 중반, 미국의 60년대초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쟁상대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에게도 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은 지난 80년대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정보통신부문은 아직도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도정보통신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수준에 대한 평가의 차이 때문인지 정보통신에 대한 投資擴大를 꺼리는 시각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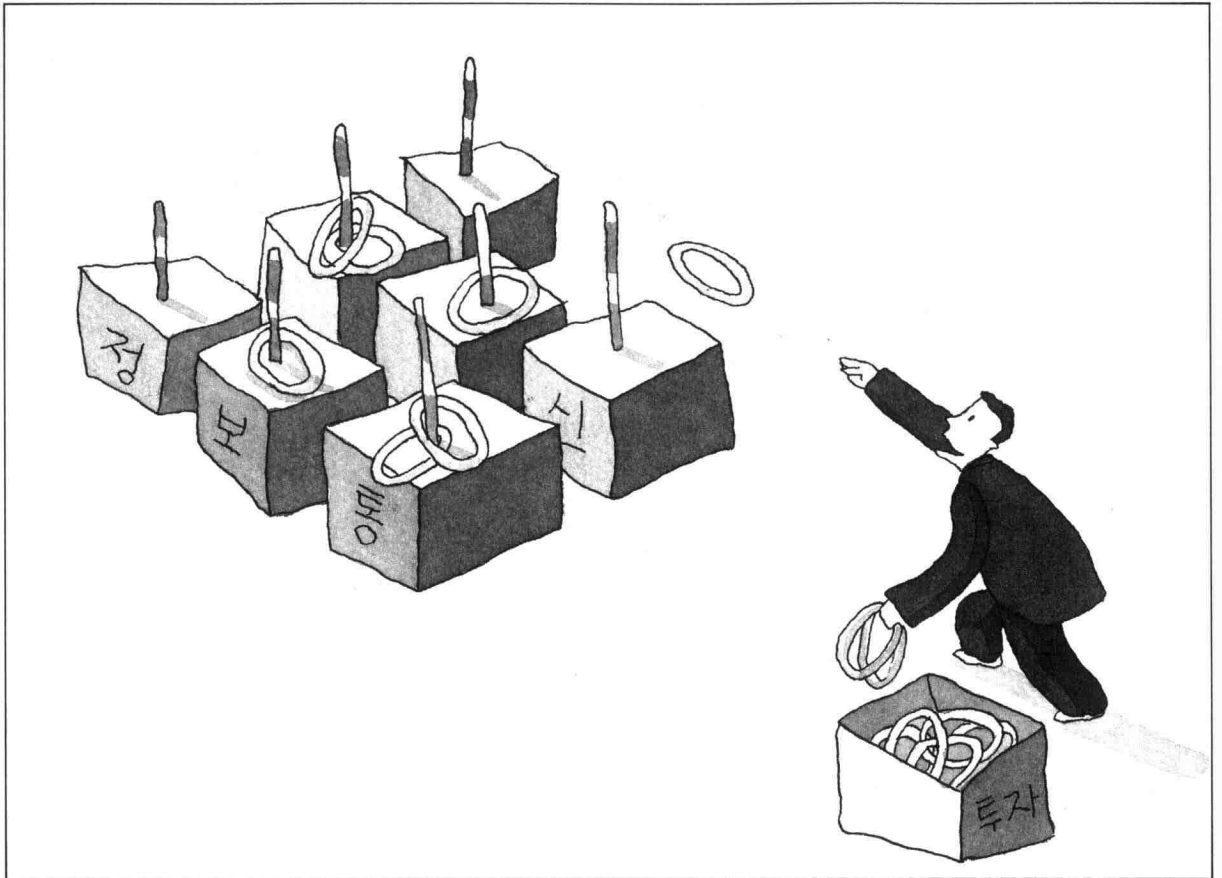
그것은, 정보통신부문이 지난 80년대를 통하여 타산업 및 사회부문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정부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산업 및 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부문보다는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산간벽지, 낙도에까지 이미 훌륭한 DDD전화 시설이 갖추어진 통신부문에 대하여 더 이상 대규모 국가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무리라는 논리를 편다.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이러한 견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정보통신부문의 역할에 대한

〈표 3〉 韓·美·日の 정보통신 비교

		한국	일본	미국
기	100인당 전화회선수	100	157	214
본	1인당 전신전화서비스 매출액	100	410	507
고	100만명당 범용컴퓨터 보급수	100	1,306	4,216
	1인당 데이터통신 매출액	100	1,780	3,005
도	1인당 정보처리서비스 매출액	100	3,269	5,433

註 : 1988년 한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일본의 지수  
 자료 : 통신개발연구원



바른 인식의 부족과 정보통신에 대한 확고한 政策目標가 정립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통신은 전화 등 기본통신이 전 부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도 문제이고, 과거 정보통신부문의 발전방향을 타부문의 발전과정과 종합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고립된 좁은 시각에서 국지적인 정책목표만을 추구하여온 기존 정책담당자의 책임도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보통신부문의 ①사회적 기반 시설로서의 정보통신 ②경제활동의 기본골격으로서의 정보통신 ③정보 사회의 신경체제로서의 정보통신 등

과 같은 정보통신의 제특성을 감안 하여, 앞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정보통신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 즉 정보통신 기반구조와 他사회간접시설과의 연계 발전 및 정보통신기반구조의 이용·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집중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에 겪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지

난 80년대에 나타난 폭발적인 자동차의 보급과 流通物量의 폭증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대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의 과감한 통신분야 투자로 기본통신수요를 겨우 만족시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사회 및 산업의 정보화추세로 엄청나게 불어날 고도정보통신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한 채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과거 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경험에서와 같은愚을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 정보통신기술 개발대책

우리나라의 情報通信 기술수준은 아직도 先進國에 비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통신기술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창출을 위한 基礎·基盤기술의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창환  
체신부 통신진흥과장

情報通信産業은 고도성장이 예측되는 기술집약산업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모든 산업의 기반구조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世界 선진각국은 다가올 고도 정보사회에서 자국산업의 國際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核心기술의 해외이전 기피현상과 함께 기술보호를 위한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분야는 광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등 혁신적인 尖端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확산되고 있으며, 유선과 무선, 통신과 컴퓨터가 결합하여 기술이 복합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기술壽命은 날로 짧아지고 있으며, 국가간 그리고 기업간의 기술개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민간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첨단 기술개발을 선도해온 미국은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情報通信분야의 기술개발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통신과 반도체분야에서 첨단기술 開發能力을 과시하고 있는 日本은 NTT 산하의 연구소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기초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EC는 RACE, ESPRIT, EURECA 사업 등 域內 국가와의 공동개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美·日과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情報通信 기술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도 그동안 情報社會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통신시설을 대

량으로 확장하고,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먼저 정보사회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제5차(82~86) 및 제6차(87~91)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매년 100만회선 이상의 電子交換 시설을 공급하는 등 현대화된 통신시설을 대량 확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화시설수는 91년말 현재 1,700만회선을 넘어서 이제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80년대 들어와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研究開發投資를 적극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술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통신사업자의 투자비도 절감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개발정책에 힘입어 통신과 컴퓨터·반도체 등 몇가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實用化에 성공한 技術開發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전자교환기인 TDX를 개발하여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 주력기종으로 400만회선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최근에는 10만회선급 전전자교환기인 TDX-10을 최초로 개통한 바 있다.

둘째, 광전송장치를 개발하여 전국 通信網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광통신시스템기술의 국내 자립을 이루었다.

셋째, 行政電算網用 주전산기를 개발하여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핵심설비를 우리 기술로 개발 공급하였다.

넷째, 4M DRAM, 16M DRAM

등 기억소자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TDX, 광통신장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Custom VLSI도 개발하여 반도체기술 확보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능력이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조직·인력·재원으로 말미암아 극히 제한된 분야만 연구를 추진하여 무선통신·데이터통신 등 새로운 고도통신분야의 연구는 취약한 상태에 있고, 시스템기술도 선진 외국 기술의 소화·개발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에 관한 研究開發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기술분야·컴퓨터분야·소재 및 부품분야의 기술수준을 先進國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通信技術分野에 있어서는, 우리가 音聲 위주의 전자교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선진국은 데이터교환이나 ISDN 교환기술을 이미 실용화하고 있고, 광통신분야도 우리가 565Mbps급 비동기식을 확보하고 있는 데 비해 선진국은 수Giga급 동기식 광전송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다. 또한 衛星通信이나 移動通信 분야는 극히 취약한 데 비해 선진국은 이러한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는 개인용컴퓨터·소프트웨어 및 重型級 컴퓨터의 조립 생산단계인 데 비해,

선진국은 이미 슈퍼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人工智能 컴퓨터도 상당수준 개발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제 개발착수 단계이며, 소프트웨어도 선진국은 자동생산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는 수작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素材 및 部品分野에 있어서는, 반도체 논리소자나 주문형 VLSI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초보단계이며, 光素子 등 첨단소재 및 부품기술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情報通信 기술개발정책 추진방향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情報通信 기술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통신기술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창출을 위한 基礎·基盤기술의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1세기 高度情報社會의 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로 96년까지 OECD 중위권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로 2000년까지는 G-7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研究開發推進이 미흡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移動通信·휴대전화·衛星通信·고성능 컴퓨터 등 취약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기술, 지능망시스템 그리고 복합형 통신처리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소재와 Custom VLSI, 광소

자, 신경회로망기술 등 기초기술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源泉기술 확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기술 부족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이동통신기술의 조기 자립을 위해 89년부터 94년까지 장기적 移動通信 기술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계획을 96년까지 韓國 電子通信研究所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91년말 계획을 보강하여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과 단말기 개발을 94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아날로그 방식의 초소형 휴대용 단말기와 부품개발을 추가하고 연구비도 7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금년에는 기업체를 참여시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제2사업자 허가를 계기로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으며, 국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산 제품의 안정된 내수기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先進國과의 쌍무적 기술협력을 통한 尖端기술의 국내이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政府에서는 研究조직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연구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능별로 특성화시켜 부족한 연구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기능의 대폭 확대

첫째, 韓國 電子通信研究所와 통신사업자의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통신사업

政府에서는 研究조직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연구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능별로 특성화시켜 부족한 연구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의 공통·기반기술을 연구하는 공동연구소와 같이 운용되도록 해서 세계적인 첨단기술연구의 산실로 육성할 것이다. 96년까지 현재 1,600여명의 전자통신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약 1,9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박사급 연구원도 현재 150명 규모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1인당 연구비도 世界 尖端研究所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0년대를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를 감안할 때 통신사업자 연구조직의 대폭 확충이 불가피하며 연구기관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4개에 불과한 통신사업자 연구소를 96년까지 5개를 더 설립하여 9개로 늘리고 또한 1,200여명 수준의 연구인력도 96년까지 3,1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기관간 기능의 재정립

둘째, 이렇게 확대되고 다원화된 연구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은 현재 제품기능 구현 위주의 응용기술 연구기능을 개편하여 기술의 짝과 제품의 짝을 띄우는 기초기술과 제품구

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반기술 연구에 주력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의 공동연구소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통신사업자 연구소는 政府 出捐研究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응용기술과 운용기술연구에 주력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연구소는 應用 技術개발연구와 商用研究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연구소는 기초기술 창출과 학문적 원천기술 연구에 주력토록 할 것이다.

한정된 研究資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국책과제에 대한 研究企劃, 관리 및 평가기능 등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 우수연구인력의 양성

셋째, 優秀研究人力の 양성을 위한 계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대폭 증원한 바 있으며 情報通信 관련 대학원도 현재 600명 수준을 9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이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양성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電波工學科 등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실습기자재 구입 및 장학금지급 등 연구 지원에 95년까지 총 7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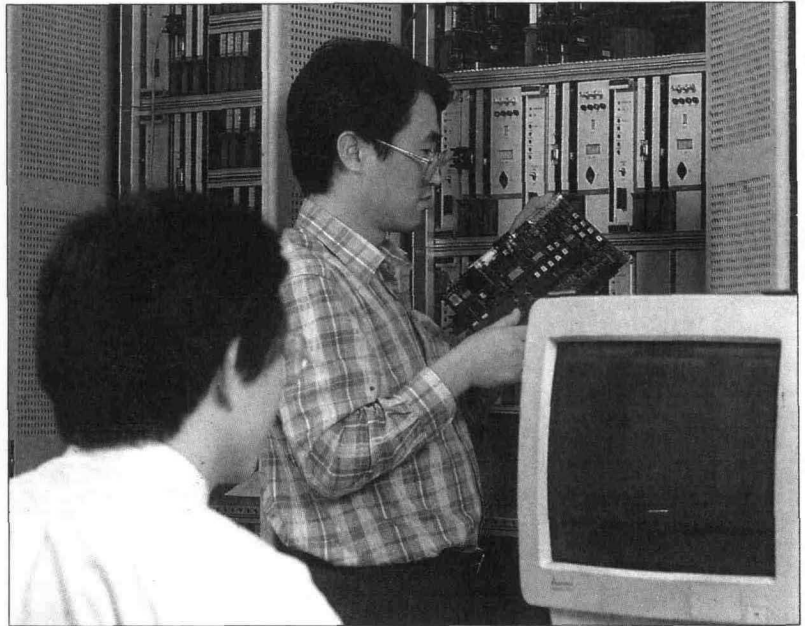
### 연구개발투자비의 지원 확충

넷째, 研究開發 投資費를 안정적으로 확충 지원할 방침이다. 96년까지 우리의 技術水準을 OECD 중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기술은 물론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기술수요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도성장기 예상되고 국내기술이 취약한 無線通信부문과 데이터通信부문의 연구개발 수요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8월 電氣通信基本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공동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개발에 투자 또는 출연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해서 情報通信研究開發에 관한 法律 제정을 계기로 한국통신의 정부주식 배당금 및 통신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93년까지 1천억원의 정보통신 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사업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의 현대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앞으로 96년까지 총 1조 6,500억원을 그리고 2001년까지는 약 5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 국제협력 강화

다섯째, 연구조직 확충이나 優秀



人力的 양성과 병행하여 國際間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협력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기술표준화 활동에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통신분야의 기술표준화는 CCITT와 CCIR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역표준화기구인 美國 T1 위원회, EC의 ETSI, 日本의 TTC 등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활동도 매우 활발한 편이

다. 우리도 韓國通信技術協會(TTA)를 중심으로 CCITT/CCIR 활동 외에도 이러한 지역표준화 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研究所의 기술개발과제를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구원의 교류 등을 통한 공동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생산 기술과 先進國의 基幹技術개발능력을 결합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라

〈표〉 研究開發 투자계획

(단위: 억원)

	92	93	94	95	96	계
ISDN, 지능망	204	214	210	258	289	1,175
교환기술	328	348	340	429	481	1,926
위성, 이동통신	439	514	610	543	614	2,720
컴퓨터기술	220	230	230	308	342	1,330
S/W기술	500	700	1,000	1,200	1,495	4,895
반도체기술	150	150	160	220	270	950
기 타	678	573	636	802	944	3,460
계	2,519	2,729	3,195	3,760	4,435	16,456

특  
지  
구  
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의 육성대책

VAN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반구조로서,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산업부문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산업부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영보

체신부 정보통신업무과장

최근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융합·발전과 함께 등장한 정보통신은 국가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적용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VAN(Value Added Network :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은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처리하며, 임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러 곳에 분포된 각종 정보가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한다. VAN은 산업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부문이다.

## VAN사업의 육성 필요성

VAN은 그 특성상 국가사회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생산부문에서는 LAN, MIS, SIS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간 및 기업내부의 정보교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양질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생산·관리·판매 등의 계획 및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간 무역에 있어서도 EDI에 의한 거래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VAN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자료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전산망에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예입·인출하는 홈뱅킹 또는 펌뱅킹(firm banking), 백화점 계산창구에 설치된 컴퓨터단말기를 통



해 고객이 구입하는 물건의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在庫를 파악하여 적기에 물품조달 요구를 거래처에 보낼 수 있는 POS시스템, 항공예약시스템, 호텔예약시스템 등과 같은 각종 예약시스템이 VAN을 활용하여 국민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처럼 VAN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반구조로서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산업부문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산업부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및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국제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VAN사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VAN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용될 수 있고 국제간의 VAN서비스의 이용은 그 경제적 효용 가치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어 선진국들은 매우 적극적인 VAN시장 개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약화된 산업경쟁력 회복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韓·美간 통신회담 등에 의해 VAN시장이 자유화되고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 VAN사업체들은 외국기업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면서도, 국내적으로 많은 VAN사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정부에 보다 획기적인 VAN사업 육성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국제간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VAN사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VAN사업의 현황 및 전망

#### VAN사업현황

VAN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단순 DB/DP 등과 같이 타 인통신의 매개가 없는 경미한 부가통신사업외의 VAN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체신부는 VAN사업 등록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지난 3월에 등록업무 중 신청서류의 접수 및 등록증 교부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VAN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체신부는 협회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서류심사 및 現場實査를 하고, 해당업체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면 협회를 통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특히 국제VAN업무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와의 협정체결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체신부는 국제VAN업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91년 7월에 국제VAN업무협정 승인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가통신사업자는 91년말로 210개 업체에 달하며 이중 DB/DP업체가 180개이고 VAN(협의의 VAN)사업자는 30개로서 이들은 데이터단순전송서비스, 거래서식교환(EDI), 전자사서함(E-Mail),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처리(DB 및 DP) 등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 VAN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주)에스티엠, (주)아시아항공, 삼성데이터시스템(주) 등이 각각 미국의 EDS, ABACUS, 일본의 IBM Japan과 국제 VAN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원격정보처리(RCS), 항공예약서비스(CRS), DB 및 DP, 전자사서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조사·분석한 정보통신사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산규모는 전체응답업체의 67.5%가 50억원 미만으로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규모는 응답업체의 48.6%가 5억원 미만, 32.4%가 5억원~30억원 미만으로서, 정보통신업체의 과반수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 정보서비스보다는 전문화된 분업적 정보제공 또는 특정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업체들의 시장참여가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91년말 현재 정보통신사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2,11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중 DB/DP 시장이 1,892억원이고 좁은 의미의 VAN시장규모는 2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VAN사업 육성정책을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창의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반인들이  
VAN서비스를 언제·어디서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VAN사업의 발전전망

향후 VAN사업은, 행정·금융·교육·연구부문 등에서 국가기간전산망이 성공적으로 구축·확대운영되고,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이 활성화되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사회전반의

〈표 1〉정보통신시장 전망

(단위 : 억원)

	91	92	93	94	95
국내	450	628	877	1,224	1,708
DB					
해외	160	224	313	437	610
소계	610	852	1,190	1,661	2,318
D P	1,282	1,790	2,498	3,486	4,865
VAN	218	304	424	592	826
계	2,110	2,946	4,112	5,739	8,009

자료 : 한국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사업의 환경분석 및 시장전망」, 90. 1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실태조사」, 91. 10

〈표 2〉부가통신사업자 수(누계)

(단위 : 개소)

	91	92	93	94	95
DB/DP	180	220	280	370	420
VAN	30	50	80	120	150
계	210	270	360	490	580

자료 : 체신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정보통신부문), 91. 12

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210개에 머물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수도 매년 28.7%씩 성장하여 95년도에는 58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VAN시장의 개방화를 앞두고 이에 대비하여 국내 VAN사업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대외개방에 대비한 VAN사업 육성대책

지난 2월에 있었던 한·미 통신회담에서 한·미간의 주요현안이 대부분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VAN사업은 단계적인 환경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회담결과 미국은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서비스분야의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전용회선 공동사용범위 확대와 전용회선과 공중망의 접속 등 전용회선사용제도를 92년말까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공정경쟁보장을 위한 통신망공개규정 제정 및 세부시행일에 대해서는 92년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국제 DB, RCS 등록제도 유지여부는 93년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계획표(Offer List)에서와 같이 94년 1월에 VAN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폐지기로 함으로써 VAN시장에서의 국내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

상 및 한·미 통신회담을 통하여 높아지고 있는 개방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VAN사업의 육성을 위해 VAN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VAN사업의 수요 기반이 되는 각종 정보화시책과 공급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VAN사업 육성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VAN사업의 수요기반 진작

첫째, VAN사업의 수요기반 진작을 위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확충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 정보통신단말기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정보문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5년에 걸친 1단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올해부터 2단계사업으로 국민복지·우체국 종합서비스·해상화물 관리업무 등, 7개 기관의 7개 업무를 신규로 착수하고 은행전산망의 확대와 함께 증권·보험·투자금융 전산망의 구축을 촉진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을 추진할 것인바, 전국의 전화국과 우체국을 활용한 지역정보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지역별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수용태세를 반영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의 정보화시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자금과 기술지원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00년까지 1가구 1단말기시대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 부문에서 300만대, 민간부문에서 700만대의 정보통신단말기를 보급토록 하여 총 1천만대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단말기보급과 IP/DB의 개발, 효율적인 통신망의 구축, 그리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요금과 법령제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여 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정보통신산업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문화 교육활동을 강화하며,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확대 양성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지원 확대

둘째,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형식승인제도와 국가표준 적합한 정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산기기의 판로를 확대하고, 60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출연과 함께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중형컴퓨터 개발보급을 위해서는 주전산기Ⅱ의 수요를 확대하여 올해 공공기관에 100대(250억원 규모)를 보급하고, 전문인력양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올해중에 고속중형컴퓨터인 주전산기Ⅲ의 시스템 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산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전문 리스회사 설립문제는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투자하여 초기자본금 200억원 규모로 올해 하반기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 아래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는 수요예보제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유통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소프트웨어 기반기술개발에 65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산망사업자를 위해서는 4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융자·출연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업화 애로기술이나 시급한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여 금년에 35개 과제에 140억원을 출연하며, 국책연구개발과제에도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도적 지원과 자금지원 병행 추진 셋째, 부가통신사업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자금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데이터단순교환 및 전송서비스, 국제 VAN사업에까지 확대하였으며 기존 통신망의 확장을 서둘러 패킷교환망을 47개지역에 1만 5,083포트로 확장하였다. 또한 새로이 음성정보 전용망(700망), 축적전송팩스 전용망 및 고속회선 교환망을 구축하여 지방도시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음성정보 전용망을 이용하여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를 위하여 통신공사로하여금 음성정

보 이용료를 징수대행케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의 노력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정보제공업(IP/DB)과 VAN사업으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IP/DB사업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과 검색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제도의 확대와 데이터베이스 검색용 통신회선요금의 조정과 함께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DB 기술개발을 위해 제조업경쟁력 강화자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총 50억원을 융자·출연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IP/DB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중에 수립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VAN사업을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통신회선요금 감면대상을 넓히며 대량이용자 할인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의 공정경쟁제도를 마련하여 서비스 품목의 세분화, 회선제공의 신속화 및 회선품질보장, 회선이용상의 규제 최소화 등 전기통신회선 설비의 임차조건을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직분리 또는 회계분리 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VAN사업자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자금을 융자·출연토록 할 계획이다.

## VAN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

정부는 이와 같은 VAN사업 육성정책을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반인들이 VAN서비스를 언제·어디서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VAN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 정보통신시스템들이 사회제반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VAN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통신이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제화가 가속적으로 진전되어 세계 각국이 오늘날보다 더욱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될 것인데, VAN은 이러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은  
독점사업 체제에서 민간부문의 활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다수 사업자 경쟁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통신사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상국  
한국통신 경영기획실장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2년에 설립된 한국 통신은 그간 만성적 전화체제의 완전해소, 전국 광역자동화의 완성이 라는 2대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외에 지속적인 시외전화요금의 인하, 요금거리 단계의 축소(8단계 →3단계), 전신전화 채권의 폐지 등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국제자동전화의 개통, 음성정보 서비스, 카드공중전화 보급 등 서비스 다양화와 전자교환기 도입, 광통신 시스템의 구축 등 통신시설의 고도화에 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80년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신사업의 일대 변혁기였다. 미국·영국·일본 등 통신선진국은 통신사업 자유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은 ATT 분할, 영국은 BT-MERCURY 복점, 일본은 시내전화를 제외한 전 영역의 경쟁을 도입하였고 특히 미국은 통신사업자의 세계진출을 위해 각국의 국내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정보의 조직화, 정보이용 체제의 정비가 크게 요구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내통신시장 개방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은 독점사업 체제에서 민간부문의 활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다수 사업자 경쟁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통신사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한국통신의 역할

### 정보사회 기반의 구축

90년대는 2000년대 고도정보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동안 한국통신은 정부의 통신정책을 구현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사회의 기반구조(infrastructure)인 정보통신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경쟁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이 채산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경영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반 시스템의 구축·연구개발·수요개발 등 정보사회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범국가적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되거나, 통신망이 사업자별로 구축됨으로써 기술적 통일성·품질의 균일성·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져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곤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통신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국민 모두가 공동활용하는 공유재산적 특성을 갖는 基幹 통신망의 지속적 확충과 고도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둘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개발기술의 국내 확산 보급을 실천함으로써 기술혁신의 급진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성이 높고 초기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로서 대중적이고 보편적 이용이 기대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도 한국통신이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통신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라 함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통신망에 가입시킨다는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통신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농어촌과 같은 채산성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설비투자 규모는 막대한 데 반하여 그 지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으므로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자는 그러한 지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신·전화 등 기본서비스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역할은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한국통신은 소득계층간·지역간 통신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적체 해소, 광역 자동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시외전화 요금의 거리단계 축소, 저소득층에 대한 설비비 분납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경쟁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결코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공정경쟁을 통한 통신산업 활력의 극대화

공정경쟁의 확보에 있어서의 한국통신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통신의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사실 외에도 새로운 사업자는 한국통신의 공중전화망과의 접속을 통하여 사업영위가 가능하고 또한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에 관한 정보·노하우 등이 사업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은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의 場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힘을 자제하여야 하며, 시장 지위가 취약한 신규 사업자의 육성에 부응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 한국통신의 경영전략

### 정보통신 시장의 여건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은 연평균 10~15%의 高成長을 보이는 반면, 세계 경제는 2~3%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국내통신 시장도 규모면에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며, 특히 고도통신 분야가 크게 성장함으로써 시장구조가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통신인 전화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150~200만 회선 정도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고, 2000년대에는 100인당 전화보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분야는 현재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연평균 30~40%의 성장이 기대되며 2000년대 총시장 대비 30% 정도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 시장의 성장은 한국통신에 커다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편승할 수 있다면 2000년대 세계적인 종합통신 사업자로의 변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91년 12월부터 개시된 국제전화 부문의 경쟁은 한국통신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개시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금년 2월말 현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일본·홍콩의 국제전화시장이 30%까지 잠식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경쟁이 시작되어 2년 이상 경과해야 신규사업자가 10% 내외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의 시장잠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에는 경쟁이 보다 확대될 추세인데, 국제전화 부문에서와 같은 추세로 수익상실이 일어난다면 90년대의 한국통신 기업경영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통신의 고수익 사업부분은 경쟁에 노출되어 수익감소 규모가 거대하고, 시장잠식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곤란하며, 경쟁의 격화로 이익률까지 크게 감소되는 3重苦를 치르게 되는 데 반하여 시내전화·전신 등 적자 사업부분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성장으로 사업기회는 크게 신장될 것이나, 기본통신 부문에서의 수익상실로 90년대 한국통신이 수행해야 할 公的 역할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정보통신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90년대는 2000년대  
고도정보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동안  
한국통신은 정부의  
통신정책을 구현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사회의 기반구조인 정보통신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여건들은 한국통신의 기업 생존 차원에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차원에서,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의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전략 경영계획의 수립과 KT2000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한 바 있다.

**기업 생존력 강화방안**

기업경영에 있어 수익구조가 주력 사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을 경우, 주력 사업의 실패는 기업 자체의 파탄을 초래한다. 한국통신은 주력사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 전화 일변도로 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미래 대응적인 관점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2000년대까지 주력사업 對 비주력 사업 비중을 7:3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화 이외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국제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도모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상황하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식 등 기업체질을 민영기업과 같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통신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권위주의와 비능률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보사회 촉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조직 문화를 형성하며, 기업변신을 위해 단행한 사업부제 조직을 실질적 민간기업형 사업부제 조직으로 조기에 정착시켜 경쟁환경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사업경쟁력의 제고**

**■ 정보통신 사업의 내실화**

기본통신 사업은 한국통신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중요한 부문이므로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내실화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개발, 고장감소, 소통향상 등 운용보전 기능 강화로 이용량을 증대하고, 인력의 전환 및 조직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원가 절감을 위한 업무의 합리화·전산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전화 부문, 회선사업 부문 등 경쟁이 개시되었거나 임박한 부문의 상대적 경쟁력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품질향상·다양한 이용제도·요금제도 도입 등 신규사업자와의 요금 격차에 의한 약점을 보완하고, 통화성향 분석 등을 통한 표적시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이다.

**■ 정보통신 사업의 확립**

정보통신 사업은 아직 시장이 크지는 않으나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성도 높아 미래형 사업으로서 한국통신의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통신은 연구개발 부문의 강화와 투자확대, 정보통신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2000년대 정보통신 사업의 비중을 적어도 15~20%까지는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중 PC통신 등 대중적 정보통신 서비스와 CO-LAN, 基幹VAN 등 산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등 공익성이 짙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 통신망의 고도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국내외 새로운 사업자와의 경쟁상 우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체제의 조기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통신은 전화망·패킷망·고속회선 교환망·위성통신·기간 광전송망의 확충 등 전국적 디지털 基幹 전송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내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지역 정보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복지 통신사회 실현을 위해 음성·비음성·영상정보가 동시에 서비스되는 꿈의 통신망인 ISDN의 구축을 강력 추진하여 94년부터 商用化하고 2000년대에는 광대역 ISDN을 구현할 것이다.

한편 경제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맞추고 동북 아시아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국제통신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통신망의 다원화와 외국과의 다양한 접속을 실현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와 고도 통신

한국통신은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의 場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힘을 자제하여야 하며, 시장지위가  
취약한 신규 사업자의 육성에  
부응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외 경쟁력의 강화

세계 첨단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에서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와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에 소요되는 기술의 자립화와 기술개발 수준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한국통신은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를 극복하고 G7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2001년까지 매출액의 6%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大容量 디지털 교환기, 초고집적 반도체, ATM 교환기술, G bps급 광통신 시스템 및 CATV시스템 등 핵심 기술의 국내개발을 서두르고 이를 수행할 전문 연구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내 통신시장의 대외 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선진국에 의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과점화 경향으로 90년대에 세계 기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지 않으면 한국통신은 영영 그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한국통신은 세계속의 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내시장 지향의 경영체질을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고, 세계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위험 감소책을 강구 시행하며 세계 우수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제휴 등 국제 분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보편적 서비스 제공전략

####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

90년대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을 전화 등 기본통신 서비스 외에도 대중적 정보통신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도 조국통일에 대비 한반도 전체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우선 90년대는 2000년대의 고도 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모든 국민,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단말기를 무료 보급하거나 이용자가 既 보유하고 있는 PC를 값싸게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2006년에는 정보통신 단말기를 1천만대까지 통신망에 접속시킴으로써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누구나, 어느 때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 조국통일에 대비

90년대 우리나라는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등으로 남북 주민의 통신

교류 현실화는 물론, 통일기운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남북간의 통신격차 해소가 정책과제로 전면에서 부상하게 되었다.

북한의 통신사정을 보면, 전화시설이 대략 80만회선 규모로서 이는 남한의 1,750만회선에 비해 약 5%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통신시설을 95년 남한의 수준(100인당 보급 45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천만회선의 통신시설과 이를 감당할 만한 관련 통신망 구축, 局舍建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은 통일에 대비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고 경제체제의 융화를 선도할 수 있는 통신망의 단계적인 구축 방안과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재원의 조달

90년대 한국통신이 보편적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통신 서비스 확보 및 유지와 미래 정보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재

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 통일에 대비한 남북 통신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도 조달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러한 투자재원의 규모는 실로 막대하고 어느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통신은 수익사업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수익 잠식으로 재원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하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본통신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부문의 상대적 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고 원가에 기초한 통신요금의 실현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조국통일시 북한지역의 전화부문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만도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이북지역에 대한 막대한 투자부담으로 인해 국가전체의 통신망 고도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도 많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비하여 소요자금 조달방안과 투자계획 수립시 고려해


야 할 원칙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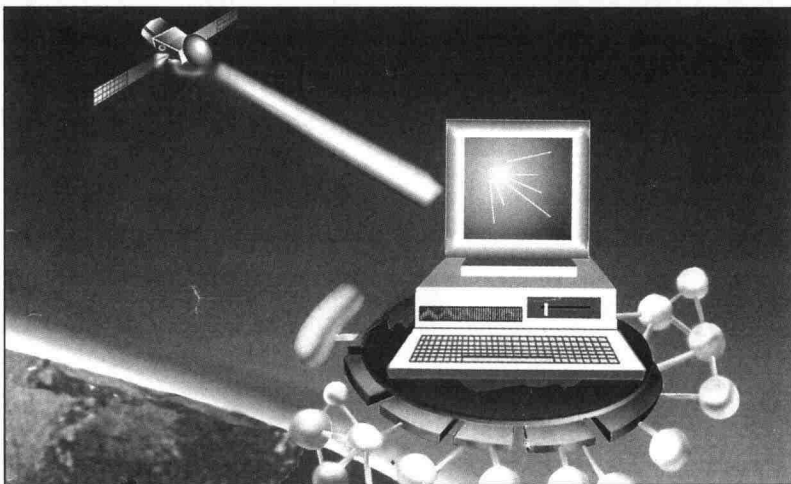
### 21세기에 세계적 종합통신사업자로 도약

한국통신은 90년대의 도전과 대응을 거쳐 21세기에는 세계정보통신 업계에서 '주요서비스 및 기술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최상의 사업협력자'로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종합통신사업자로서의 위치를 굳혀나가고자 한다.

우선 고객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를 가격·품질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수요가 큰 주요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첨단기술을 적용한 음성·데이터와 영상서비스가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통신망을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고객 집단의 서비스 욕구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응하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은 세계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려는 노력을 통해 최상의 고객서비스 기술, 운용기술을 채택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고 나아가 한국통신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해외 진출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국민기업으로서, 정보화 시대를 촉진하는 환경조성과 세계수준의 통신 하부구조 구축 등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임무 수행에 정성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영웅인 사업의 영웅체제 도입

# 국제전화사업에의 경쟁도입

데이콤의 국제전화시장 진입은  
80년대 들어 급변해온  
국내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단행된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에서 비롯되었다.



박재천

(주)데이콤 전략기획본부장

지난해 12월 3일 데이콤이 국제전화서비스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다. 데이콤의 국제전화시장 진입은 80년대 들어 급변해온 국내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단행된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에서 비롯되었다. 통신사업구조조정の内容은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확정하고, 우선 국제전화부터 複占형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제전화사업 경쟁도입 발표후, 정부는 데이콤이 그간 데이터통신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통신사업의 조기경쟁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데이콤을 국제전화 경쟁사업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콤은 90년 8월 국제음성통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정부에서는 10월 22일 전기통신기본법(구법) 제8조에 따른 통신사업 업무영역 조정을 통해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였고, 90년 12월 서비스제공 및 장비설치를 승인함으로써 국제전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데이콤의 국제전화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성공리에 추진되어 통신사업의 타 부문 경쟁도입에 일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기상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추진과정과 서비스 개시후 나타난 경쟁도입 효과 그리고 경쟁정착화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데이콤의 국제전화서비스 추진과정

신규사업자로서 데이콤은 그 동안 통신사업을 독점경영하여온 한국통신이란 높은 벽과 운영상의 경험부족 등 제반환경의 불리함을 안고 국제전화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 같은 후발사업자의 절대적인 열세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만회하고 소비자에게 안정된 국제통화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90년 11월 국제전화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 데이콤은 영업부문의 보장을 목표로 우선 시장조사를 실시, 10% 요금격차시 85%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와 일단 자신감을 얻은 후 대기업·호텔·대도시지역 순으로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국제전화 마케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영업사원에 대해 국제전화 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활동준비를 서둘렀다. 이와 함께 TV광고·가두캠페인·현수막 설치·연고판매 등 경쟁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광고·판촉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데이콤은 한국통신보다 자금 및 설비가 절대부족하고, 후발사업자로서 초기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한국통신보다 5% 저렴하게 책정된 요금안을 제출, 체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이 요금구조는 외국의 경우<sup>1)</sup>와 비교하여 볼 때 신규사업자를 위한 경쟁요금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차별화였으며 정

데이콤의 국제전화서비스의  
영업실적을 통해 볼 때  
국제전화시장의 경쟁도입은  
진입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제도에 들어섰다고 보여지며,  
이제는 도입된 경쟁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부의 과당요금경쟁을 우려한 결정으로 이해된다.

한편, 외국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데이콤은 국가별·사업자별 회선수요 산정 및 조정과정을 거쳐 우선 1단계로 AT & T(미국), KDD, IDC, ITJ(이상 일본), HKTI(홍콩) 등 3개국 5개 통신사업자와 91년 6~10월 사이에 협정을 체결했고, 11월 11일 협정안들에 대한 체신부승인을 거쳐 우선 이들 3개국을 대상으로 91년 12월 3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국제전화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모든 국내통신시설을 한국통신의 통신시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전화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 구간의 설비와 국내에서 모든 전화가입자를 연결할 수 있는 국내통신망이 필요한데, 국내의 통신사업은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한국통신의 국내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통신의 국내망과 데이콤의 국제망을 접속할 수 있는 제도(이를 '상호접속'이라 한다)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상호접속을 위한 협정은 기본협정과 세부협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는데, 기본협정은 한국통신과 약 1년 동안 6차에 걸친 협의·조정을 거쳐 91년 3월에 체결되었고, 세부협정은 기본협정 체결후 체신부의 업무지침 등을 통한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91년 10월에 체결됨으로써 기본적인 제도가 정립되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교환기간의 상호접속 외에도 데이콤은 국제전화서비스용 교환기와 미국·일본·홍콩으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국제해저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국내구간의 설비 또한 한국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어 양사간에 별도의 '설비제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개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제교환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데이콤은 국제전화서비스 교환장비로 미국 AT & T사의 최신기종인 No. 5 ESS를 선정하여 91년 6월에서 8월에 걸쳐 설치를 완료한 후 네트워크기능, 트래픽기능 등의 상세기능시험과 2차에 걸친 운용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호측정장비 도입 및 同期網구축 등을 완료하고 서비스제공 직전에 한국통신 및 해외사업자와 상호접속 신호시험을 거쳐 운용안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데이콤

1) 미국의 MCI, U.S. Sprint, 일본의 IDC, ITJ, 영국의 Mercury 등 국제통신분야 후발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초기 20%~30% 정도 기존 통신사업자보다 요금을 저렴하게 하였다.

은 91년 12월 3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국제자동통화서비스(국제전화 002)를 비롯, 직접접속서비스·요금즉시 통보서비스·제3자課金서비스·요금일괄청구서비스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경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표 1 참조).

### 국제전화 경쟁도입의 효과

국제전화시장 점유율 30%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3일 개통된 데이콤의 국제전화서비스는 5%의 요금차별화에도 불구하고, 91년 12월 한달 동안 미국·일본·홍콩과의 통

화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19.1%, 전체 국제통화량을 기준으로 할 때 11.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매출규모에 있어서는 이 기간중 국내 총매출액(추정치) 244억 2천만원 중 12.8%인 31억2,100만원의 매출(표 2 참조)을 기록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당초 목표를 밑도는 수치로서 기존시장의 장벽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1월중 데이콤 국제전화의 총통화수는 105만31호를 기록하는 등 전월대비 38.9%의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도 약 43억원으로 전월대비 38.8%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제공국

가 52개국 확대 등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목표인 전세계 통화량 점유율 15.8% 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측된다.

한편, 이용자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고, 복잡경쟁체제 아래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신규 서비스 및 상품개발, 요금의 저렴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경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한 예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제전화서비스, 전용회선을 이용한 국제직접서비스, 제3자 과금서비스 등 고객의 기호를 맞추

〈표 1〉 데이콤이 제공중인 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국제자동통화	데이콤 국제전화 002 (DACOM World Dial 002)	고객이 해외 통신상대방과 직접 다이얼하여 국제전화, 국제 FAX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직접접속통화	다이렉트 데이콤 (Direct DACOM)	데이콤 교환기에 고객의 PABX, 전화기 FAX 등을 직접 연결하여 국제전화, 국제 FAX를 이용하는 서비스
요금즉시통보통화	데이콤 국제전화 0031 (DACOM World Dial 0031)	고객이 국제통화 또는 FAX를 이용한 후에 해당 이용시간 및 요금을 즉시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제3자 과금통화	데이콤 국제전화 0033 (DACOM World Dial 0033)	등록된 특정의 전화번호에서 이용한 국제통화요금, FAX 요금이 별도로 지정된 다른 전화번호로 청구되는 서비스
신용카드공중전화	신용카드 공중전화 서비스	고객이 소지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데이콤이 설치한 카드공중전화기에서 국제자동통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요금일괄청구 서비스	국제전화 요금일괄청구 서비스	미리 등록된 복수의 전화번호에서 이용하는 국제통화요금을 특정전화 번호로 일괄 청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요금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서비스

〈표 2〉 데이콤의 국제전화 사업실적

(단위: 천불, 백만원)

		총시장		실적	데이콤 점유율(%)	
		전세계	3개국		전세계	3개국
91년 12월	통화호수	6,510	3,959	756	11.6	19.1
	매출액	24,420	-	3,121	12.8	-
92년 1월	통화호수	7,656	4,515	1,050	13.7	23.3
	매출액	33,883	-	4,331	12.8	-

註: 91년 12월 수치는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과임.

려는 신규서비스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이용자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고도화된 서비스에 접하다 보면 요금 및 서비스의 용도·질에 따른 민감한 수요변화를 보일 것이며, 사업자들 역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서비스개발에 전력하는 등 연쇄적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승작용은 단지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통신사업 전반에 걸친 체질향상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 경쟁체제 정착화 전략

데이콤의 국제전화서비스의 영업실적을 통해 볼 때 국제전화시장의 경쟁도입은 진입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제도에 들어섰다고 보여지며, 이제는 도입된 경쟁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데이콤입장에서 경쟁정착화를 위한 노력은 곧 데이콤 국제전화서비스를 본래도에 올려놓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데이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대상국의 조속한 확대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국 통신과의 대등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3개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92년 8월까지 유럽, 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52개국과 협정을 체결할 계획인데, 52개국과 연결되면 국내에서 발신되

**국제전화사업의 경쟁도입은 결국 국내적으로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국내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사업자의 체질강화 등 국제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는 통화의 99.6%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국제전화의 성공이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의 향상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신규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올해에는 故國交換員을 직접 호출하여 국제통화를 하는 고국교환원 직통통화서비스, 해외로부터 걸려오는 국제자동통화의 통화요금을 미리 신청한 수신자가 부담하는 국제자동 수신자요금지불 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독자적 서비스로서 전용회선을 대체하는 國際假想私設網서비스, 국제전화망을 통한 데이터전송을 가능케 하는 국제디지털교환회선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고객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 민원처리 부서를 24시간 운영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셋째, 향후 데이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자체설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제구간 전송로의 안정

적 공급을 위해서 충남 아산에 위성 지구국을 금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고, 국내구간 傳送路 확보를 위해서 금년중 경부간·호남구간 光傳送路를 건설하여 국제해저케이블과 아산지구국을 연결하는 자체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동등접속·동등사용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100여년 동안 축적된 전기통신시설과 사업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있는 시장에서, 또 가입자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모든 설비를 이와 같은 거대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정보를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경제적·기술적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업자간의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 어떤 형태의 사업기회에서 불균형이 있는지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신규사업자, 특히 기존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전화사업의 경쟁도입은 결국 국내적으로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국내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사업자의 체질강화 등 국제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內需過熱기미 보이는 韓國經濟



니시후지 노보루(西藤 冲)  
日本總合研究所 所長

**한** 국경제의 현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內需過熱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一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0년에 8.6%, 91년에는 9.7%에 달하였고 안정추세에 있던 도매물가도 90년에 4.2%, 91년에는 5.4%의 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 過熱기미의 韓國經濟

이 같은 인플레이션 傾向은 88년 이후 원貨切上(對달러 및 엔貨)과 함께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經常收支는 88년의 142억달러 黑字에서 90년에는 22억달러 적자가 되었고 91년에는 赤字幅이 88億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상수지 赤字幅의 확대와 같이 어두운 면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一時的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현상황 자체만을 보고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높은 임금상승률이 기본적 원인

이와 같은 過熱기미, 인플레이션 傾向의 기본적 원인은 대폭적인 임금상승에 있다. 제조업의 賃金만 보면, 前年對比 上昇率이 87년의 12%에서 88년에는 20%로 꺾중 뛰었고 89년에 25%, 90년에도 20%에 달하였으며 91년에 들어와서도 15%를 웃도는 임금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86~88년까지의 올림픽景氣와 그것에 연이은 建設붐에 의한 勞動需要의 초과문제가 있겠으나, 거기에 政治面에서의 民主化 進전이 노동운동을 빈발시키고 임금인상壓力을 증대시켰다고 본다. 실제로 87년 6월 노태우大統領의 '6·29 民主化 선언' 이후 노동쟁의가 多發하였고, 임금상승률이 加速되는 등 民主化에 따른 코스트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여겨졌다.

한국정부는 92년의 임금상승률을 10% 이내(公務員은 5%)로 억제하고, 中長期的으로도 노동생산성의 上昇率 범위 안으로 억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民官協調下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인플레이의 진정과 국제경쟁력의 회복, 또 이에 따른 경상수지의 黑字化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潛在成長力 범위내의 成長 追求

한국의 실질GNP는 최근 10년간年平均 10% 수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1人當 GNP는 이미 6,300달러(91년)에 달하고 있어 계속 두자리 수의 성장을 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자리 수 성장이 계속될 경우 景氣過熱현상이 再發될 것이다.

中長期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동력 供給擴大의 속도가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에서 총취업자의 증가율을 2.2% 수준으로 6차 5개년계획(87~91년)의 3.6%에 비해 상당히 낮게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미 生産資本소득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기 때문에 一定投資額의 生産力 擴大효과가 차츰차츰 低下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기술수준도 高度化되었으므로 技術進步의 속도도 완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는 韓國으로서는 환경보전이나 福祉 분야에의 資源配分도 확대해야 할 입장에 있다. 위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韓國經濟의 잠재성장력은 低下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케도를 수정하여 총수요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제7차 5개년계획에서 92~96년간의 실질성장률을 7.5%로 잡아, 과거 5년(87~91년)의 실

질성장률 10%에 비해 상당히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安定成長케도로 移行하는 것이야말로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는 前提조건이 아닐 수 없다.

## 台灣과의 比較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과 台灣의 經濟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과 台灣은 아시아 NICs의 代表的 국가로서 선진국에로의 진입과정에서 비슷한 시련을 받고 있다. 一례로 88년 이후 달러와 엔貨에 대한 自國貨幣의 評價切上이다.

또한 양국경제가 민주화의 물결에 휩쓸려 경제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한국에서는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힘입어 그동안 고도성장을 떠받쳐 왔던 재벌기업의 再編成문제가 課題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편 대만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國營企業의 民營化나 公共事業의 參入 자유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조건하에 있으면서도 최근의 兩國의 경제성과를 비교해 보면 매우 다른 면이 엿보인다. 우선 인플레이에 관해서는 대만에도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상당한 상승추세에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아도 90·91년 모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 가까이 되어 대만보다 5% 정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兩國의 경상수지 차이를 보면 더욱 현저하여, 대만에서는 88년

이후 매년 100억달러 전후의 黑字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赤字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기본적 요인은 임금상승률이라 할 것이다.

양국 모두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이 꽤 높지만, 그래도 88·89년에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대만보다 10% 정도 더 높았던 것이 눈에 띄고 더욱

## 한국경제의 현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內需過熱로 인한

인플레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過熱기미,

인플레 傾向의 기본적 원인은

대폭적인 임금상승에 있다.

92년 임금상승률이 10%이내에서

억제된다면, 인플레이의 진정과

국제경쟁력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임금상승률이 鈍化되었던 91년 상반기에도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台灣보다 5%가 높다.

이와 같이 여러해에 걸친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양국의 인플레이 상황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차이를 誘發한 것이 분명하다.

이외에 90년과 91년 上半期에 있어서 양국의 총고정자본 형성의 실질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의 총고정자본 형성의 증가율은 매우 높는데 投資의 對 GNP증가 기여도가 消費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바로 이 投資가 경기과열의 하나의 原因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저축·投資의 均衡面에서 보아도 이것이 경상수지 赤字를 증대시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양국의 경상수지의 차이에 관해서는 台灣과 中國간의 무역확대문제를 添加해 둘 필요가 있다. 대만과 廣東·福建省(홍콩 경유)과의 무역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것이 대만 무역흑자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한국의 무역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 앞으로의 課題

### ‘環黃海經濟圈’의 형성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홍콩과 廣東·福建省과의 무역 또는 前者에서 後者에로의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직접투자는 8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90년에는 40억 달러에 이르러 이것이 무역확대를 促進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華南經濟圈이 형성돼 오고 있고 더욱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과 中國의 華北·東北部간에 무역과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中國이 필요로 하는 資本財나 半製品·部品 가운데, 日本보다 韓國측이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많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韓·中간의 무역이나 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며, 그렇게 될 때 당분간은 한국측의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북한을 포함한 ‘環黃海經濟圈’이 형성되어 華南經濟圈과 함께

이 지역의 力動的인 경제발전을 主導하는 2개의 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본다.

### 南北統一과 國力の 蓄積

머지않아, 南北統一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경우, 한국과 北韓의 큰 경제력 차이로 인해 독일型的 統一 즉, 한국이 북한을 사실상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때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정부의 舊東獨에 대한 재정 지원이 91~94년 4년간에 약 4천억 마르크(每年 歲出의 4분의 1, GNP의 약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결과, 독일의 경상수지가 90년 對GNP 3.2%의 黑字에서 91년에는 對GNP -1.3%의 赤字로까지 反落하였다.

韓半島의 경우를 보면, 韓國은 과거 서독보다도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에 대비해 國力の 축적, 특히 저축의 증대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도 韓國은 과열기미(過大支出型)의 고도 성장으로부터 저축형의 안정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政府와 國民이 합심하여 저축증대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統一後에는 일본정부도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舊北韓地域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 등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실시하여 한국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東아시아 地域協力에 있어서의 韓國의 役割增大

보다 장기적으로는 地域協력이 강화될 것이지만 그때의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91년 서울에서 개최됐던 APEC會議時 中國·台灣·홍콩(Three Chinas)을 정식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韓國정부가 수준높은 調整能力을 보였듯이 앞으로도 東아시아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韓國의 조정능력이 기대되고 있다.

즉, 日本·中國·러시아연방·ASEAN 등의 構成國家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한국에 요구될 것이다. 東아시아지역에 있어서 調整力의 원천은 資金力도 아니고 軍事力도 아니며 오로지 ‘知力’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韓國에는 文人重視의 전통이 있어 지금도 博士學位 취득자의 비율이 높고, 그들이 경제·사회적으로 대우와 존경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知力’重視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 한국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높이고, 나아가 東아시아 地域協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確信한다. 나라경제

# 석유절약의 필요성과 대책



이 원  
동력지원부 석유조정관


인류의 문명은 사실상 불의 사용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대문명은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혁명 이후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석유는 주종에너지로서 그 사용이 가속화되어 왔다. 현대산업문명의 혜택과 경제발전은 실로 에너지의 대량소비에 의하여 가능하였으나 賦存量이 유한한 化石에너지인 석유는 고갈될 것이 틀림없다.

石油賦存資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의 경제 성장과 국제석유시황의 안정세에 따라 석유소비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20% 이상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에너지의 10대 소비국이 되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안전·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내 석유소비는 상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硬質化·低硫黃化 등 구조적으로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석유소비의 증가는 86년 이후 低油價現象의 지속으로 국민의 소비성향이 변화되고 절약의식이 이완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통해 에너지 수입에 따른 외화유출을 감소하고, 에너지는 국민 전체의 재산이므로 절약을 통하여 가치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선진국은 2차래의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에 주력한 결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低消費型 經濟·社會構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석유 수입 물량의 증가율을 10%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석유소비의 억제를 위하여 국내 석유가격의 인하요인을 石油事業基金으로 흡수하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휘발유·경유 등의 特消稅率을 조정하며, 석유대체 연료인 연탄과 석유의 소비자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것이다. 또한 發電部門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수송용 연료의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가용 10부제를 추진하고 소형차의 보급을 확대하며 주유소에 대하여 격주 휴무제의 시행을 권장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수출입업체로 하여금 국내 석유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석유류 도입의 자율적인 억제를 유도하며 石油多消費 業體에 대하여는 석유 소비실태를 진단하여 관리할 것이다.

또한 석유의 원천적인 절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건물·산업체의 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체하고 廢熱回收 및 新素材의 개발 등 석유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을 개발하며, 석유와 대체되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 및 세제면에서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석유소비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은 생산활동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급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절약은 곧 생산'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모두가 정부의 절약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은 절약이라도 실천하려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제석유시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절약의 지혜를 모아야 할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 노사교육 유감



홍종달  
노동부 공보관

○ 리는 지난 87년 6·29선언 이후 産業現場에서 노사갈등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뒤 이제 서서히 勞使安定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가 民主化로 가는 전환기에서 근로계층의 소외감과 갑작스런 제몫찾기의 욕구분출로 인하여 임금인상률이 勞動生産性을 훨씬 웃도는 파행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근로의욕은 상대적으로 감퇴되어 3D(Dirty, Dangerous, Difficulty) 기피 풍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生産現場에서는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수출이 잘 되지 않아 91년에는 貿易收支赤字가 무려 100억달러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난 2월 1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勞使關係安定을 위한 社會的 合意形成會議'을 주재한 바 있다.

노사갈등 해소와 生産性 向上을 위해서는 임금정책과 아울러 근로복지시책 등 제반 시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사 정신교육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아무리 工場自動化를 서두르고 기술개발과 자본장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를 움직이는 것은 역시 人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교육원을 만들어 근로자 정신교육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각급 經濟團體나 기업 스스로가 근로자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선진 제국의 노사관계 실례를 참고로 각종 세미나·간담회·연찬회 등 종업원교육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과격한 노사분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체내 勞使教育에 대한 관심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작년부터 인력난을 겪다 보니 심지어는 정부나 경제단체에서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당장 일손이 부족하니까 교육참석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노사교육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日本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노사교육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60년대의 日本 또한 산업사회의 노사갈등이 80년대의 우리나라 못지 않았다. 우리는 6·29선언 이후 단 4년 만에 産業平和의 안정기조를 다져 나가고 있지만, 日本의 경우는 노사갈등을 극복하는 데 15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비용도 많이 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경험은 바로 근로자들에 대한 그들의 精神教育이다. 정신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技術教育은 큰 성과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日本은 대기업은 물론 零細企業까지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일단 6개월 내지 1년간 生産現場에 배치하지 않고 轉換반기 등 예절교육과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품성교육을 비롯하여 勞使和合教育을 필수적으로 이수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풍이 종신고용 등을 통하여 오늘의 日本 경제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한다. 불과 50년전에 제2차 世界大戰에서 패한 잿더미속의 日本이 세계 총채권의 50%를, 국제특허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저력은 바로 勞使教育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한다. 우리도 오늘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日本의 노사교육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원**

## 觀光小考



백남근  
교통부 장관

관광이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를 감상·관람하거나 지식체험·휴양 등의 활동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동활동을 말한다.

관광은 넓은 의미의 여가활동의 일종으로서 관광을 하는 주요동기는, 美國의 관광학자 크람튼(Crompton)이 지적하였듯이 일상생활로부터의 도피·자아탐구·휴식·가족 및 친지와외의 교제·새로운 것의 호기심·교육목적 등을 들 수 있는바, 내적으로 동기가 유발되어 여가활동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책무이다.

또한 국가경제차원에서 볼 때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投資財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에 경제성장의 주요한 밑바탕이 되었으며 국제수지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프랑스는 작년에 1백억달러에 가까운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농업부문의 무역흑자 규모를 넘어서 전체산업 중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도 90년에 580억달러의 관광외화를 벌어들이었으며, 스페인의 경우 관광수입이 수출액의 3분의 1을 훨씬 넘고 있다.

전세계 관광산업을 살펴볼 때 관광지출은 2조달러(89년)를 초과하여 세계 총생산의 12%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국제간 관광교역 규모도 2,300억달러에 달해 세계 서비스교역의 35%를 점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은 가장 成長潛在力이 높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산업의 미래

는 매우 밝다고 할 것이다.

2,300억달러의 세계 觀光市場을 향해서 세계 각국은 관광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自國의 관광홍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89년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조치에 따라 관광수지의 흑자폭도 88년의 19억달러에서 점차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82년 이후 최초로 3억4천만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가는 어려운 우리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수출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의 助力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우리도 관광진흥에 더욱 땀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관광을 선택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다양한 觀光施設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生活의 質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웃나라 日本은 올해부터 관광진흥 보조금을 신설하여 각종 이벤트 개최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정비에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없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민들이 불편없이 국내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관광정책의 하나이다. 다시 한번 한국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나라경제

#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김동욱  
환경처 감사관

“인류는 최근 수 세기 동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물질문명의 발달로 자연에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지금까지 지구 위에 존재하였던 가장 위험한 有機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존 맥헤일은 말했다.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 온 물질적인 풍요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유발시켰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生存까지도 위협할 정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물이 더러워져 먹을 수 없게 되고 자연이 훼손·파괴되고 있으며, 지구의 생물을 보호하는 오존층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지상에는 탄산가스의 누적으로 生態系가 균형을 잃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물자소비가 量的·質的으로 급팽창하며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환경을 빠른 속도로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바로 物資節約이다. 1회용품품 대신에 耐久性物品을 사용하고,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肉類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등 생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물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를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물자의 사용’과 ‘환경오염의 방지’라는 두 명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均衡點을 찾자는 것이다. 같은 종류, 같은 양의 물자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과 1년후 혹은 2년후에 사용하는 것과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

어 있을 때는 환경에 큰 영향이 없겠으나, 유해한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이나 위생매립지 같은 시설이 없을 때는 하천이나 자연에 방치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오염될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정도의 汚染防止技術이 발달되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이에 맞추어 우리의 물자소비를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은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60년대와 90년대의 환경오염문제를 비교해 보면, 그 원인이 경제발전에 의한 물질적 소비생활의 향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인 ‘물자절약’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자를 절약하면 환경오염이 二元的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자를 생산·가공·유통·소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수송수단·소비결과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근원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물자절약 즉 勤儉節約은 저축의 증대, 수입의 감소, 수출의 증대로 나타나 경제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문제, 경제적인 難局은 물자를 상대적으로 과소비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일상생활의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환경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 곰과 호랑이를 통해 본 한국인의 德目



장홍열  
재무부 기획예산담당관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檀君神話’에서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곰과 호랑이에게 桓雄은 동굴에서 썩과 마늘을 먹고 100일 기도를 하라고 했다.

동굴은 어둠과 감금이며, 썩과 마늘은 먹기에 역겨운 음식들로서—요즈음에는 썩과 마늘이 강정식으로 분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음식물이 되고 있지만—식욕의 억제를 뜻하는 것이다. 넓은 공간에서 살다가 동굴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격리되는 것, 먹고 싶은 음식 대신 쓸쓸하고 매운 음식을 먹는 것 등은 바로 인간 생활의 試鍊과 苦痛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삶이 절대적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짐승이 스스로 인간이 되길 원해서 택한 것이며 그것이 싫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곰은 1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인간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짐승으로 남게 되었다. 이 神話는 중도포기한 호랑이와 인간이 된 곰을 통해서 한국인의 德目과 精神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곰이라는 짐승이 갖고 있는 象徴性이다. 잘 알다시피 서구 신화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영웅형의 인물들이며, 이들은 힘과 용기, 혹은 슬기로써 난관을 극복한다. 그러나 단군 신화의 주인공인 곰은 내면의 투쟁인 克己에서 승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신화도 서구형이었다면 곰과 호랑이는 직접적인 힘의 대결로 묘사됐을 것이지만, 그러나 힘의 대결이 아닌 시련을 참고 견디는 극기의 대결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들은 항상 참는 자가 결국 복을 받고 이긴다는 교훈을 어

린 자손들에게 은연중 가르쳐 왔다. 우리 俗談에 ‘악한 끝은 없어도 후한 끝은 있다’라는 말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龍飛御天歌에서도 또 하나의 德目を 배울 수 있다. 이 노래는 무력으로 고려왕조를 정복하고 이씨왕조를 건립한 태조 이성계를 찬양한 노래로서 그 초반부는 이태조의 武를 자랑하고 있지만 차츰 武에서 勇으로, 勇에서 智로, 마침내는 智에서 德을 기리고 어진 왕이 되라는 기원으로 끝난다.

동서고금을 통해 장군을 평할 때도 勇將→智將→德將으로 순위를 정한다. 부하들이 제일 많이 따르고 존경받는 장군은 결국 德將이며, 따라서 어느 조직사회나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德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인의 유형에는 곰과 호랑이의 두 유형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형이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바람직한가는 자명한 일이다.

이 논리를 企業經營에 적용할 때, 호랑이형은 오직 기업의 순간적 이윤만을 생각하고 물리적 힘으로 밀어부치지만, 곰형은 기업의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욕망을 억제하고 自己克己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인이 되는 형이다. 이런 한국인의 의식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최근의 노사문제 해결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한다.

德이 물리적인 힘을 이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모든 생활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주위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의 됴됨이를 이 틀에 한번 대입시켜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他山之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글

# 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지표 개선추세

김영과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 사무관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높은 임금상승, 성장률을 상회하는 소비증가, 그리고 건설경기 과열 등으로 성장률은 높았으나 物價不安과 國際收支 악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과열된 內需를 진정시켜 성장률을 낮추어감으로써 경제의 安定基盤을 구축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經濟運用計劃을 수립하였다. 금년 1~2월중 경제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物價는 최근 3년중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

금년 1~2월 동안 都賣物價는 전년말대비 0.3%, 消費者物價는 1.3% 상승하여 최근 3년중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도매물가는 1월에 0.3%, 2월에 0% 상승을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도 1월 0.8%, 2월 0.5%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냈다.

특히 작년까지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던 농수산물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안정이 물가안정에 크

게 기여하였다. 채소류 등 농수산물물은 공급물량 증가로, 그리고 축산물도 수입 쇠고기 방출확대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2월중에 전기요금·교통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나 집세·음식값 등 서비스요금은 안정된 추세를 보였으며 工產品 가격도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3월에는 버스요금의 移越要因과 신학기 授業料 조정요인(소비자물가 1% 상승요인) 등으로 물가관리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3월 3일 物價對策長官會議를 개최하여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不動產價格도 안정세 지속

부동산가격도 금년 1~2월중에 지난해 5월 이후의 안정추세를 지속하였다. 住宅賣買價格은 1, 2월에 각각 -0.5%, -0.2%로 하락하였으며, 금년에도 아파트 등 주택공급물량이 入住物量 기준으로 63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는 금년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傳賃價格은 1~2월중에 이사철을 앞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전국 토지가격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등 그동안의 강력한 투기

〈표 1〉 도매 및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말대비, 단위: %)

	90.1~2월	91.1~2월	92.1월	2월	92.1~2월
도매물가	0.5	1.2	0.3	0.0	0.3
농수산물	2.9	4.2	0.8	-1.4	-0.6
공 산 품	0.0	0.5	0.2	0.1	0.3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0.0	0.0	0.0	5.6	5.6
소비자물가	1.9	3.5	0.8	0.5	1.3
농수산물	3.0	6.1	0.8	0.2	1.0
공 산 품	0.4	1.1	0.5	0.4	0.9
서 비 스	2.2	3.4	0.9	0.8	1.7

억제 시책으로 안정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總選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가격의 동요가 없도록 부동산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경공업제품도 섬유제품의 수출(25.5%)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1월중 15.4%가 증가하였으나, 신발류는 경쟁력 약화를 반영하여 다소 부진(-7.3%)하였다.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원유·철강재 등 산업용품과 전기·전자 등 資本財 輸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출용 수입(1월:9.6%)보다 內需用 수입(1

### 국제수지 적자폭 개선추세

전반적인 수출입동향을 보면 금년 1~2월중 수출은 11.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입은 6.9%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通關基準 輸出入 差는 금년 1~2월중 30억달러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억달러보다 개선되었으며, 월별로 보면 1월중 19억달러에서 2월에는 11억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수출입의 선행지표인 L/C와 I/L 동향을 볼 때 금년 1~2월중 L/C내도는 전년동기비 13.7% 증가한 반면, I/L발급은 17.7% 감소하여 향후 국제수지 赤字幅이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品目別 수출동향을 보면, 1월중 화공품·금속제품·전자제품·기계류·선박 수출 등이 호조를 보여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16% 증가하였는데, 특히 中國·印度·東南亞 등에 대한 화공품 수출과 동남아에 대한 소형플랜트 등 기계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표 2〉 부동산가격 동향

(기간중 상승률, 단위: %)

	91.上	91.下	92.1월	2월
주택가격	5.1	-5.6	-0.5	-0.2
전세가격	4.3	-2.6	0.1	1.1
토지가격	8.3	4.1	-	-

〈표 3〉 수출입동향

(단위: 억달러, %)

	91연간	1~2월	92.1월	2월	1~2월
수 출	719	95	54	52	106
(증가율)	(10.5)	(10.0)	(61.2)	(7.0)	(11.5)
수 입	815	127	73	63	136
(증가율)	(16.7)	(29.0)	(21.1)	(-5.8)	(6.9)
수출입 差	-97	-32	-19	-11	-30
L/C증가율	5.7	0.0	14.3	12.9	13.7
I/L증가율	9.4	43.4	-25.9	-6.9	-17.7

〈표 4〉 품목별 수출동향

(전년동기비, 단위: %)

	91연간	91.1~2월	92.1~2월 <sup>1)</sup>
수 출	10.5	10.0	11.5
경공업제품	0.6	1.4	15.4
섬유제품	5.6	0.7	25.5
신 발 류	-11.1	7.7	-7.3
중화학공업제품	15.7	14.1	16.0
화 공 품	35.1	33.7	50.9
금 속 제 품	5.8	7.4	13.4
기 계 류	15.6	12.9	11.4
전 기 · 전 자	13.4	21.4	12.9
선 박	47.4	-9.9	117.9
자 동 차	19.3	9.1	-45.0

註: 1)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1월 실적 기준

월 : 26.0%)이 더 크게 증가하여 아직도 내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금년 1~2월중 수입이 금액기준으로 6.9% 증가하였지만 수입 단가가 원유도입가격의 하락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9%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物量基準으로는 수입이 13.6% 증가한 것으로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內需는 아직 높은 증가세 지속

최근 消費節約氣風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1월중 소비재출하(20.6%), 도소매판매(10.8%), 내수용 석유류수입(36.8%), 소비재수입(23.4%) 등의 동향을 볼 때 소비증가세는 아직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內需鎮靜施策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건설부문을 보면, 금년 1월 들어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말 이월된 주택허가(약 10만호)로 27.4% 증가하였으나, 2월 들어서는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解凍에 따라 건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시멘트 출하가 계속 높은 증가추세(1월 45.0%, 2월 36.7%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건설경기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消費節約氣風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소비재출하, 도소매판매, 내수용 석유류 수입, 소비재수입등의 동향을 볼 때 소비증가세는 아직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內需鎮靜施策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로 완료되는 商業用 건축허가규제의 시한을 6월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 조치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제외한 중앙정부 공사와 지방정부사업도 최대한 하반기로 연기하여 시멘트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設備投資는 다소 둔화 기미

설비투자는 금년 1월중 기계류

수입액이 21% 증가함으로써 당분간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계류 출하 및 기계류 수주가 1월에 각각 -4.4%, -17.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生産的 投資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내수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製造業稼動率은 금년 1월중에도 80%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반면에 산업생산은 금년 1월중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는 勞使紛糾에 따른 자동차 생산차질요인(약 2%포인트)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향을 좀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추세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품목별 수입 동향

(전년동기비, 단위 : %)

	91년간	91.1~2월	92.1~2월 <sup>1)</sup>
수입	16.7	29.0	6.9
소비재	19.8	31.0	23.4
곡물	-1.2	0.9	16.4
원료 및 연료	15.1	32.2	11.9
원유	27.4	78.6	13.0
철강재	39.7	30.4	53.1
화공품	10.5	22.5	-7.4
자본재	18.2	24.9	36.4
기계류	18.9	22.1	18.2
전기·전자	17.0	1.8	47.7

註 : 1) 품목별 수입증가율은 1월 실적 기준

**인력난 속에  
제조업 취업자 감소추세**

1월중 失業率은 2.2%(계절조정)로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지난해의 실업률 2.3%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여 최근 수년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 就業動向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3/4분기 이후의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금년 1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12만 5천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건설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금년 1월에도 작년에 비해 각각 15만3천명, 48만4천명의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조업부문의 인력감소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는 선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 및 市中金利도 안정추세**

1~2월중 總通貨는 평잔기준 3조3,162억원이 공급되어 당초 관리목표(18.5%)보다 낮은 17.9%(1월 18.1%, 2월 17.6%)의 안정된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민간신용은 특히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산업부문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였다.

저축성예금은 1~2월중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現金通貨比率도 1월의 9.5%에서 2월에 8.5%로 하락하는 등 선거와 관련

〈표 6〉 소비동향

(증가율, 단위: %)

	91연간	91.1월	92.1월
소비재출하	12.7	22.1	20.6
도소매판매	8.0	8.2	10.8
전력소비량	10.5	14.6	10.2
석유류수입(내수용)	14.8	49.1	36.8
소비재수입	20.1	30.8	23.4

〈표 7〉 건설동향

(증가율, 단위: %)

	91.上	91.下	92.1월	2월
건설투자	18.5	7.0	-	-
총건축허가	4.3	-23.0	27.4	-15.3 <sup>1)</sup>
(주택용)	(5.0)	(-33.7)	(141.3)	(-3.5) <sup>1)</sup>
시멘트출하	35.5	25.8	45.0	36.7

註: 1) 잠정치

〈표 8〉 설비투자 동향

(전년동기비, 단위: %)

	91연간	91.1월	92.1월
기계류수입	20.0	34.5	21.0
기계설비류출하 <sup>1)</sup>	10.0	20.8	-4.4
기계수주 <sup>1)</sup>	2.2	19.8	-17.2

註: 1) 선박 제외

〈표 9〉 생산활동 동향

(단위: %)

	91연간	91.1월	92.1월
제조업가동률	80.0	83.4	82.3
산업생산	8.6	20.4	6.3

〈표 10〉 산업별 고용동향

(전년동기 대비 증감, 단위: 천명)

	91.上	91.下	92.1월
제조업	191	-10	-125
건설업	209	200	153
서비스	379	516	484

한 자금흐름상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중금리도 기업의 資金需要 축소와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의 자금흐름 개선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작년 12월에 19%에 달하던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금년 1, 2월에 각각 18.3%, 17.2%로 하락하였고, 통안증권 수익률과 콜금리 등도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진정시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금년 1~2월중 경제동향을 종합해 보면, 물가와 國際收支는 당초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와 건설 등 內需는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추세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內需鎮靜施策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추세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內需鎮靜施策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 등과 관련하여 經濟安定基調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舍心努力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거 등과 관련하여 經濟安定基調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舍心努力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農畜水産物 등의 물가안정과 건설경기 관리 강화 및 시멘트需給 원활화, 그리고 인력수급 원활화와 임금안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아울러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資金흐름 개선을 통해 수출산업과 中小企業 애로타개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라경제

〈표 11〉 통화지표동향

(단위: 억원, %)

	92. 1월	2월
총통화 증가율	18.1	17.6
저축성예금증가(비전월)	3,055	7,990
현금/총통화	9.5	8.5

〈표 12〉 시중금리동향

(단위, %)

	91.9월	12월	92. 1월	2월
회사채수익률	19.5	19.0	18.3	17.2
통안증권수익률	18.8	17.6	16.9	15.8
콜금리(1일물)	18.8	17.3	13.7	14.2

『나라경제』  
온라인 구좌번호  
변경 안내

『나라경제』의 온라인 구좌번호가 92년 2월 8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구 좌 번 호	예 금 주
국민은행	070-01-0348-325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상업은행	189-05-073621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농 협	100089-51-056979	국 경 연

※ 지로번호 및 우체국 대체계좌는 종전과 같습니다.

# 원貨 및 주요 경쟁국 통화의 최근 추이와 전망

안중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원貨가 작년 하반기부터 달러貨에 대해 대폭 절하되고 있다.

달러貨에 대한 약세와 더불어 원貨는 일본 엔貨 등 여타 통화들에 대해서도 대만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들의 통화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하폭이 커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원貨는 금년 2월 20일 현재 선진국 통화들에 대해 85년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약 25%(실효환율)나 절하되고 있으며, 특히 도매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實質實效換率로는 현재 거의 균형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6년 기준). 원貨의 주요통화들에 대한 약세조정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호전되기전까지는 원貨가 달러貨에 대해 계속 약세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중 달러貨도 일본 엔貨 등에 대해 큰 폭으로 절상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9년 이후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왔던 환율변화가 이처럼 원貨의 약세조정 추이로 바뀐에 따라 우리의 수출가격 경쟁력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면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 같은 여건변화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對美달러 환율은 88년 2월말 수준에 근접**

원貨가 89년 하반기부터 달러貨에 대해 약세를 거듭하여 금년 2월 20일 현재 지난 88년 2월말과 비슷한 달러당 766.5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원貨

의 對美달러 환율이 달러당 40원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는 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달러貨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에 반해 85년 G-5의 달러貨 약세유도 합의 이후 달러貨에 대해 절상되는 추세를 보여 온 일본 엔貨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는, 미국의 경기부진 등을 반영, 작년 하반기부터 더욱 큰 폭으로 절상되어 왔다. 각국 통화의 달러貨에 대한 환율변동을 살펴보면, 금년 2월 20일 현재 일본 엔貨가 85년 평균환율인 238.5엔에 비해 85%, 독일 마르크貨가 78%, 영국 파운드貨가 26% 절상되어 같은 기간 동안의 원貨의 절상률 14%를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상률은 85년 이후 NIEs(대만·홍콩·싱가포르) 통화들의 달러貨에 대한 평균절상률(교역규모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중평균)인 27%에도 못 미치고

있다.

먼저 대만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환율변동을 보면 대미 무역흑자 누증 등으로 통화절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89년부터 작년 3/4분기까지 85년 평균환율 대비 약 50%의 절상률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작년 4/4분기부터는 대만 중앙은행의 달러貨 매입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85년에 비해 약 60% 절상된 달러당 24.5원대에 이르러 NIEs 통화 중 가장 높은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 달러貨는 85년 이후 달러貨에 대해 완만한 속도로 절상추세를 거듭하여 금년 2월 20일 현재 85년 평균환율 대비 34%의 절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달러貨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하에 변동해 온 홍콩 달러貨는 85년 이후 달러당 7.7~7.8 홍콩 달러대에서 계속 안정됨으로써 현재까지 0.4% 절상되는 데 그쳤다.

이로써 88년~90년 3/4분기까지 NIEs통화들의 평균절상률을 웃돌던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상률이 90년 4/4분기부터는 오히려 이들 통화들의 평균절상률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하폭이 커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엔貨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절하

달러貨에 대한 약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원貨는 90년 하반기 이

### 현재 원貨의 엔貨에 대한 절하율은 NIEs통화들의 평균 절하율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데 이것은 최근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하가 이들 통화들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 일본 엔貨에 대해서도 대폭 절하되고 있다. 금년 2월 20일 현재 원貨의 對엔貨 환율은 100엔당 59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엔貨가 달러貨에 대해 폭락한 바 있는 90년 2/4분기 평균환율인 457원에 비해 100엔당 무려 139원, 그리고 작년 2/4분기 평균환율에 비해서는 100엔당 72원이나 오른 것이다.

원貨가 이처럼 엔貨에 대해 대폭 절하된 것은 미국의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엔貨가 달러貨에 대해 강세를 보여 온 데다, 원貨도 달러貨에 대해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엔貨에 대한 절하폭은 독일 마르크貨를 포함한 유럽 통화들의 절하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통화들의 엔貨에 대한 절하율을 보면 독일 마르크貨는 85년에 비해 3%, 영국 파운드貨는 3.5%, 프랑스 프랑貨는 5% 절하되어 같은 기간 중의 원貨의 절하율인 40%를 밑돌고 있다.

더욱이 현재 원貨의 엔貨에 대한 절하율은 NIEs통화들의 평균 절하율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데

이것은 최근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하가 이들 통화들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원貨의 엔貨에 대한 환율변동을 보면 86년부터 작년 3/4분기까지 85년 평균환율 대비 약 6~25%의 절하율을 유지하여 왔으나, 작년 4/4분기부터는 대만 원貨가 달러貨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엔貨에 대해서도 다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달러貨는 엔貨에 대해 85년 평균환율 대비 23~36%, 홍콩 달러貨는 29~47%의 절하율을 보여 우리나라 원貨를 제외한 이들 NIEs통화들의 엔貨에 대한 평균절하율은 금년 2월 20일 현재 3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상률이 88년~90년 3/4분기까지 NIEs통화들의 평균절상률에 비해 대체로 높았던 것과는 반대로, 원貨의 엔貨에 대한 절하율은 88년~90년 3/4분기까지 NIEs통화들의 엔貨에 대한 평균 절하율에 비해 낮았으나 90년 4/4분기부터는 이들 통화들의 평균절하율을 줄곧 상회하고 있다.

### 원貨 가치, 89년을 고비로 하락 추세

우리나라 원貨가 달러貨에 대해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일본 엔貨·독일 마르크貨 등 주요 선진국 통화들이 달러貨에 대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貨는 금년 2월 20일 현재 실효환율 기

준으로 85년에 비해 25%나 절하되고 있다. 특히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의 변동 추이를 보면 89년~90년 상반기 중에 원貨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거의 균형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준연도별로 실질실효환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던 86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할 경우, 원貨는 89년~90년 상반기까지 주요통화에 대해 약 13% 고평가되다가 최근에는 균형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87년과 88년을 기준시점으로 할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貨가 달러貨는 물론 일본 엔貨 등에 대해서도 대폭 절상되었던 89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원貨는 주요통화에 대해 평균 약 10~13% 정도 절상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당분간 주요통화에 대한 약세기조는 지속될 듯

앞으로도 원貨의 주요통화에 대한 약세조정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원貨가 달러貨에 대해 계속 약세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중 달러貨가치도 미약한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일본의 무역흑자 확대 등을 반영해 큰 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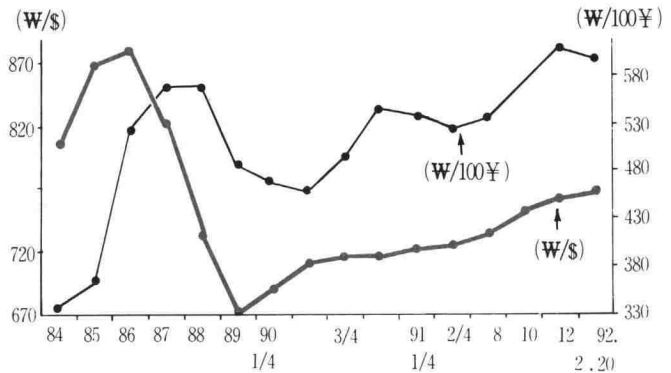
로 상승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貨의 對美달러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달러당 765원대에서 안정되고, 달러貨가 일본 엔貨에 대해 달러당 135~140엔대로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금년에 원貨는 엔貨에 대해 87년~88년 평균환율과 비슷하거나 더 절하된 선에서 머무를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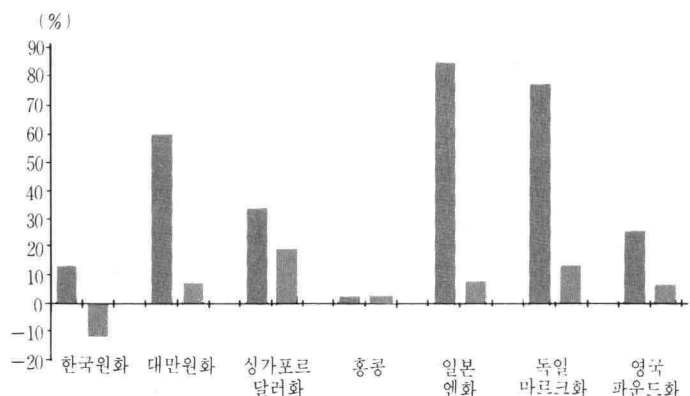
더구나 최근에 대만 원貨 등 NIEs통화들이 달러貨에 대해 강세 내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貨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달러貨는 물론 일본 엔貨를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NIEs통화들에 비해 더 높은 절하율(85년 대비)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그림 1〉 원貨의 對美 달러 및 對엔貨 환율 변동추이



註 : 91년 2/4 분기까지는 기간평균환율, 그 이후는 기말환율임.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AP-DJ

〈그림 2〉 주요통화의 美달러貨에 대한 절상/절하율 비교



註 : 1) ■부분은 85년 평균환율 대비 금년 2월 20일 현재의 절상/절하율이며,  
■부분은 89년 평균환율 대비 금년 2월 20일 현재의 절상/절하율임.  
2) (+)는 절상률, (-)는 절하율임.

보인다.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원화 가치가 이와 같이 대만 등 경쟁국 통화들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그동안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 수출업체 등에는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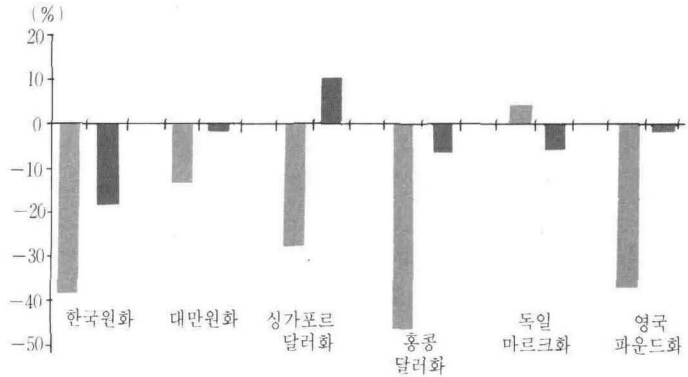
그러나 환율면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러한 여건변화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로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다져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품질향상 및 고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원화의 일본 엔화에 대한 약세가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비용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수출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기업내에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수입선을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가격에 적절히 반영하여 우

리 상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미국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만큼, 수출입대금 결제시에는 결제 통화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남원**

〈그림 3〉 주요통화의 일본 엔화에 대한 절상/절하율 비교



註: 1) ■부분은 85년 평균환율 대비 금년 2월 20일 현재의 절상/절하율이며,  
 ■부분은 89년 평균환율 대비 금년 2월 20일 현재의 절상/절하율임.  
 2) (+)는 절상률, (-)는 절하율임.

〈표〉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sup>1)</sup> 추이

(단위: %)

비교시점 기준시점	86	87	88	89	90.1/4	2/4	3/4	4/4	91.1/4	2/4	8월	10월	12월
85	15.7	17.9	11.0	-0.2	1.2	0.0	4.5	9.7	6.9	3.0	4.9	10.0	15.4
86		1.9	-4.1	-13.8	-12.6	-13.5	-9.7	-5.1	-7.6	-11.0	-9.3	-4.9	-0.2
87			-5.9	-15.4	-14.2	-15.1	-11.4	-6.9	-9.4	-12.6	-11.0	-6.7	-2.1
88				-10.1	-8.9	-9.9	-5.9	-1.1	-3.7	-7.2	-5.5	-0.9	4.0
89					1.4	0.2	4.7	10.0	7.1	3.2	5.1	10.3	15.7
90.4/4									-2.6	-6.1	-4.4	0.3	5.2

註: 1) 91년 2/4분기까지는 기간평균환율, 그 이후는 기말환율이며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하였음.

2) (+)는 기준시점 대비 원화의 저평가률, (-)는 기준시점 대비 원화의 고평가률을 나타냄.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AP-DJ

때 92년 3월 10일

곳 과천제2청사 건설부장관실

만 남

국토개발전문가가 만난 徐榮澤 건설부장관

# 21세기 國土開發의 확고한 座標를 세운다

“그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정열적이고,  
사람에 대해 후덕스러우며, 국민을 만남에 겸허하다.  
그래서 복잡하고 民怨이 많은 건설행정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책임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글·金安濟 / 서울대학교 교수

얼은 大地를 녹이는 따스한 3월의 봄날 오후에 4,400만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9만9,274Km<sup>2</sup>, 3백억평의 우리 國土를 올바르게 가꾸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령탑인 건설부장관실을 찾았다.

언제나처럼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徐榮澤장관의 얼굴에서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하다. 그는 산적한 현안문제를 무리없이 풀어나가고 2000년대 민주복지사회를 구현시킬 확고한 국토의 터전과 개발의 좌표를 着根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난해 연말 건설부장관에 취임하였다.

徐장관은 大邱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경제 및 재정정책을 공부한 학구파이다. 徐長官의 주위 분들의 말에 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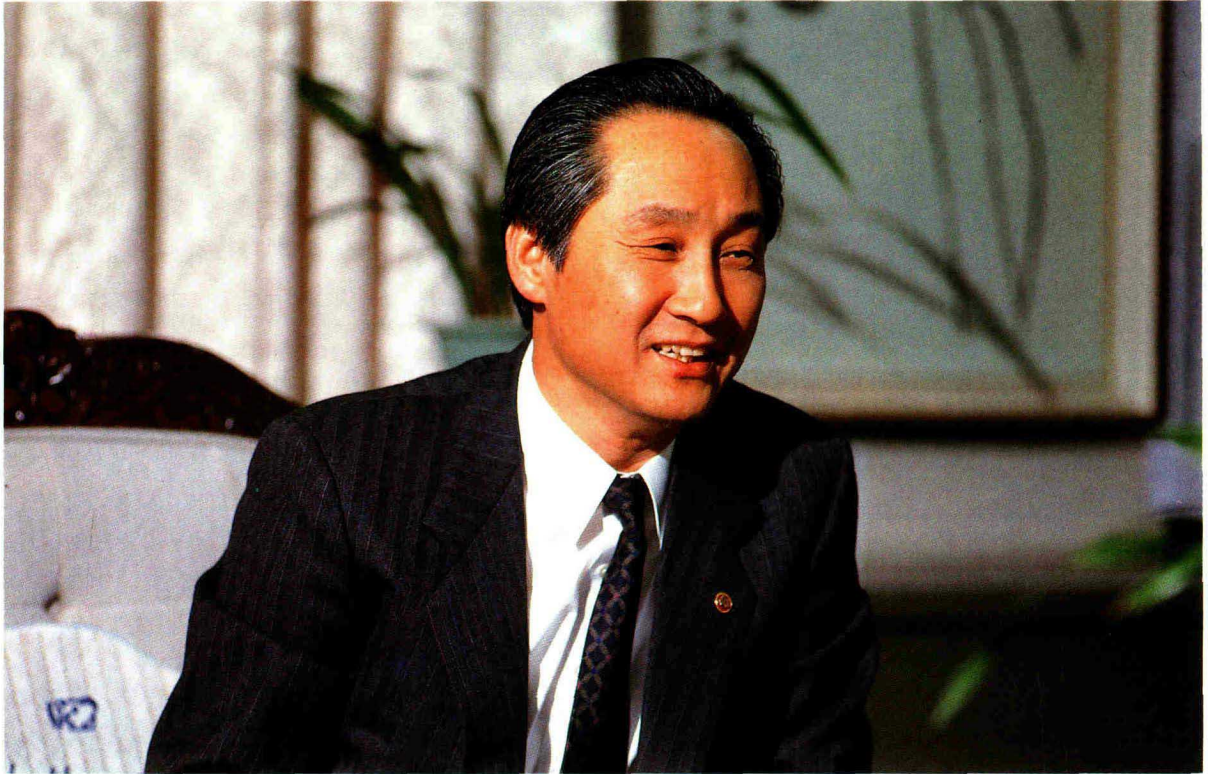
그의 진지하고 탐구적인 성품으로 보아 대학교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학 재학시절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여 公職의 길로 들어섰으며, 공직생활 25년의 대부분을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조세, 특히 국세부문의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오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조세전문가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재무부 제2차관보, 국세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19일에 건설부장관으로 영전하였다.

● 그동안 국가재원을 마련하는 조세행정을 하시다가 이제는 주로 예산을 지출하는 건설행정을 맡게 되었는데, 밖에서 보시던 것과 안에 몸담고 계시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조세행정과 건설행정의 관계에서 볼 때 오랫동안 쌓으신 조세행정의 경험이 건설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교적 조용하고 크게 할 일도 많지 않은 부처 중의 하나가 건설부가 아닌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몸으로 부딪치며 살펴보니 그동안의 내 생각이 영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루는 일들이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효과와 보람도 어느 국가기능보다도 앞서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土地 및 開發政策은 조세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은 조세행정의 경험은 건설행정의 건전한 추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건설부의 기능 중에는 국민과 지방정부로부터 民願대상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민주화·지방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는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法規나 制度가 잘못돼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표준화하고 단순화시키고자 합니다. 국가가 계속 쥐고 있는 것이 국민이나 국가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점차 민영화하고, 지방단위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都市計劃, 주택 및 토지, 廣域開發 등과 같은 부문에는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된 발전과 관련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자율화하거나 이양할 수만은 없다는 한계

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受容姿勢나 처리능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言論媒體를 통해 건설부가 하는 일의 내용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 이해를 구하는 한편,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시행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國土開發研究院의 전문연구진과 건설부의 중견간부가 한자리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으로는 몇차례의 선거가 치러지고 밖으로는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어디에 건설행정의 중점을 두실 계획인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발전의 動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러한 몇가지 점에 역점을 두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수도권권의 정비시책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잠재력을 균형있게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둘째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國土空間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로, 건설기술을 첨단화하고 해외건설을 촉



진하여 국제수지의 역조현상을 개선하며, 끝으로 경직된 건설행정을 쇠신하여 편리와 능률을 우선하는 제도를 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국 통일이며, 그 다음 해결해야 할 과제는 土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통일은 언젠가 해결될 시한적 과제이지만 토지문제는 영구히 지속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국민 생활의 기본인 주택문제도 상당기간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요?

▲“기본적으로 國土는 오늘을 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살아가야 할 민족의 삶의 터전이므로 알뜰히 가꾸고 깨끗이 보전해 나가야 합니다. 住宅은 인간 생활의 기본요건이므로 衣·食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福祉指標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2001년까지 1,169Km<sup>2</sup>(3억3천평)를 干拓하여 국토면적을 넓히고 限界地

“  
모든 국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나 유희지를 개발하여 공급량을 늘리며 고층화 및 地下化를 통해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土地需給의 조화와 이용의 균형을 실현하고, 土地公概念制度的 알찬 실천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200만호 건설이 끝나는 올해 이후에도 매년 50만호 정도씩 건설하여 96년까지는 82%, 2001년까지는 93% 수준으로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형주택

의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택자금의 70~80%를 장기로 용자받아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首都圈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은 오랫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과밀에 의한 폐단이 누적되고 밖으로 국토의 균형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어떤 구상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지금까지 시행해온 물리적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교통·환경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過密負擔金을 부과하는 등의 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문제는 근원적으로 지방의 발전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牙山灣이나 群長地區 등을 적극 개발하여 수도권의 인구 및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대도시의 정보·유통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에 대응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지방중소도시에는 소규모 공업단지과 문화·의료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방도시를 살기좋은 생활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0년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제3차 國土綜合開發計劃이 시행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국토관리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소신이랄까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행정의 목표

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간·도농간·계층간의 開發隔差를 해소하여 국토공간을 균형있게 성장시키고, 여기에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여 국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생활시설의 확보와 자연환경의 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統一에 대비하여 남북간의 交流空間을 조성하고 관광 및 수자원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토차원의 同質性을 회복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쭙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국내외 상황과 향후의 변화전망에서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 부처의 장관으로보다 한사람의 國務委員이라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고도로 과학화된 행정체제와 강한 사명 의식을 가진 책임행정입니다. 전통의 답습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의 격변하는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내실있는 行政文化를 창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선두주자로 앞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설행정을 위시한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은 발전지향적인 체제로 개편 내지 쇄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봉사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만 하겠습니다.

격동하는 국내의 정세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世界史의 전면에 확고한 위치를 굳히며 남북통일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체제와 公職者像으로 조속히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 徐장관은 모든 운동에 능하지만 특히 테니스와 수영은 수준급이다. 솔직담백한 성품과 진실된 생활태도,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정성을 다해 경청하는 자세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또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정열적이고, 사람을 대함에 후덕스러우며, 국민을 만남에 겸허하다. 그래서 복잡하고 民怨이 많은 건설행정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책임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장관의 재임기간 동안 누적된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는 과욕보다는 지향할 좌표와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국토의 개발과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기틀을 튼튼히 조성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徐장관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徐長官이 하나뿐인 우리의 國土를 가꾸고 다듬는, 우리 世代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한 名建設部長官으로서 오래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부정사를 뒤로 하였다. 국립



金安濟 서울대 교수

62년 서울대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美國 신시내티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과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 기업어음 중개제도

정부는 90년 11월, 증권산업의 대외개방과 단기금융회사의 기능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개편방안의 주요 골자는, 短資會社간 적정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회사에 한하여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토록 하고, 단자회사로 계속 존속하는 회사는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 기업어음 중개제도의 의의

이러한 개편방안에 따라 91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16개 단자회사 가운데 8개의 회사가 은행과 증권회사로 전환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전환된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했다. 전환 단자회사가 취급하고 있던 단기금융업무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환후 1년 이내에 정리하면 된다. 전환된 회사가 단기금융업무를 정리할 경우 그동안 이들 단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던 기업은 거래선이나 조달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이 단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잔류하는 단자회사를 단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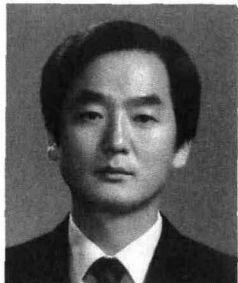
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단자회사는 자금을 중개하는 업무보다는 자기의 계산이나 자금력에 의해 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금융방식의 업무를 영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단자회사간 지나친 수익경쟁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추구를 강조한 나머지 불건전 금융관행을 조장함으로써 전반적인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업무방식은 간접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경합됨으로써 금융기관간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단자회사가 지나치게 기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완화하고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 업무의 조화와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자회사를 전문중개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일환으로 새로운 어음중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단



강권석  
재무부 자금시장과장

자회사로부터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고 단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어음을 매출함으로써 기업에 공급할 재원을 동원하는 割引·매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어음중개제도는 기업이 자기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일반투자자가 발행기업의 신용상태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투자했을 경우의 예상수익률 등을 따져 보아 자기책임하에 어음을 직접 매입하게 되는 직접금융형태의 조달방식이다. 단자회사는 발행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복덕방 역할을 하게 된다.

어음중개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에 한정된다. 즉 한국신용평가(주)·한국기업평가(주)·한국신용정보(주) 등 3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최소한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만이 중개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둘째, 중개어음은 無保證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보증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개어음의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투자자 자신이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 발행하는 기업은 자기회사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을 안는 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기업어음중개제도의 운영 현황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도입한 기업어음중개제도는 6개월이 경과한 92년 2월말 현재, 총발행액이 3조원을 상회하는 등 기대 이상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개어음매입 자격을 개인에게도 확대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에는 발행실적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기업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다만, 중개어음의 발행금리를 실세금리 하락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최근 실세금리가 일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발행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중개어음을 발행한 기업별 현황을 보면 총발행액의

〈표 1〉 중개어음 발행 추이

(단위: 억원)

	91. 8. 1~11. 20	11. 21~12. 31	92. 1~2월	계
발행금액	11,275	10,023	18,889	33,187
일평균	48	295	402	192

자료: 재무부

〈표 2〉 중개어음 만기별 구성

(단위: 억원, %)

	91. 8. 1~12. 31	92. 1월	2월	계
60~ 90일	2,055( 14.4)	3,182( 24.2)	1,188( 20.7)	6,425( 19.4)
91~120일	4,273( 29.9)	4,029( 30.6)	1,330( 23.2)	9,632( 29.0)
121~150일	791( 5.5)	554( 4.2)	405( 7.1)	1,750( 5.3)
151~180일	7,179( 50.2)	5,395( 41.0)	2,806( 49.0)	15,380( 46.3)
계	14,298(100.0)	13,160(100.0)	5,729(100.0)	33,187(100.0)

자료: 재무부

〈표 3〉 투자자별 중개어음매입 실적

(단위: 억원, %)

개인	14,258	43.0
법인	18,929	57.0
계	33,187	100.0

자료: 재무부

대부분이 대기업 발행분이며, 신용 등급별로는 A급이상 기업이 발행한 실적이 총발행금액의 95.1%에 해당하는 3조1,563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개어음의 만기별로는 만기가 151일 이상~180일인 어음의 발행실적이 전체의 46.3%를 점유함으로써 평균기간이 2개월 수준인 기존의 어음할인방식에 비해 만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그밖에 투자자별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총발행액의 43.0%를 점유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어음중개제도에 대한 평가

지난 6개월간 어음중개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개어음제도가 기업의 새로운 단기 직접금융시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달해온 단자회사의 어음할인 방식은 운용기간이 단기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금리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직접금융방식의 하나

인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간이 3년 이상 장기이므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보증위주로 발행됨으로써 자기신용에 따른 금리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중개어음제도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면 언제든지 5~6개월의 중기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금융위험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중개어음제도는 실세금리의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이 있는 기업이면 시중자금수급상황에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資金假需要를 억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중자금사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대기업이 중개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증가하면 은행대출 등과 같은 간접금융 의존도가 낮아짐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이 확대되고 통화증가율을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통화공급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중개어음은 사금융이 제도 금융권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개어음은 우량기업이 발행하므로 투자위험이 낮으며

운용기간이 짧으므로 유통성이 높은 반면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여유자금이나 사채자금이 중개어음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개어음시장은 자금이 많은 기업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간의 단기자금수급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기금융시장은 콜시장 등과 같은 금융기관간 시장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은 대부분 기업과 일반투자자간의 자금을 연결시키는 데 머물러 왔다.

그러나 어음중개제도는 기업과 개인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기업과 자금잉여 기업간의 단기자금을 조절해주는 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방향

경제정책해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출은 70년대 초반까지는 신장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점차 수출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 20%에서 80년에는 11%로 감소하였고 91년에는 4%로 줄어들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0.5% 증가한 데 비해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2.1%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수출품목은 91년을 기준으로 農産物이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의 25%로서 인삼·담배·사과·배 등 과실과, 돼지고기·김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林産物은 화강암제품, 밤, 송이버섯·표고버섯과 같은 버섯류, 목재 등이 주요 수출상품이며 농림수산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水産物은 전체 농림수산분야 수출비중의 55%로서 참치·연육·미역·피조개·오징어 등이 수출주종품목이다.

농림수산물 수출동향을 지역별로 보면, 91년의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地域別輸出構成比가 67%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세계최대의 농림수산물 수입국이자 우리 농림수산물의 수출잠재력이 큰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일본 농림수산물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여

중국의 7%나 대만의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7%이며, 이밖에 홍콩과 대만이 각각 6%와 3%를 차지하고 있다.

## 농림수산물 수출의 취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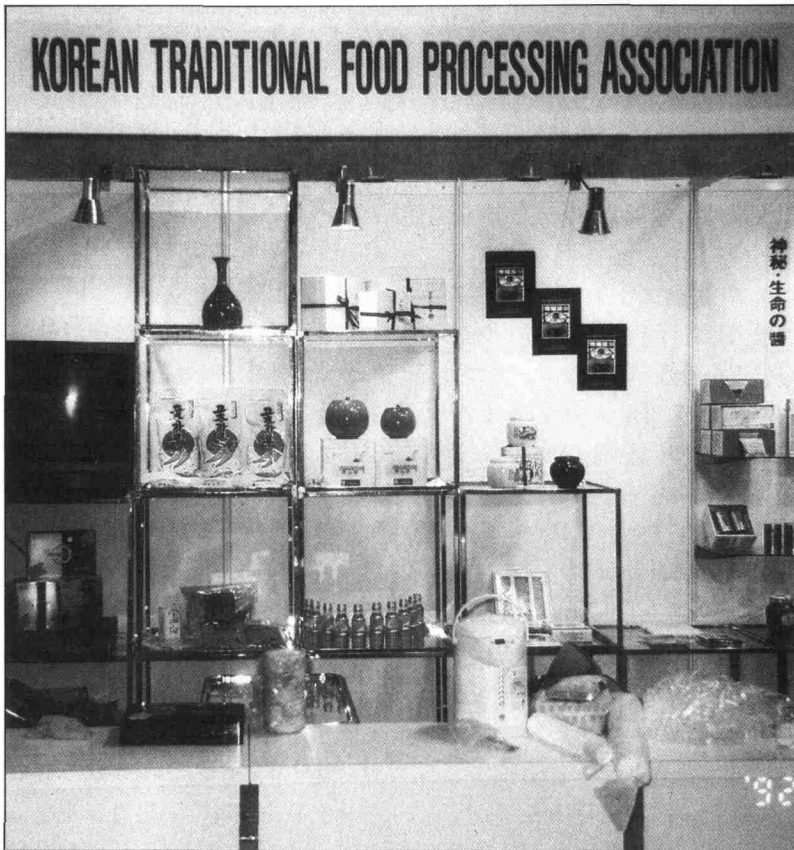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분야에서 심한 인력난과 고임금 현상에 직면하여 수출상품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높은 수출가격과 採算性 악화는 수출 농림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개척한 생사료·수산물 및 일부 低價農産物의 해외 시장을 최근 中國産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국내생산 및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일관성 있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내시장가격이 높으면 수출할 물량을 內需市場으로 판로를 돌리고, 과잉생산시에만 수출을 늘림으로써 우리 농림수산물의 수출신용이 떨어지고 輸入先이 외면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식품 소비의 고급화 추세로 수출용 일부 농림수산물이 內需用으로 전환되는 것도 수출이 부진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김영욱  
농림수산부 통상협력2담당관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대외적으로 고급품질의 경우 日本과 같은 일부 선진국과, 低價品은 中國과 같은 일부 後發國과의 힘든 경쟁이 예상되며 수출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일이 수출촉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애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수출업체와 양돈 계열화 업체를 연계한 수출규격돈 양산을 유도하고, 금년중 屠畜場 시설비 10억원, 肉加工場 시설자금 60억원, 그리고 수출잔여육 처리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생산자가 국내가격이 높을 경우 수출공급을 기피함으로써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輸出專門團地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수출유망농산물의 수출전문단지에 버섯시험소 등 10개 시험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지원을 확대하

고, 수출전문단지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계약재배의 추진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 구매자금을 91년의 371억원에서 92년에는 520억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전문단지 생산자와 수출업체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生産契約履行을 통한 원활한 原料供給體系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 수출 농림수산물의 품질제고

수입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출 농림수산물의 안정성 유지와 상품고급화가 필요하다. 특히, 對美 배 수출 및 對日 돼지고기 수출에 있어서 잔류물질을 이유로 통관상 문제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과일용 특수봉지 공급을 지원하고 가축사료 급여 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사과·배 등 과실류는 선별·저장·포장방법을 개선하고, 화훼류는 규격 및 色澤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김치의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관방법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물의 포장기술 향상을 통한 상품성제고 노력도 필요

농림수산물의 무역자유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장이 열리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림수산물 수출촉진은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다. 포장재·포장규격·디자인 등의 개선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 관련 포장재 비교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농림수산물 수출통조림용 자재공급을 위해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 해외시장의 개척

지역별로 보면 日本은 연간 농림수산물 수입액이 500억달러가 넘는 큰 시장이나, 우리나라는 16억달러의 수출에 그쳐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시장의 점유율이 9위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新鮮度維持가 필요한 농림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잠재력이 높은 對日 수출촉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품질을 개발하는 한편 까다로운 식품위생 및 검역조건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큰 밤·표고버섯 및 냉동딸기 등의 關稅引下에도 노력할 것이다.

일본시장 이외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試驗輸出事業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시험수출을 통하여 수출유망품목의 가격수준·유통구조·검역요구사항 및 지역별·품목별 상관습 등 수출과 관련된 각종 판매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농림수산물 전문수출회사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는 과실류 신규시장 개척자금으로 7억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5개국의 해외공관 및 주요수입상에 贈物用 果實을 송부하여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과실류의 입맛들이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다.

또한 일본 오사카, 네덜란드 로테르담 및 미국 LA에 설립된 농산물 판매전시장을 각각 일본·유럽 및 미국의 수출창구로 활용하여 우리 농림수산물의 판매는 물론 거래알선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주요국의 衛生檢疫制度和 수출유망 농림수산물의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구매단을 유치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장개척사업을 펴나갈 것이다.

#### 농림수산물 수출지원제도 개선

수출촉진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輸出檢査制度를 개선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고, 무엇보다 현재

수출검사와 수출검역의 이중검사를 받고있는 일부 품목은 수출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檢疫도 원칙적으로 외국의 검역요구사항 및 유해성 품목만 검사하고 검역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팩시밀리 신청에 의해서도 검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농협·축협·수협·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무역진흥공사 및 농림수산물수출조합 등의 수출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역할분담을 통한 수출촉진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국물산, 농협의 협동무역, 축협의 축산무역 등을 농수산물 수출전문업체로 육성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수출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간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수산물 수출협의회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수출제도 개선 및 수출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장치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협의

〈표〉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백만달러, %)

	90	91	증감액(증감률)
총 수출액	65,016	71,870	6,854( 10.5)
농림수산물	2,920	2,982	62( 2.1)
농산물	795	756	-39(-4.9)
임산물	610	587	-23(-3.8)
수산물	1,515	1,639	124( 8.2)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의 활력제고

경제정책해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내수소비 위주의 과열성장과 이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퇴, 국제수지적자의 심화 등 안팎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그 우려의 진단이나 처방 또한 각양각색이다. 한편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전에 美國의 포터(M. Porter)교수는 오늘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경제발전 단계상의 한 局面으로 진단한 바 있다. 그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를 요소주도단계·투자주도단계·혁신주도단계·복지주도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한국경제는 지금 투자주도단계에서 혁신주도단계로 전환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그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그는 한국경제가 혁신주도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과제로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지금까지의 비용 위주의 경쟁에서 기술혁신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연관산업 또는 지원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능력있고 독립적인 국내공급업체들의 협조없이 수입부품에만 의존할 경우, 기술혁신이나 국제수

지 개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中小企業의 創業이다.

새로운 중소기업이 많이 탄생되는 것은 일부 대기업그룹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유연성과 기동력을 가지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급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의 苗板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 한 단위에 의한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輸入誘發係數를 보면 일본이 0.07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347로서 수출에 따르는 수입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및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증대와 아울러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 및 중간재 하나 하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할 때 비로소 가능



홍순직  
상공부 창업지원과장

한 것이다. 그리고 부품이나 중간재는 그 특성상 수입규제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良質의 부품을 생산한다면 수입대체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창업이야말로 국제수지 개선 및 조립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절차의 간소화, 상담지원,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획기적인 중소기업 창업촉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 창업시 당면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 중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조달 문제이다. 중소기업 창업시 대부분의 경우 自己資本이 부족하여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야 하나,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중소기업의 자

금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創業支援法을 제정하여 종전의 일반금융기관의 창업지원자금인 ‘融資’와 함께 새로이 창업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投資’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약한 창업자에게 무담보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벤처캐피탈 회사로서, 투자한 창업기업으로부터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받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공개를 통해 소유주식을 매각하여 자본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으므로 정부는 이들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 세계상의 지원과 함께 창업지원기금을 투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社會遊休資本이나 소비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시키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합 결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합도 투자를 통하여 배당금을 받거나, 기업공개시 투자주식을 매각하여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회사와 같다.

정부는 이러한 投資組合의 결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합에 출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세제지원이나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을 조합결성시 결성액의 일정률만큼 조합에 출자하여 일반인의 출자를 유인하고 있다.

91년 12월 31일 현재 54개 창업투자회사와 31개 투자조합이 설립되어 총 7,423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1,148개 업체에 대해 5,612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200억원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은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제조업·광업·공학과 관련된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에 관련되는 서비스업을 창업한 업체이며 주식이나 전환사채·約定投資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투자한도는 창업중소기업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창업투자회사가 이미 투자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이외에 자금대여 등 후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외에 중소기업창업자를 위한 융자 지원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절차의 간소화, 상담지원,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획기적인 중소기업 창업촉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으로서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 기반기술을 企業化하는 자, 특허와 실용신안을 기업화하는 자,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계열 화품목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1억원 총 4억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9%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91년도에 총 472 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으며 92년 도에는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에서도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하여 자금을 융자지원하

고 있다. 국민은행의 창업자금은 제조업·광업·공학 및 조사·정보관 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설립하거나 창업후 2년 이내의 중 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창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이나 설립 후 1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서 中小企業 創業支援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지원하고 있 다. 91년도에 이들 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된 총 금액은 1,848억원으로 92년도에는 1,900억원을 창업중소

기업에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간소화

다음으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창 업절차의 간소화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편의도 모를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시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17개 법률에 의한 26개의 각종 인허가절차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275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 제처리토록함으로써, 종전에 創業 民願人이 창업에 따른 인허가를 받 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인력과 시간낭비 등 불편을 제거하 였다.

이러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대상자 는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창 업자이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 및 수도권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이다. 특히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국토이용관리법 등 입지관련 법령에 의해 공장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요건이 맞는 경우 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創業工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절차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창

〈표 1〉 창업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91년까지 재원조성	91년까지 투자실적	92년의 투자계획
창 업 투 자 회 사	5,708	4,194	1,700
창 업 투 자 조 합	1,715	1,418	500
계	7,423	5,612	2,200

〈표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융자

(단위: 개, 억원)

	91년 실적	92년 계획
업 체 수	168	200
금 액	472	500

〈표 3〉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융자계획

(단위: 억원)

	91년 실적	92년 계획
중 소 기 업 은 행	884	700
국 민 은 행	964	1,200
계	1,848	1,900

업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은 주로 공장을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환경보전·산림보호 등 국민생활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거나,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이나 수도권지역 등 각종 개별법으로 공장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창업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창업절차를 더욱 더 간소화함으로써 창업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제도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다.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다 더 확대 위임하도록 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현행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사항 외에 창업과 관련된 道路法상 도로개설허가 등 14개 법률에 의한 18개 인허가의 추가의제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창업자가 창업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認許可 사항을 축소하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내용이 환경·입지 등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창업자 개인이 작성하는 데는 한

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서 작성에 불비함으로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보완요청을 받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처리기관의 고충이 있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창업전문기관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대행토록 하고 대행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구에 창업지원계 설치 등 창업업무 전담조직의 신설을 통하여 현행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기능을 대폭 확충해 나가며, 정기적인 巡廻教育과 업무처리편람의 작성배포로 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창업절차·공장입지·세무·사업계획서작성 등 창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創業豫備學校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창업자를 위한 상담지원

정부는 창업예비자에게 상담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倒産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창업

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商工部에 등록된 상담회사는 현재 31개사가 있는데, 창업예비자에게 사업성평가 및 정보제공,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등의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창업예비자가 창업을 위하여 상담회사에 사업성검토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나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技術集約型 品目を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상담회사로부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 한도내에서 당해 용역비의 50%를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에서 보조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자가 사업성검토용역이나 경영·기술지도용역을 상공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의뢰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用役費의 5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상담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창업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자금지원·절차간소화·상담지원 등의 창업지원제도는 부분적이고 對症的인 지원제도로써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은 우리 경제의 장래를 일구어가는 장기적인 작업이며 산업의 기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별기업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회적인 투자와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창업당시에 직면하는 각종 애로요인인 자금부족·기술부족·정보의 불충분·시장분석 미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창업기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창업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조달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예비자를 위하여 장소·시설 및 각종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는 제도로서, 여기에 창업예비자가 입주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과 품질을 검사하고 또한 납품이나 판매를 해 본 결과, 사업의 성공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에 창업을 하도록 하여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창업기업보육센터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기업보육센터를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다.

단계에서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國稅 및 地方稅를 감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경우는 창업년도와 그후 3년간은 해당세액의 100%, 그후 2년간은 해당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다만 수도권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에 한하여 상기 세제혜택의 절반 수준인 창업년도와 그후 3년간 해당세액의 50%, 그후 2년간은 해당세액의 3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인 등록세 및 취득세의 경우는 창업일로부터 2년간 해당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세액의 50%를 감면지원해 주고 있다.

여 다음 두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창업자의 경우, 창업이란 이미 일구어 놓은 길을 단지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와 創造의 길이 험난하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업자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은 우리 경제의 장래를 일구어가는 장기적인 작업이며 산업의 기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별기업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회적인 투자와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대기업·은행·창업지원관련기관 등 모두가 중소기업 창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협조·지원할 때, 우리 경제의 싹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원 필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창업초기

끝으로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하

# 長期 전력수급계획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전문가 회의, 관련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정부계획으로 확정하는 바 있다.

금번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지난 91년 전기사업법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위한 法的 근거를 마련한 후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서 2006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재예측·점검하고, 이에 따른 발전소 건설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超長期計劃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에 정부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종전 장기계획이 89년 4월에 수립된 것으로 최근의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종전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94년 이후 전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최대수요 실적과 기존계획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90년 및 91년도의 최대수요는 기존계획 전망치보다 각각 43만6천KW, 64만9천KW씩 초과하였으며 오는 96년과 2001년도 각각 333만1천KW, 640만1천KW 초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전력수급동향

최근 들어 비생산성 부문인 업무용과 가정용의 소비가 현격하게 늘어나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과거 80~87년까지 8년간은 연평균 9.5%의 수요가 증가한 반면, 최근 3년간(88~90)은 연평균 13.7%씩 증가하는 등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또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요증가율 탄성치가 80~87년은 1.2로서 안정세를 보인 반면, 90년에는 1.64까지 증가하는 등 전력이 非正常的으



김정곤  
동력자원부 전력수급과장

〈표 1〉 인구 1인당 GNP 對比 소비전력량 국제비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영국
	88년	88년	88년	87년	87년
현재수준	4,040달러 1,771 KWH (1.0)	23,317달러 5,476 KWH (3.1)	6,045달러 3,484 KWH (2.0)	18,557달러 10,720 KWH (6.1)	12,143달러 4,716 KWH (2.7)
1인당GNP	88년	74년	86년	67년	75년
4,000달러 수준	1,771 KWH (1.0)	3,779 KWH (2.1)	2,874 KWH (1.6)	6,082 KWH (3.4)	4,170 KWH (2.4)

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최대수요는 약 920만KW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수립후 40년 동안 증가되어온 실적과 맞먹는 수치이다. 그러나 동기간중 발전소 건설은 306만 6천KW에 불과하여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약 2,200KWH로서 일본의 3분의 1, 대만의 2분의 1 수준에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력소비 수요도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표 1〉 참조).

### 장기 전력수급계획

15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모든 變數의 변화내용을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변수의 기본이 되는 GNP 성장률의 경우,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기간(92~96년) 중에는 정부에서 제시한 연 7.5%를 기준으로 하고, 그 후로는 그동안 고속성장에 따른 효과를 감안, 97~2001년까지는 연 6%, 2002~2006년까지는 연 5%로 하향 전망하였다. 이에 따른 전력량 및 최대수요량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수요전망

그동안 전력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으나 금번 계획부터는 수요부문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여 정부에서는 節電의지를 갖

고 추진할 예정이다(〈표 3〉 참조).

그리고 전력소비 구조가 주택용 및 상업용은 현재의 19% 수준에서 2006년에는 23%로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게 되는 반면, 산업용은 현재의

〈표 2〉 GNP 및 전력수요 성장률

(단위: %)

	87~89실적	91	92~96	97~2001	2002~2006
GNP	10.2	8.7	7.5	6.0	5.0
電力量	13.8	11.0	9.1	6.0	4.5
最大需要	14.9	10.9	8.5	6.0	4.6

〈표 3〉 기본수요 및 수요관리 전망

(단위: 천KW, %)

	최 대 전 력				效果(A-B)
	負荷관리전(A)		負荷관리후(B)		
	설비에비율		설비에비율		
92	21,410	9.7	20,834	12.8	576
96	30,082	14.4	28,752	19.7	1,330
2001	40,596	15.5	38,409	22.1	2,187
2006	51,321	14.3	48,155	21.8	3,166

〈표 4〉 전력량 및 최대수요

	91	96	2001	2006	增加率(%) (91~2006)
(百萬KWH)	104,765	161,578	215,917	269,494	6.8
電力量 構成比(%)					
주택용	19	21	22	23	8.0
상업용	19	20	21	23	8.2
산업용	62	59	57	54	5.9
最大需要(천KW)	19,124	28,752	38,409	48,155	6.6
負荷率(%)	70.3	72.1	71.9	71.6	—

62% 수준에서 5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우 높은 負荷率은 최대수요 관리효과가 반영되어 지속되리라 보고 있다(표 4) 참조).

#### 발전설비 계획

발전설비를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발전의 신뢰도인데, 통상 LOLP(Loss of Load Probability)로 나타내고 있다.

금번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LOLP를 0.7일/년(2000년대 초반 설비예비율 22%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수명이 다한 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한 만큼 건설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계획에는 18基 382만4천KW를 수명연장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건설所要를 줄이고 있다.

한편, 발전설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검토하게 되는데, 우선 WASP라는 전산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에 입각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환경규제 준수, 즉 이산화

탄소(CO<sub>2</sub>) 배출억제를 위한 비용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 위에 건설관리 능력, 전문인력수급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 등이 추가로 검토된

다. 이러한 과정에서 12개의 代案이 작성되어 최적안을 선택하는데, 현 단계에서 원자력 40%, 유연탄 30%, LNG 및 석유 20%, 수력 10%가 최적의 장기목표로 분석되었

〈표 5〉 발전설비 건설계획

(단위: 천 KW)

	91~2001	2002~2006	계
원자력	8,100(9)	8,100(9)	16,200(18)
유연탄	12,240(24)	2,800(4)	15,040(28)
무연탄	200(1)	-	200(1)
석유	20(2)	-	20(2)
LNG	5,230(8)	4,500(6)	9,730(14)
수력	2,130(16)	1,500(6)	3,630(22)
계	27,920(60)	16,900(25)	44,820(85)

註: 괄호 안은基를 나타내는 숫자임.

〈표 6〉 發電設備 구성전망

(단위: 천KW)

	90	96	2001	2006
원자력	7,616 (36.2)	9,616 (27.9)	15,716 (33.5)	23,229 (39.6)
有煙炭	2,680 (12.8)	8,920 (25.9)	14,360 (30.6)	17,160 (29.2)
LNG	2,550 (12.1)	5,967 (17.3)	6,767 (14.4)	9,980 (17.0)
석유	4,816 (22.9)	5,786 (16.9)	4,831 (10.3)	1,731 (3.0)
無煙炭	1,020 (4.9)	1,020 (3.0)	800 (1.7)	600 (1.0)
水力	2,339 (11.1)	3,104 (9.0)	4,469 (9.5)	5,969 (10.2)
計	21,021 (100)	34,413 (100)	46,943 (100)	58,669 (100)

이번에 마련된 ‘長期 電力需給計劃’은 2006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재예측·점검하고 이에  
 따른 발전소 건설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超長期計劃이다.

다. 즉 원자력과 유연탄이 基底負荷를, 일부 유연탄과 LNG가 중간부하, 일부 LNG와 水力이 尖頭負荷를 맡게 될 전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에너지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發電은 기술진보 정도에 따라 국산화가 가능하여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 기여도가 클 뿐 아니라 다른 發電燃料보다 경제성이 높다. 특히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규제하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안전문제만 확보된다면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로서 장점이 많은 에너지원이라 할 것이다.

원자력과 함께 기저부하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의 경우 연료 소요량이 원자력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아 연료의 저장과 수송면에서 과연 기저부하를 맡을 수 있을지 우려되며, 발전소 입지면에서도 원자력은 유연탄의 3분의 1에 불과하는 등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에 따라 2001년까지 9기를 추가하고 2006년까지 9기를 추가하여야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반면, 원자력과 함께 주로 기저부하용으로 건설되는 발전소는 경제성

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50만KW급에서 70만KW급으로 높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28기 1,504만KW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유연탄 도입시 항구에서의 적체문제, 환경규제의 강화추세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연동화 검토시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청정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LNG발전소는 운전기동력이 우수하여 주로 첨두부하용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14기, 973만KW를 건설할 예정이다. LNG발전은 다른 發電源에 비하여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향후 환경 등에 관한 사회비용 및 간접비용 등을 감안할 때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유연탄 발전소 건설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곤란해질 경우에 이를 代替할 수 있는 발전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석유 발전소는 가격과 공급의 불안정성을 감안 가급적 신규건설은 억제하되, 국제석유시장이 안정되거나 다른 발전원의 공급차질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시 항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부 LNG 및 유연탄발전소에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양용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할 계획이다.

## 투자계획

계획된 85기(〈표 5〉 참조)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45조5천억원(90년 불변가격 기준)이라는 천문학적인 投資財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매년 평균 3조원의 투자에 해당되어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커다란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소요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기존설비의 수명연장과 신규발전소의 설계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원천적인 투자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전기사업자인 韓電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여 자체자금 조달능력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재정용자 및 산업시설자금의 지원 등 정부지원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국내 전기요금에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는 억제하는 한편, 발전소 건설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前向的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전력수요 변동시 대응대책

前述한 바와 같이 장기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더라도 미래변화를 충

분히 반영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및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금번 長期計劃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현재 예측기준치보다 상한전망치로 수요가 변동할 경우 현재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全面 수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성 설비인 LNG발전소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입지위에 긴급 건설하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미래 수요가 기준예측치보다 낮아질 경우 그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 발전소의 착공을 연기하거나 준공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방향

2006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소 건설 추진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전 중장기 대응책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전소 건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 財源 및 發電所 立地의 확보

투자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나 전기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사회의 민주화·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지방화가 가속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입지확보 문제가 커다란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 6개소의 立地가 필요하나 3개소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나머지 3개소의 立地를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전력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입지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現存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를 크게 보완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심화시키고, 발전소 안전

과 공해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역점을 두되, 최근 기술진보에 따라 입지절약형 발전소의 개발 및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의 수명연장 가능성과 타당성을 종합 분석하고 次世代 신형 원자로 및 重水爐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기술자립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핵연료에 있어서 精鑛·변환·농축 및 비축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핵연료의 보다 경제적인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홍보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표 7〉 發電量 구성전망

(단위 : 백만KWH)

	90	96	2001	2006
원자력	52,887 (49.1)	65,171 (36.0)	104,379 (43.3)	156,868 (52.1)
유연탄	17,331 (16.1)	52,741 (29.2)	82,646 (34.3)	96,016 (31.9)
LNG	9,604 (8.9)	25,787 (14.3)	25,996 (10.8)	33,961 (11.3)
석 유	18,858 (17.6)	30,281 (16.7)	22,311 (9.2)	8,946 (3.0)
무연탄	2,630 (2.4)	3,224 (1.8)	1,954 (0.8)	1,231 (0.4)
수 력	6,361 (5.9)	3,666 (2.0)	3,923 (1.6)	4,048 (1.3)
計	107,671 (100)	180,870 (100)	241,209 (100)	301,070 (100)

註 : 괄호 안은 構成比(%)

원자력發電의 경우 6개소의 立地가 필요하나 3개소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나머지 3개소의 立地를 마련할 수 있는나의 여부가 앞으로의 전력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기술자립 및 국산화의 적극 추진

향후 85기의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핵심기술의 도입은 불가피하나 나머지는 기술자립을 통한 국산표준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력그룹사간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자재 국산화와 품질보장제도를 확고히 하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방향을 정립하여 기술자립계획을 보완하고 개발가능爐型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직은 代替 에너지源의 실용화를 통한 전력수급에의 기여는 미약하지만, 풍력·潮力·太陽光發電·연료전지 등 대체 전력원을 적극 개발하고 실용화시 장기전력수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에 속하는 신형 원자로(ALWR)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立地문제를 해결하고 효율향상을 기할 예정이다.

### 환경대책

환경보전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의 시설보완을 추진할 계획인바, 원천적으로 공해 발생요인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LNG·저유황 경유 및 저유황 유연탄을 사용하며, 95년 이후의 환경기준치 충족에 대비하여 9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

집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전소 건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해방지 시설을 초기단계부터 설치하며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전기의 구조적인 소비절약을 위하여 우선 절전형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중점 추진할 예정인바, 절전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장기처리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절전제품에 대해서는 特消稅를 인하하는 한편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건물은 지을 때부터 절전형이 되도록 유도하고, 최대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가스 냉방기기 및 빙축열식 냉방기기를 적극 보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요금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문에서의 절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 이번 長期計劃의 특징

금번 장기계획은 세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발전소 입지확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획과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연관산업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15년의 초장기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 2년 필요시 조정이 가능케 함으로써 장기계획에 따른 경직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함과 아울러, 2000년대를 향한 10대 장기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공급측면에서의 특징으로는 국내의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2000년대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발전의 경제성을 고려한 점이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형 발전소를 주로 건설함에 따른 경직성 완화를 위하여 기동력이 우수한 熱併合 발전을 확충하고 수력 및 무연탄 등 국내 부존자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 전력수급계획(Integrated Resources Plann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나리경제]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

경제정책해설

70년대 이후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도시화·핵가족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여 만성적인 住宅需給不均衡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더욱이 87년 이후에는 경상수지흑자로 발생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거품경제 현상으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별로 분배개선 및 복지증진의 욕구가 분출하여 주택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88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간 200만호를 건설하는 데 대하여 懷疑인 시각도 있었으나 91년말 현재 214만호를 건설하여 이 계획은 사실상 완료되었다. 200만호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자재난 등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계속 하락해 오던 住宅補給率이 89년부터는 상승추세로 돌아섰고, 주택가격도 작년 4월을 고비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주택가격의 안정

추세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간 60만호 수준의 주택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 및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을 감안할 때 최소한 94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만호 계획의 추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구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이 도입되어 도시저소득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사간의 평화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住宅請約制度의 개선과 주택전산망의 구축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중산층 위주의 주택정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막대한 財政負擔에도 불구하고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92년 주택경기전망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올해에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總需要 관리차원에서 건설투자를 적정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건설부문 투자가 급증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건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에 있어



최종수  
건설부 주택정책과장

建設景氣가 작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도 상대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91년에 4차에 걸친 건축규제조치에 따라 올해로 이월되는 건축수요 등으로 주택건설물량이 시기적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

주택가격은 공급측면에서 200만호 건설의 조기달성에 의한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와 수요측면에서 주택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인한 假需要抑制에 힘입어 작년 5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도시 입주물량 4만5천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만도 28만6천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63만3천호의 입주가 예상되므로 주택가격은 계속 안정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올해중 예정된 兩大選擧와 물가불안심리 등에 의한 불안요인도 아직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올해의 주택건설물량은 재·자금·기능인력 등 우리 경제의 능력을 감안하여 50만호 수준을 유지하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가격 安定基調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택지 및 주택자금 등 제반 관련요소를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주택건설물량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주택건설 적정관리대책을 추진

〈표〉 92년 주택건설 계획

(단위 : 천호)

	92~96년	92년 계획	91년 실적
공공부문	1,270	200	164
영구임대	20	20	50
공공주택	250	50	-
공공임대	100	15	-
공공분양	150	35	-
근로자주택	500	60	36
사원임대	200	15	12
근로복지	300	45	24
소형분양	500	70	78
민간부문	1,230	300	449
합	2,500	500	613

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형주택건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공급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소형주택 건설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수요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住宅購買力 제고를 위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택의 가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택투기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주택전산망도 보완하고 주택 관련법규도 개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 92년 주택건설계획

올해중 건설하기로 한 50만호의 내용을 보면, 일반근로계층 및 무주택서민 實需要者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20만호를 건설하고 나머지 3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건설하되 민간부문의 소형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건설의무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반면 25.7평 규모 초과분의 공급비율은 현행 30%에서 25%로 축소할 계획이다.

### 公共部門 건설계획

공공부문 건설물량 20만호는 전량을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자 등 도시지

역의 법정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6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2만호를 건설하여 전체계획분 19만호를 건설완료함으로써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한 일반근로계층 등 도시지역의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근로자 주택 6만호와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5만호 등 총 11만호의 소형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근로자주택 6만호는 분양용인 勤勞福祉住宅 4만5천호와 임대용인 사원임대 주택 1만5천호로 구분하여 전용면적 7~15평 규모로 건설하되 기업의 건설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는 18평까지 허용해 주도록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入住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중치를 종전의 2배에서 3배로 확대해 주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공공주택은 住宅公社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급할 계획이며, 분양용 3만5천호와 임대용 1만5천호를 12평 이하의 규모로 건설하여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토지비를 포함한 주택건설비의 50%를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고 國民住宅基金에서 추가로 20%를 年利 3%의 저리로 25년간

사업주체에게 용자할 계획이므로 전체적으로는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세입자의 부담은 보증금 400~600만원에 월임대료 6~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토지비를 포함한 주택건설비의 5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6%의 저리로 25년간 용자해 주되, 이 중 30%는 政府財政에서 국민주택기금에 出捐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입주자는 분양시 주택가격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5년의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만 내고 그 이후 20년간은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면 된다.

소형분양주택은 금년중 7만호를 건설하여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소형일수록 용자한도액을 인상하여 전용면적 15평 이하는 1,400만원까지 용자액을 인상해주는 한편, 이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도록 하였다.

#### 주택자금의 지원

92년에는 건설경기 적정관리를 위하여 91년과 비슷한 수준인 6조3,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정부재정에서 6,747억원을 지원하고 일반근로계

층을 위한 근로자주택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정부재정에서 953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영주택의 건설과 구입을 보조하기 위하여 주택은행·국민은행 등의 民營住宅資金으로 2조8천억원을 용자하되, 중산층 이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입자금은 지난해보다 1,258억원이 늘어난 2조5,850억원을 지원하고 建設資金은 건설경기의 적정관리 차원에서 714억원이 감소한 2,5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5평 이하 소형분양주택의 戶當 용자한도액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영주택자금의 이자율도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소형일수록 이율을 인하하고 중대형은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4,950억원을 용자할 계획이다.

#### 宅地の 원활한 공급

92년중 총 1,575만평의 택지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는 945만평을 공급하도록 하고 민간택지 630만평은 도

일반근로계층 및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20만호를 건설하고 나머지 3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건설하되, 민간부문의 소형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건설 의무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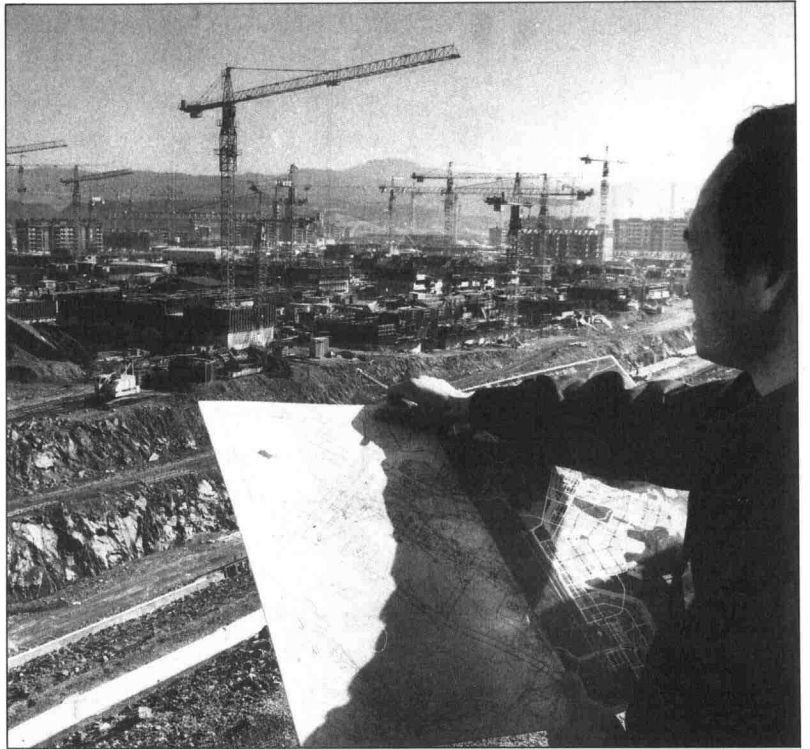
시내의 裸地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택지개발과 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택지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후 장기간 방치함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순위에 따라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수요를 근절하여야 한다. 우선 작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구축한 주택전산망을 보완하여 입력자료 중 탈락분과 오류분을 수정하고 國稅廳의 양도소득세 자료를 입력할 계획이다. 또한 內務部의 주민등록 전산화가 완료되면 이와 연계운영하여 무주택기간과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 파악기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무자격·부정당첨자와 조합주택의 조합원 적격여부 등을 가구별로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당첨자 등은 고발, 계약취소 또는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주택투기를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급질서문란행위를 주택청약통장의 전매·알선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여 투기행위에 관한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벌칙부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주택 전대시의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승인 전에 임의로 분양하는 경우 종전에는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리던 것을 등록말소 또는 일정액 이

상의 벌금을 내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전매·전대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또는 퇴거조치하는 경우에 입주자 또는 소유자가 불응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집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行政執行할 수 있도록 住促法과 賃促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방

# ‘좋은 식단’의 개발보급

食生活文化에는 식품의 산출, 조리가공, 상차림의 규범과 의례, 음식의 관행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에는 민족 고유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식생활문화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1차적으로 그 나라의 지리적 여건, 2차적으로는 사회·문화·역사적 여건의 영향을 받아 고유한 식생활 전통문화를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밥을 주식으로 기타 식품을 반찬거리로 하여 한상에 모아 차린 형식인 밥상으로 정착되었고, 이는 ‘한 상 차림’의 식생활, 풍요로운 식탁을 원하는 국민들의 식습관으로 아직도 우리의 식생활 속에 남아 있다.

과거 우리 국민이 겪어온 식생활의 변천과정에서 소위 보릿고개가 거론되던 60년대 중반까지는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먹었으며, 質보다는 量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 문화였다.

## ‘좋은 식단’ 실시의 배경

7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급진전하면서 국민 식생활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식생활이 생존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풍요로움을 즐기는 형태로 크게 달라지면서 음식의 과소비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푸짐하게 차리는 우리의 식생활습관 때문에 가정과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연간 8조원에 달하며, 이는 91년도 우리나라 貿易收支赤字 100억달러에 해당된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의 양보다는 질을 원하고 있음에 반해, 일부에서는 비경제적인 식습관이 잔존하고 있어 전체 생활쓰레기 중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음식물·조리와 관련되어 배출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2만 3천에 달하는데, 이는 5t트럭으로 4천6백대분이며 전체 생활쓰레기의 27.4%나 되는 분량이다.

특히 전국의 大衆飲食店 26만4,265개소 중 양식·일식·중화식(약 5만7천개소)은 버리는 음식이 많지 않으나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식취급업소는 아직도 낭비요인이 많은 편이다 (〈표〉참조).

〈표〉 91년도 대중음식점의 종류별 현황

(단위: 개소, %)

한식	일식	양식	중화식	분식	기타	계
137,418 (한정식 6,200)	7,294	26,321	23,440	18,789	51,003	264,265
52.0	2.76	9.96	8.87	7.11	19.3	100



김행진  
보건사회부 위생정책과장

또한 음식점 주방의 기본시설·위생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미비로 음식의 비위생적 조리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는 데다가, 韓食의 경우는 과도한 반찬가지수와 量을 제공하여 식사후 남는 것을 버리게 되므로 낭비요소가 존재함은 물론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생문제가 야기될 확률도 높다.

가정에서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외식 및 인스턴트식품 선호 경향이 높아 영양을 과잉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비만 등 각종 성인병 유발로 국민건강이 저해되고, 특히 冠婚喪祭 등 손님을 대접할 때 많은 종류의 잔을 다양하게 차려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직장진출과 사회참여 증가, 주부의 遊休時間 증대, 식품 및 식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관련 산업 기술혁신 그리고 도시화·국제화·세계화 등 外食 일반화의 확대를 촉진하는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점차로 외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90년에는 10조6천억원이 넘는 돈이 외식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38%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제반 이유 때문에 새로운 식생활개선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하

게 대두되었다. 政府에서는 이와 같이 음식점의 과도한 반찬제공 관행 등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위생문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과소비에 따른 자원낭비 문제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식생활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좋은 식단’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 ‘좋은 식단’의 내용

‘좋은 식단’이란 國民食生活文化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안전한 음식을 업소에서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음식점 모두에게 좋은 상차림을 말한다. 즉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을 제공하고 음식이 부족할 때는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좋은 식단’은 다음 세 가지 기본요소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로, 고객들에게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제공된 음식과 장류를 포함한 밑반찬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饌은 개별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찬의 경우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고객들에게 알뜰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음식에 맞는 적절한 반찬가지수로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을 가급적 소형찬기에 담

아 제공하되, 부족한 음식은 고객이 원하면 무료로 추가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음식의 맛과 어울리는 반찬을 제공하며, 최대한 季節食品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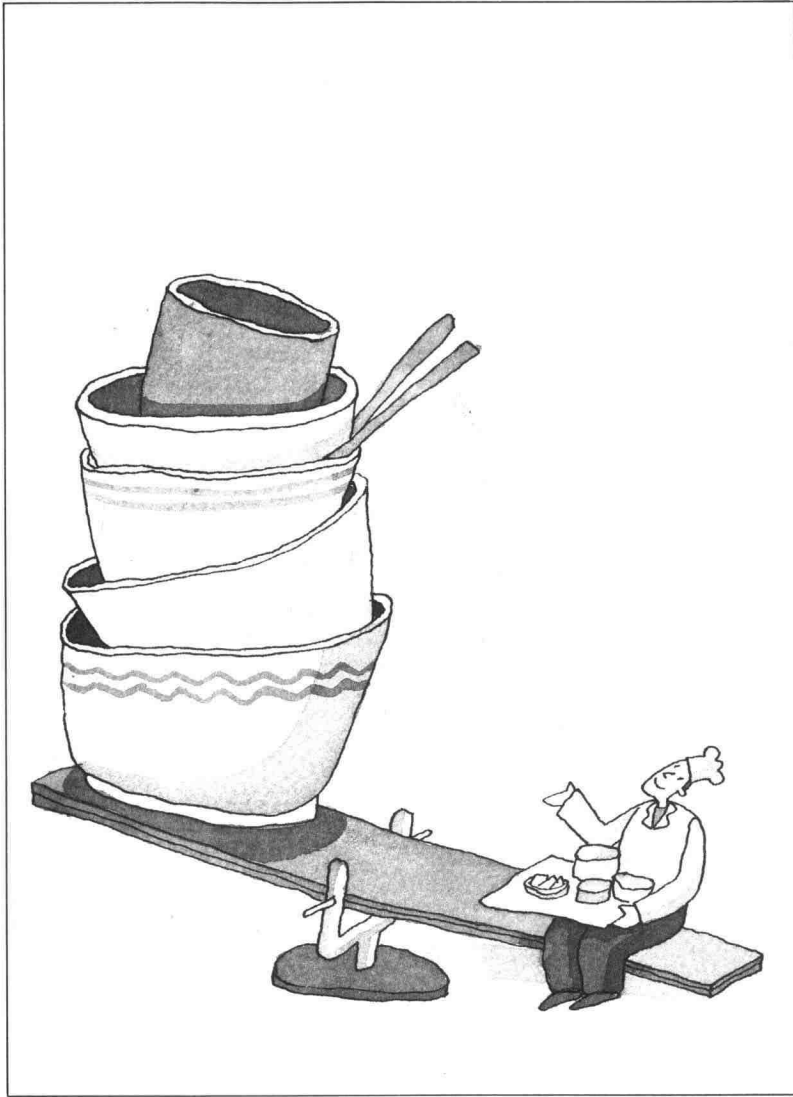
‘좋은 식단’ 권장모형에서는 전래의 조리법과 料食業所 판매실태를 감안하여 음식을 湯飯類·찌개류·전골류·찜류·비빔밥류·면류·반상류·기타 등 8개 유형으로 대부분 류하였고 실제 시판되는 음식 79종류를 예시하였다.

음식유형별로 제공반찬수와 음식 제공량은 문헌자료와 전국 600개소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식단실태조사결과 및 서울시내 60개소 요식업소 대상 1인 1회 섭취량, 殘飯量조사 결과를 토대로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권장적정량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음식유형별로 식단을 작성후 열량 및 단백질의 공급가능 영양가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 과거 주문식단제와의 차이점

외식산업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과 86년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실시하였던 식찬별 ‘주문식단제’와 현재 실시중인 ‘좋은 식단’과는 차이가 있다.

注文食單制에서는 모든 음식은 개



인별 찬기 또는 개인별 복합찬기로 제공하되 공동제공시 덜어 먹을 수 있는 국자·집게·접시 등을 함께 내고, 기본찬을 5찬 이내로 제한하되 백반정식은 3찬의 추가가 가능하며, 기본찬의 초과제공시는 찬별로 주문에 의하여 별도로 제공하되 한 정식은 상단위로 주문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견본대를 설치하고 찬별 차림표 및 주문전표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강력한 行政指導로 강제 실시한 결과 올림픽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전래 식습관과의 차이점, 반찬 추가주문시 가격부담에 대한 식당 이용객의 불만, 견본대 설치 등 기재구입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객의 취향에 민감한 업주의 소극적인 참여 및 올림픽 이후의 전반적인 자율화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좋은 식단'에서는 주문식단제에서 실시하였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반찬가지수와 제공량 및 공급가능 영양가를 제시하였고, 고객들이 음식을 추가주문시에는 무료로 제공함은 물론이고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官主導를 지양하고 요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이의 성공적인 실시를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 추진방법

'좋은 식단'은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건전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음식물 아끼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생활 관습 개선과 예절함양 등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폭넓은 운동과 연관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계도홍보와 함께 업계의 自律實踐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좋은 식단'은 92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급 料食業團體에 설치된 '요식업계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시·군·구별로 선정된 1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좋은 식단’이란 國民食生活文化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안전한  
음식을 업소에서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음식점  
모두에게 좋은 상차림을 말한다.**

시범실시중에 있으며, 시범실시 결과  
를 토대로 평가·보완 후 92년 4  
월부터 모든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 요식업소의 적극적인 추진자세 확립

한번 제공된 음식은 다시 상에 올  
리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에게 위생적  
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함은 물론  
이고 찬기를 가급적 소형의 개별찬  
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찜류나 구이  
류는 뼈 등의 버리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따로 제공하여, 위생적  
이고도 청결한 식사분위기를 조성하  
여야 한다.

한정식의 경우에는 順次別 제공방  
식을 통해 위생적이며 적정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인 제공방법을 통해 ‘좋은 식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좋은 식단’의 모형에서는 고객들  
의 嗜好度나 영양성을 고려하여 각  
음식 유형별로 반찬의 종류나 가지  
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요식업  
소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범위내에서 업소 자  
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지역특성과 업소규모를 고  
려한 후 업소 나름대로 ‘좋은 식단’  
을 참고로 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할  
찬류를 결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좋은 식단’에서는 1인 1회 섭취  
량과 잔반량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제공  
량을 제시하였지만, 제공된 찬이 부  
족하여 고객이 원할시에는 무료로  
추가제공하여야 한다.

#### 정부의 지원시책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업소로서  
시설환경과 종업원 서비스 등을 감  
안하여 업소수의 5% 내외에서 市·  
郡·區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  
회’의 추천에 의거 시장·군수·구  
청장이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수도료를 30% 감면  
받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세무조  
사 유보, 입회조사 배제 및 신고금  
액대로 課標額이 서면으로 결정된  
다. 또한 여신금지 업종의 범위 중  
에서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  
음식점’의 위생개선을 위한 시설자  
금은 예외로 여신이 허용되며, ‘모  
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함께 對國  
民 홍보를 위해 「한국의 유명 음식  
점」 책자에 수록하여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 식생활문화에 대한 고객의 의식개혁 필요

外食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만약 선택의 지식·태도·  
행동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잘못  
된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  
은 비합리적인 외식의 빈도가 누적  
된다면 영양과 보건에 장애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 많은 양의 식사, 식  
품의 편중된 섭취는 과잉영양·과소  
비의 주원인이며, 과열량섭취로 비  
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요즘 成人病의 원인이 아직 규  
명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위협  
을 받고 있으나 명백한 사실은 이들  
성인병이 일상 섭취하는 식사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 각자  
는 영양면으로도 적합하고 양적으로  
도 적합한 식생활을 영위하여 스스  
로 건강유지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식업소에서 아무  
리 ‘좋은 식단’을 열심히 시행하  
더라도 고객들의 적극적인 호응 없  
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좋은 식단’의 조기정착은 우리의  
식생활 관습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食生活  
文化 창출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국  
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  
히 요망된다. 

# 技術士의 시기진작과 능력제고를 위한 대책

## —技術士法(안)을 중심으로

경제정책해설

지난해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간에 여러가지 협의와 토론이 무성했다. '인력'에 관한 사항도 어느 부문 못지않게 많은 논의로 열기가 높았다. 91년 5월 민주자유당 정책위 주관으로 개최된 가칭 '산업기술대학' 설립관련 입법추진 토론에서 시작된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설치문제는 정부부처간, 黨·政간 협의를 거쳐 산업계·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교육부 주관으로 마련하도록 합의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산업계(특히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대책 수립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책들이 제시되었고, 평상시에는 인력정책문제를 주관하지 않았던 법무부와 국무총리실까지 인력난 해소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가히 汎部處的으로 고심하고 협력한 사례였으며, 제안된 방안 중에서 단기적인 추진과제는 즉시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인(기능인력 포함)에 대한 우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고용관행이나 교육체계를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7차계획 기간중에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여기서는 지난해 5월 29일 입법예고 후 현재 法制處에서 심의중인 '技術士法'(案)의 내용을 중심으로 技術士의 시기진작과 능력제고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술사의 현황과 역할

고급기술자로 지칭되며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자격 중에서 가장 상위인 '기술사'의 응시자격은 동일분야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기술분야 9년 실무종사자, 동일기술분야 기사1급 자격취득후 7년 이상 실무종사자 등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느 전문직종 인정시험보다도 까다로운 응시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6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사로 배출된 인력은 96개 종목에 총 6,800여명으로서 산업의 확대와 고도화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표〉 및 〈그림 1〉 참조).

이들은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운영·시공·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와 기술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봉현  
과학기술처 인력계획담당관

## 기술사법의 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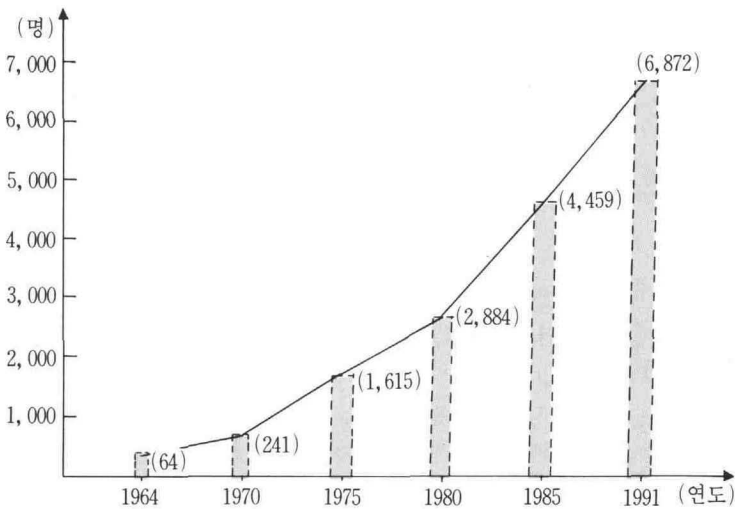
‘기술사법’(안)은 91년 5월 29일 입법예고 후 관련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0차 經

濟長官會議의 의결(91.12.20)을 거쳐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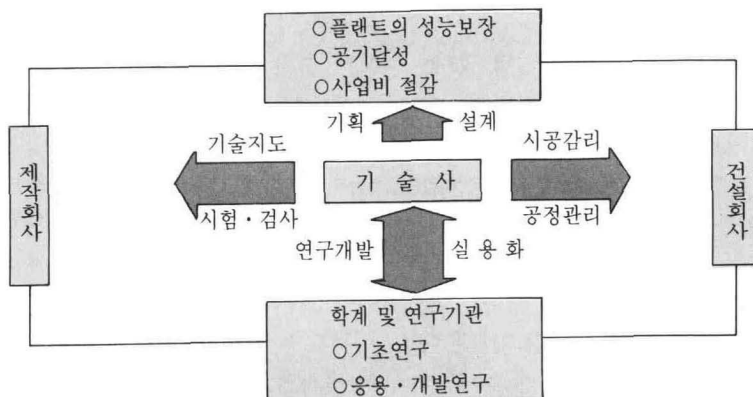
현재 기술사의 관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기술사 종목에 따라 내무부·건설부·농림수산부·

상공부·동력자원부·노동부·과학기술처 등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인원은 과학기술처(3,381명), 건설부(3,070명), 기타 부처(421명)이다.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92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면 주관부처가 조정되어 부처별 관리인원은 상당수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도별 기술사 배출현황



〈그림 2〉 기술사의 역할



## 外國의 運用事例

외국의 기술사제도 입법 및 운용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07년 와이오밍주가 처음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s Act)을 공포한 이후에 각 주마다 유사한 내용의 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시험은 연 2회 실시하고, 응시자격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후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하며,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칙허장(Royal Charter)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데, 대학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설계·시공감리 또는 특별한 연구에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 전문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한 후 기술사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일본은 57년에 제정된 ‘기술사법’에 의하여 연 1회 과학기술청에서

政府는 技術士의 활용촉진과  
지원육성을 통하여 기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술용역업의 해외진출과 국내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기술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技術士法 제정을 추진하였다.

실시하는 기술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기술사자격을 부여하며, 기술사심의회와 기술사회의 제도화가 정착되었다. 그밖에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각 주별로 제정된 법에 의해 운용되며 프랑스·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 法案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63년에 경제기획원의 제안으로 技術士法이 제정되어 운용되어왔는데, 73년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으로 기술사 자격시험까지 일괄 수용하면서 기술사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에는 기술사의 배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사의 활용촉진과 지원육성을 통하여 기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술용역업의 해외진출과 국내시장개방에 대처하고, 기술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기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별도의 기술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법안의 내용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인 기술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각종 산업의 기술적인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여 각 單行法에서 기술사의 참여를 의무화

〈표〉 분야별 기술사 배출 현황

(단위:명)

분	야	합격인원	분	야	합격인원	
기	계	651	광	업	98	
금	속	111	정	보	처	115
화	공	273	에	너	지	118
전	기	220	국	토	개	206
전	자	49	해		양	19
통	신	58	안	전	관	184
조	선	78	생	산	관	43
토	목	2,305	산	업	응	361
항	공	14	환	경	관	151
건	축	1,695	교		통	56
섬	유	67	계			6,872

한 법령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방법은 제42조의 13(소방설비의 시공관리)에서 소방설비공사를 소방설비기술사가 시공관리케 하고, 건설업법은 시행령 제36조(건설 기술사의 현장배치기준)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기술사를 공사현장에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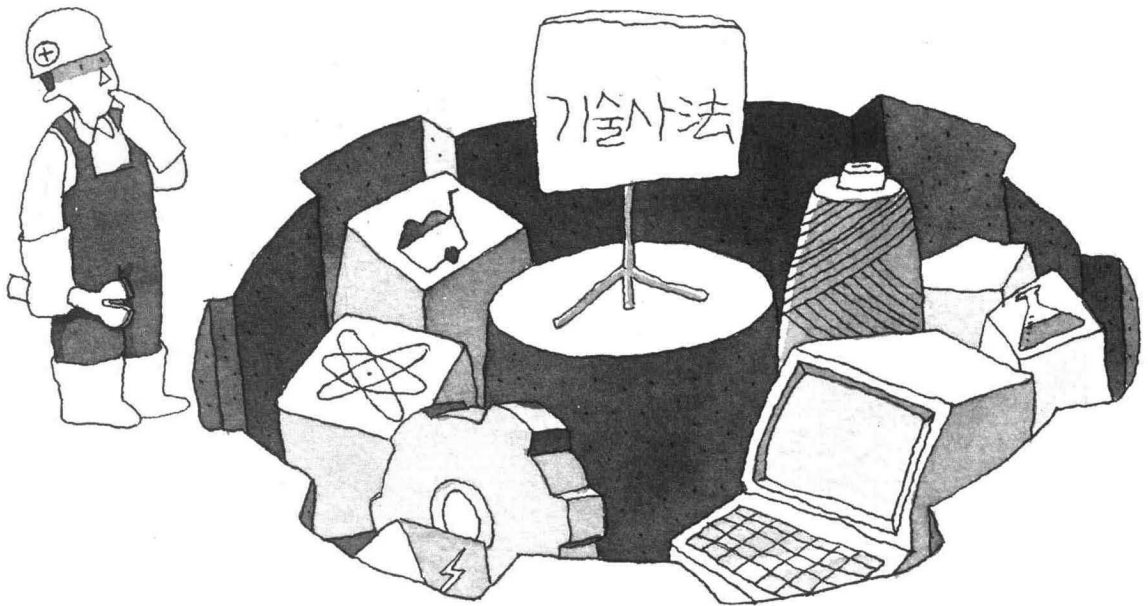
이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 시행령의 환경기술사 확보규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번에 입법추진하는 기술사법은 위와 같이 기술사들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法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법(안) 중 기술사의 직무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 타당성조사·설계·연구·시험·진단·사업관리·기술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안 제3조).

둘째, 정부의 기술사육성 및 활용 시책(법안 제5조)으로는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전망과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기술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산업현장에 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쳐 고급기술자들에 의한 기술력 향상을 이루도록 하였다.

셋째, 기술사들이 전문인력으로서 독자적인 기술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사사무소 개설(법안 제 6조)을 허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술사들의 宿願事項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기술사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운동방향

법안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 제정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자 한다. 한편 법안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처간에 논란이 있었던 기술사사무소 등록업무는, 현재도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

술사의 개인기술용역업 수행시 과학 기술처에 등록하고 있는 내용을 '기술사법' 제정을 계기로 근거법령을 조정할 것으로서, 기술사등록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技術士會를 강화하여 위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술사관리 주무부처들을 불편하지 않게 함은 물론, 기술사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등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술사 관련 주무부처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기술

사관리위원회를 구성(법안 제11조)하여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韓國技術士會를 기술사법에 의한 法人體로 보장 육성하여 기술사무소 등록업무를 맡도록 하고 기술사인력 및 그 성과물의 전산화를 추진하며, 기술사들의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적인 책임과 산업현장의 윤리관을 정립하도록 할 것이다. 나라경제

# 부산항, 어떻게 개발되나

## -4단계 계획과 전망

### 경제정책해설

무역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수출입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경제의 발전은 엄청난 물동량을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수송방법을 추구하여 수송의 혁명이라 불리는 컨테이너가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컨테이너 海上輸送體系가 도입되어 8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추어 주도적인 수송체제로 정착되었고, 그 취급량에 있어서는 80년 21만TEU에서 90년에 240만TEU를 처리, 10년간 12배의 급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로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95%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시설능력 부족에서 오는 滯船滯貨現象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극복키 위해 정부에서는 부산항 개발 제3단계 사업인 신선대 컨테이너부두를 91년 6월에 완공하여 부산항의 컨테이너 專用埠頭 처리능력을 90만TEU에서 186만TEU로 배증시켰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될 컨테이너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항만시설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물동량의 지역적 집중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光陽港 컨테이너부두

개발과 병행하여 釜山港 제4단계 개발 사업인 컨테이너부두를 92년초에 착공하여 최단기간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컨테이너 전용부두 시설능력이 306만 TEU로 확장되어 컨테이너화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컨테이너부두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背後輸送施設, 즉 배후도로의 건설·철도복선화·철도교차로 개선 등 부두의 기능 및 관련시설들이 최적화가 되도록 91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착수하여 94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 4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세계 컨테이너 해상수송은 크게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母船輸送과 모선의 입항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子船輸送 두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 수송을 독점하고 있는 大型 船社들은 자사의 이익에 민감하여 과거 모선이 기항하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설이 낙후되고 선박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항만서비스가 떨어질 때에는 가차없이 子船수송 체계로 변경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4단계 컨테이너부두는 母船의 入



이종천  
해운항만청 개발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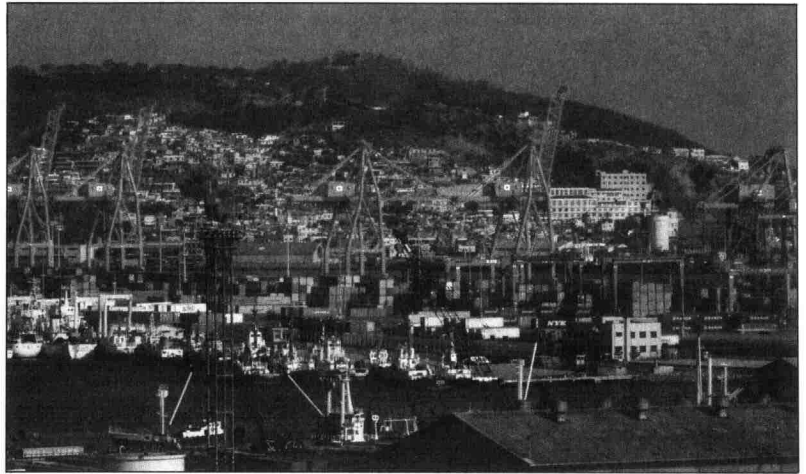
港 및 荷役에 있어서 船社측에 양질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컨테이너화물의 배후수송에 있어서도 시간과 수송경비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다.

接岸施設의 대상선박은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포스트 파나맥스형<sup>1)</sup>을 채택하고, 컨테이너야드는 온 덕(on-dock)<sup>2)</sup>처리가 가능한 장치능력과 컨테이너야드 운영의 자동화·전산화 능력을 완비토록 하며, 背後輸送網을 부두개발 전에 완성하여 종합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의 혁신적인 컨테이너 터미널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개발 방향에 부합되는 부산항 인접지역 후보지 5개소를 입안하여 환경영향·기존항만 기능과의 연계성·船主와 荷主의 선호도·배후수송망의 연결성·건설기간·건설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감만동 지역, 즉 신선대부두 서쪽 海面을 埋立하여 조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4단계 컨테이너부두 立地로 선정하였다.

### 부두의 규모

컨테이너부두의 규모는 대상선박에 따른 안벽길이, 선석수 및 컨테이너야드 넓이로 나누어 계획되어야 한다.



대상선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 파나맥스형인 5만DWT 급으로 계획하고, 세계적인 건설추세와 이용자 즉, 船社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船席의 안벽길이는 350m, 계획수심은 (-)15.0m로 계획하였다.

소요선석수 및 컨테이너야드 넓이는 계획목표연도의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처리능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시설능력을 근거로 그 규모를 계산·결정하였고 船席數는 4개 선석(길이 1,400m), 컨테이너야드 면적은 총 75만 m<sup>2</sup>로 연간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고속의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1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부두의 배치

선정된 부두입지는 북내항 주항로와 91년 6월에 준공된 신선대부두 사이에 위치하게 되므로 양측 시설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북내항 항로와 인접하여 배치됨에 따른 빈번한 入出港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로를 남측(영도측) 폭을 확보하여 기존 부두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였다.

### 배후수송계획

해상운송 형태가 국제 복합운송의

- 1) Post panamax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최대 선박보다도 더 큰 선박
- 2) 부두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화물을 공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화물을 부두에 정박시킬 수 있는 처리방식

4단계 컨테이너부두는 母船의 入港 및 荷役に 있어서 船社측에 양질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컨테이너화물의 배후수송에 있어서도 시간과 수송경비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다.

발전으로 門前一貫運送(door-to-door)이 가능하여졌고, 荷役時間의 단축 및 포장비용, 수송시간 및 수송비용의 절감 등 운송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항만과 배후수송에서의 컨테이너 一貫輸送體系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지는가에 따라 배후수송에 대한 전체적인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부산항 컨테이너화물의 內陸輸送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화물의 약 11%인 철도수송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이 부두에서 ODCY<sup>3)</sup>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貨主에게 전달되는 이중 수송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컨테이너 차량이 실제 처리량보다 2배 정도의 교통량을 유발함으로써 폭증하는 일반 교통량과 함께 시내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港灣의 입지조건과 운영적 측면에서는 현재 계획된 4단계 부두 위치가 가장 적당하지만 배후수송 조건은 釜山市의 중앙부에 위치함으로써 4단계 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하에서 4단계 부두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특정 도로만을 이용, 컨테이너의 시내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둘째, 4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최소한의 CFS(Container Full Station)를 설치하여 LCL(Less Container Load; 부분적하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기능을 ICD(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전이시킴으로써 LCL 화물로 발생하는 교통량의 부산시내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며

셋째, 장거리 수송컨테이너(경인·대전권)의 철도 輸送分擔率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넷째, 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전체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를 수송할 외곽 전용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하여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배후 수송계획을 수립하였다.

4단계 컨테이너부두의 발생 교통량은 시공중인 제2도시고속도로를 特定道路로 이용토록 하되, 4단계 컨테이너부두에서 제2도시고속도로에 연결되고 있는 우암로의 상황이 컨테이너 교통량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구간을 7부두 측 해안을 통과하는 高架道路 3.5Km(4차선)로 연결하여 일부 시내 교통량도 흡수시켜 기존 우암로의 체증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철도수송은 경인·대전권 화물의 50%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과 3·4

단계 부두 철도터미널간의 鐵道複線化(연장 6.0km)를 계획하였다.

#### 4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의 의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 교역량의 증대로 산업구조가 전문화·고도화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물적 유통구조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에 따른 유통비용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극히 저하되고 있어 이의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을 적극 추진, 그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온 덕(on-dock)기능을 갖춘 4단계 컨테이너부두의 개발은 시간적·공간적 애로를 최소화하고 공급자·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물론, 국민총생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시행되는 배후수송시설이 완비되면 컨테이너 운영의 서비스 개선 및 부산시내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

3) Off Dock Container Yard : on-dock의 반대개념으로서 화물을 부두에 정박시키지 않고 시내에 별도로 대기시켰다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 올해 임금인상, 생계비 기준으로 정해야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정 부나 기업에서는 총액임금제 등을 내세우며 우리 경제가 위기이고 그 책임이 모두 노동자에게 있는 듯이 총액기준 임금인상을 5% 안팎에서 정하고, 사무관리직 이상이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투자기관의 임금동결과 노동쟁의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있다.

한편,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은 당초 최저생계비 부족분의 90%에도 미달하는 기본급기준 9만2,241원(24.3%)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20개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는 산업구조조정과정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고용확보라는 차원에서 생계비부족분의 약 87%에 해당하는 정액 7만4,180원(15%)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조합원의 요구와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요청을 결합시키는 고통분담적 차원의 양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줄 모르고 상대방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려는 풍토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동조합운동이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운동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충정의 발로이다. 그럼에도 기

업인들이나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정부나 기업의 한자리수 임금억제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임금협상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적정임금'이나,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몰이해나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인들은 '임금은 생산성임금제 즉,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생산성임금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9.7% 올랐고, 금년에도 선거 등의 영향으로 두자리수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92년도 적정임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적정임금이란 무엇인가

적정임금이란 한마디로 생계비를 보장하는 임금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계비의 객관적 산출 방법 및 그 적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정임금이 곧 생계비를 보장하는 임금이라

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노총이 제시하는 생계비와 정부발표의 노동자 가계수지상의 생계비를 혼동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견해이다. 기업별체제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간·기업간·업종간의 비교임금’이 임금교섭의 비근한 準據로 등장하는데, 경제기획원의 생계비는 ‘간접적인 비교임금’ 또는 ‘노동자의 평균임금 및 소득’의 간접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적정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생계비는 경제기획원의 비교임금 또는 소득의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는 實態生計費가 아니라 이론생계비 또는 필요생계인 노총의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적정임금이 생계비라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상품생산되고 인간의 노동력조차도 상품으로 판매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일할 수 있는 능력=품)을 판매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든가 아니면 굶어 죽을 자유를 가진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라는 ‘품’의 적정가격은 무엇인가. 바로 ‘품’의 ‘재생산비용’이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이 바로 적정가격인 것이다. 생산비를 정상적으로 받고 판매하는 가격은 표준생계비를 보장하는 임금인 것이며, 최저가격으로 판매할 경우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임금이다.

이상에서 적정임금의 의미는 노동력상품의 생산비 즉, 공급가격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공급가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구조조정과정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고용확보라는 차원에서  
생계비부족분의 약 87%에  
해당하는 정액  
7만4,180원(15%)의 인상을  
요구하기로 확정하였다.**

곧바로 시장가격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상태에 의해 조정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노사간의 교섭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라든가 노동통제정책이 강행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하다면 공급가격 즉, 적정임금수준을 훨씬 밑도는 가격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럴 경우가 바로 생계비를 밑도는 임금이며, 적정 생산비에 미달하는 저임금인 것이다.

따라서, 임금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정임금수준의 교섭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형성된 임금과 기타의 소득 등으로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것이 바로 실태생계비이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공급가격을 사전적으로 계측한 이론생계비(적정임금)만큼 임금을 받는다면 노동자들의 가계수지상태는 개선되고, 이것은 실태생계비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노사간의 교섭력을 형성하는 요인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시장가격은 경험법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賃金債權’ 규정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처리방식이다. 기계구입비를 지불하고, 은행 빚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원료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지듯이 임금도 노동력상품 구입에 대한 채무인 셈이며, 그러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남는 것이 바로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 등의 이익이다. 그러나 지불능력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逆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용자로서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것을 계약한 노사간 임금의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지급이 거절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적자가 났어도, 지불능력이 없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어려울 경우 사정을 바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을 주주끼리 성과가 났을 때 이익을 처분하는 것처럼, 成果配分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지불형식을 달리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최소한 먹고 살 만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

다는 공동체 윤리적 측면에서 적정 임금은 바로 생계비를 보장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한다면 92년도 적정임금은 곧바로 92년도 6월 기준의 표준생계비 또는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총에서 산출한 바에 따르면, 92년도 노동력상품의 적정가격은 92년도 6월 현재 4인가족 기준으로 정상적으로는 144만6,629원, 최소한 115만7,303원이 된다. 현재의 전산업평균 임금이 61만9,897원이므로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봐서 현재의 임금보다 곱절은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임에도 노총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금년의 경우 받아야 할 노동력상품의 공급가격을 대폭 낮춰 잡았다. 현재의 임금에서 15% 수준이 오른 금액만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다.

### 勞總의 임금인상요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금년도 정치·경제 제반 정세가 총선 등 선거국면하에서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 성실하게 원칙을 세워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정부 공권력의 힘에만 기대면서 눈치만 볼 경우 그 후유증이 매우 크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이다.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대중의 생활상의 불만

과 요구에 기초하여 제기되고 발전한다. 또한 勞使關係는 인간관계인 만큼 상호간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한다. 그런데, 지난해에 정부발표 소비자물가는 9.7%나 올랐고,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더욱 오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리나라 100대 경영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경영인이 올해는 두자리수 물가가 전망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물가가 두자리수를 육박하는데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5% 임금인상을 고집할 경우 노동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뢰는커녕 자신들이 늘 주장하던 임금인상의 마지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질임금보장'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구인난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합리적인 기업인이 택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장바구니 물가는 50%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각물가의 상승이 31.3%나 되어 노동자의 86.7%는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물가는 상당한 통계적 타당성과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의 거의 절대적인 기준인 노총의 최저생계비 역시 물가 폭등을 반영하여 27.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막연

한 감각물가에 구체적인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코 과장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요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노총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요구율과 임금인상률과의 격차는 상당히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총의 요구수준이 상당히 자제된 수준이거나 아니면 합리적 교섭관행의 정착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 등으로 해석될 수 있겠거니와 89년에 26.8%의 인상을 요구하여 17.4%선에서 타결되었던 것이, 90년에는 17.3%~20.5%요구와 19.8% 타결, 91년에는 17.5%요구와 17.5%선 타결로 이어졌다. 한편, 노총이 92년도 적정임금 요구수준 산정을 위해 노조간부 2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본급기준으로 대략 9만2천원(21%)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합원보다 노조간부가 보다 보수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자의 요구수준이 어느 선인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지표인 것이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다소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적정임금 결정의 傳家の 寶刀처럼 생각하고, 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생산성임금제에 의하더라도 92년도 임금인상은 적어도 평균적인 지표로는 18.3%~28.4% 사이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간의 분배율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이다. **남원복**

# 올해 임금인상, 상실된 경쟁력 회복에 맞춰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지난 87년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두자리수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 동기중의 생산성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였다. 실질적으로 지난 4년간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은 82.0%에 이르러 해마다 약 20% 이상씩 오른 셈이 된다. 이러한 인상률은 경쟁국인 NICs 중 최고수준이며, 90년 현재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4.16달러로 대만(3.98달러), 홍콩(3.20달러), 싱가포르(3.78달러) 등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는데, 임금인상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1~2년 정도의 시차를 고려하면 89년의 생산성 상승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

상은 90년부터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임금인상이 생산성을 1% 상회할 경우 경쟁력 감소에 의해 산술적으로 6억 달러의 무역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92년도 임금인상이 또 다시 생산성을 상회하여 이루어질 경우 이미 상승한 고임금에 따른 무역적자에 추가하여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이 93년까지 반복된다면 외채부담의 증가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표 1〉 연도별 임금 및 경쟁력 추이

(단위 : %)

	87	88	89	90	91
임금상승률(A)	10.1	15.5	21.1	18.8	17.1 <sup>1)</sup>
생산성 증가율 <sup>2)</sup> (B)	10.1	14.2	7.6	14.8	13.7 <sup>1)</sup>
경쟁력 증감률(B-A)	0.0	-1.3	-13.5	-4.0	-3.2
경쟁력상실분(누적치)		-1.3	-14.8	-18.8	-22.0
물가 상승률	3.0	7.1	5.7	8.6	10.0 <sup>1)</sup>
무역흑자(억달러)	77	114	46	-20	-96.6

註 : 1) 전년대비 추정치

2) 생산성 증가율=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

**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

이 같은 고율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약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87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의 50% 이상은 임금인상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9년의 물가상승은 100% 임금인상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임금인상만으로도 6.1%의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 정도는 공급(생산자)측에서 자체 흡수하였고, 나머지 5.1%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경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91년 상반기중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19.6%에서 18.7%로 하락한 반면, 근로소득 분배율은 증가세(49.7% → 51.8%)를 지속하여 부

**올해의 임금조정은 그동안 상실된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최근 몇년간 누적된 경쟁력 상실분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가치상 기업의 순이익 비중은 11.4%에서 10.1%로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비율이나 단기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하락하였으며, 부채비율도 254.3%에서 286.3%로 상승하는 등 재무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87년 이후의 고율 임금인상으로 도시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계수지 흑자율은 89년의 23.6%에서 90년에 25.3%로 크게 상승한 이후 91년 2/4

분기에는 28.9%로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엥겔係數는 감소추이를 보이는 등 근로자들의 가계수지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92년 임금조정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음을 볼 때, 경제회복 및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해서 올해의 임금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경쟁력 상실분을 補填한 임금조정이다. 87년 이후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으로 현재 우리 기업의 임금수준은 우리 경제 능력과 국제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20% 이상 과대 인상되어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의 임금조정은 그동안 상실된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몇년간 누적된 경쟁력 상실분(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인상분)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의 일정분을 유보시켜 임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규모간·업종간 임금격차의 해소이다. 최근 기업규모간·업종간 임금격차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업의 높은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유발시켜 극심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불능력이 취

<표 2>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

(단위: %)

연도	임금 상승률	임금상승으로 인한 지수물가 상승률(A)	지수물가상승률(B) (소비자물가)	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률(A/B)
87	10.1	2.9	6.1	47.5
88	15.5	4.5	7.2	62.5
89	21.1	6.1	5.1	100.0
90	18.8	5.4	9.4	57.4
91 <sup>1)</sup>	17.1	5.0	9.6	52.1

註: 1) 91년 통계는 전년대비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표 3> 기업규모간 임금격차(全産業)

(단위: %)

	88	89	90	91.1~9
500인 이상	114	134	135	140
30인 미만	100	100	100	100

약한 중소 영세업종의 경우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인력난이라는 二重苦를 겪고 있어 휴·폐업 및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91년말 현재 약 5천여건의 부도업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89년(3,238건)과 90년(4,107건)에 이어 계속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최근의 기업 경영여건이 심각함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 영세업체의 존립과 기업 경영여건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및 서비스업 등 고임금업종의 경우 임금인상이 안정적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각 기업은 제한된 임금재원을 저임 생산직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 대신 사무관리직 및 고임 직종의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下厚上薄 원칙을 갖고 임금조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조정 전략 측면에서 총액기준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안정화 정책은 기업들이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신설·증액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임금인상을 기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타결률과 인상률간의 괴리현상을 가져왔으며, 또한 임금체계의 왜곡을 심화시켜 임금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과 타결률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총액기준 임금인상 개념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총액기준 임금인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금협상시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타결하고 단체 협약시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임금협상시 이

를 일괄 타결토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절감 및 합리적 관리를 통한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전제하에 임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87년 이후 계속된 노동운동과 근로자의 교섭력 증가는 인건비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근로기장 해이와 생산현장의 질서문란으로 생산성의 저하(불량률 증가, 납기지연 및 노동강도 저하)를 초래하여 인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특히 상당수의 기업들은 매출부진으로 과잉고용현상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高賃金 低生産性의 비효율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영계의 임금조정은 인력의 소수정예화를 지향하고 불요불급한 인력 외에는 충원을 피하여 인력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경영계의 92년 임금 가이드라인

92년 경영계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감안하여 국민경제생산성 범위 내에서 총액기준으로 하되 경쟁력 상실분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몇년간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누적된 경쟁력 상실분(22%)을 보전하되 향후 3년에 걸쳐 이 경쟁력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92년 임금가이드라인은 경쟁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92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에서 올해 경쟁력조정(복원)치 7.3%(누적된 경쟁력 상

실분 22.0%÷3=7.3%)를 차감하여 적정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적정임금인상률은 실질 GDP성장률(7%)에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 증가율:8%)을 더하고, 여기에서 취업자증가율(2%)과 경쟁력 조정치(7.3%)를 뺀 5.7%가 된다.

다만 위의 방식에 따라 92년 經總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5.7%로 제시되나, 앞에서 언급한 올해의 임금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감안하고, 대기업의 임금인상부담 경감 부분이 하청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5.7%에서 격차조정치 ±1%의 차이를 두어 高賃 대기업은 4.7%, 低賃 중소기업은 6.7%로 제시하였다.

92년 임금이 4.7~6.7%로 안정될 경우 첫째,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화되어 임금과 물가의 상호상승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국제경쟁력을 회복시켜 무역수지 적자폭을 작년도의 절반수준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초 임금협상을 통한 임금타결률과 단체협약 갱신을 통한 여타 임금부상 효과를 합한 올해 임금인상률이 經總 가이드라인(4.7~6.7%)을 초과할 경우, 이는 물가인상을 가져오고 다시 물가인상에 의한 임금인상 압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특히 단기적으로 무역적자의 개선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 **방안**

# 올해 임금안정 정책의 배경과 의의



**안희원**  
경제기획원 인력개발계획과장

**이** 금은 근로자에게는 거의 유일한 소득이지만, 사용자측에서 보면 비중이 큰 생산비용이다. 이 때문에 임금인상률은 勞·使間 임금교섭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교섭은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단위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물가·국제 경쟁력·소득분배·성장·고용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최근 5년간의 급격한 임금상승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된 임금인상률이 경제현실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적정하고 바람직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높은 임금인상으로 결국 경제파탄을 면치 못했던 南美諸國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가격의 조절기능에 의해 지탱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나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경제상황에 따라 가격통제·금리조정·환율결정 개입 등 정부의 가격조절 기

능이 요청되듯이, 완전한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결정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90년에 아시아 경쟁상대국 중 일본 다음가는 고임금국가로 되었다. 노·사 및 다수 국민이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임금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고임금 부문이 임금상승을 선도해왔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들 부문의 임금안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임금안정 정책이 노사자율 원칙에 反하고 모든 근로자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산업경쟁력 회복과 사회적 형평 증진 위해 임금안정은 필수적

최근 수년 동안 우리 경제는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과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국제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내수는 억제하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고 물가와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두고 있는 것이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등 內需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경제성장률이 7%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물가안정을 이루고 국제수지 적자 축소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경제성장이 늦추어짐에 따라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상승의 폭도 그만큼 줄어드는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총수요 관리를 위해서 총통화 증가율은 연평균 18.5% (91년 18.8%)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후 줄곧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기업은 자금사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내수억제·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의 긴축운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수익률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어려워지므로 기업도 그만큼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설투자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이 수반될 것을 감수하면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규

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추곡수매가를 7%로 책정한 것 또한 생산농가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및 出捐機關의 금년도 예산 중 소비성 경상경비의 10%에 해당하는 6,500억원을 절감하고,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임금안정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특히 여유있는 계층이 자기몫을 줄이는 데 솔선수범하여 산업경쟁력 회복과 사회적 형평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경제문제의 모든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의 고율임금 상승에 돌려서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총액기준 임금은 임금체계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에 기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외에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수당·상여금·복리후생비 명목의 수당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일부기업은 각종 수당이 50여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임금협상 또는 단체교섭에서 인상수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해에는 거의 일년내 교섭을 벌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교섭타결에 이르기까지 노·사간 불화의 소지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임금정책이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은 낮게 타결하고도 기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의 고율인상을 통해 실제로는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되어온 문제

가 있다. 특히 수당·상여금 등을 통한 고율 인상은 대기업일수록 뚜렷하여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를 벌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해에 정부가 총액기준으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인상을 토대로 우대 또는 제재조치를 시행하려는 것도 바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총액기준 임금교섭 방식이 임금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 5% 임금인상은 일부 高賃 대기업 등에만 적용

최근 4~5년간의 급격한 임금상승은 대기업의 고율인상에 의해 선도되었으며 그 결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에 따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인력이 이동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서비스부문으로 인력이 편중되고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번창을 부추기는 불균형한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가 임금수준이 높은 일부 대기업과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총액기준 5% 이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체 중 제조업은 상시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5% 임금인상 여부에 따라 우대 및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토록 하였다.

다만, 소비자 물가가 전년말에 비해 90년에는 9.4%, 지난해에는 9.5% 상승하였으며, 올해의 경우도 9% 수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어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은 그만큼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한 20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물가상승수준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실질소득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각 경제주체의 역할분담 필요

선진국에서는 물가와 국제수지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각계의 협조로 임금·가격안정을 이룩한 예가 많다. 일본은 지난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임금은 연평균 3.7%, 물가는 2% 수준에서 안정시킴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싱가포르의 85년에 노·사·정 합의기구인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로 임금억제 정책을 편 결과 임금은 5%, 물가는 1~2%에 안정되어, 경상수지 흑자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의 경제상황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이들 국가와 같이 각 經濟主體가 협조하여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할 시기이다.


기업은 수익률이 낮은 분야에 투자를 고집하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종래의 기업경영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키우지 않고 고임지불조건으로 경력사원을 스카우트하고 그 비용은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안이한 경영방식도 지양되어야 한다. 생산인력부

족문제도 해외인력 도입을 요구하기보다는 국내의 비진학 청소년·여성·고령자 등 유희노동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근로자들이 기업의 실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생산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 임금안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 스스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집단적 이해를 앞세우기보다는 회사와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성숙한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미 총취업자 중 60%에 달하는 1,129만 명이 임금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18%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인상률은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물가가 불안하고 국제경쟁력이 계속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임금 근로자라는 점에 비추어 정부의 임금안정화 노력에 근로자, 특히 고임금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기대한다.

기업가도 기업내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기업단위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발전과 생활수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경영방식의 쇄신이 있을 때 근로자의 협조와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政府組織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최성범

서울경제신문 기자/상공부

한 국경제가 선진국 진  
입을 바라볼 정도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  
던 요인을 한 마디로 규정  
짓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  
지만, 높은 교육열에 힘입  
은 수준높은 노동력, 그리  
고 효율적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었다는 점에 이의  
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이다.

이 중에서도 유교적 전  
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우  
리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실로 막대했다. 정  
부는 수출드라이브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화

학공업 육성, 물가안정 등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마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뒤 국민들을 설득했으며 그 시책  
을 수행해 나갈 기업까지 선정했다. 그야말로 국가독점  
자본주의였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  
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정부의 조직이 그만큼 효율적이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  
본 정부는 더이상 능률적인 집단이 아니다. 민간부문의  
생산성은 크게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은 제자리 걸음이다. 다른 부문을 주도하기는커녕 발목  
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도 '정부의  
추락'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상황이 반전된 것은 민간부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변신의 노력을 한 반면, 정부조직  
은 전혀 改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때문이 아닌가  
한다. 6共初 行政改革委員會의 개혁안이 유아무야된 게  
단적인 예다. 세상은 숨가쁘게 바뀌어 가고 있는 데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조직이나 행태 모두 70년대 초  
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전면적인 改造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만약 정부가 스스로의 생산성이 크게 뒤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자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부문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될 뿐이며 선  
진국진입의 길은 멀어지  
게 된다. 물론 정부만 나  
무랄 수는 없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곳곳(기업 포  
함)에 후진적 요소가 尙存  
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부는 유  
교적 전통 탓인지는 몰라  
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  
을 정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고, 그만큼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조직은 그 구조나 행태 모두 낙후돼 있어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모든 부처가 자신의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기획원은 물가, 재무부는 은행의 수지, 상공부는  
수출, 환경처는 환경, 내무부는 지방재정 개선만을 염  
두에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원이 택시  
요금을 묶어둘 경우,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등의 기회비용을 지  
출하는 점을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점이 바로 정부改造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우선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70년대  
에 만들어진 조직구조로 90년대 후반, 나아가 21세기까  
지 가는 것은 너무 무리다.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기능분화, 부처간 업무중복,  
조정기구의 비대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등의 문제점  
은 예산낭비,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각부처가 고통  
을 분담해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조직에도 기업처럼 '시스템즈 어프로치'  
의 도입이 절실하다. 기업이 토털마케팅(total market-  
ing)을 하듯이 정부부처도 국민경제 전체를 염두에 두  
고 시책을 펴나가야 한다. 

# 計量經濟學의 발전과 한국에의 적용



하영효  
농림수산부  
유통경제통계담당관실 사무관

計量經濟學은 경제학을 사회과학이게 하는 유용하고도 강력한 도구인가? 아니면 사람을 현혹시키는 부질없는 숫자 놀음인가? 계량경제학의 용도는 무엇이며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은 경제마술(economic-tricks)인가?

컴퓨터의 발달로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계량경제학을 전공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계량경제학이 제공하는 분석결과나 정책적 조언을 이용하는 입장에 있는 政策立案者나 決定者들은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계량경제학의 성립과 발전, 체계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計量經濟學의 發展

경제학의 주된 관심이 경제의 諸變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왜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것이라면, 계량경제학은 이러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測定하고 이를 이용한 豫測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원래 계량경제학은 理論經濟學·數學·統計學을 종합한 학문으로서 경제관계에 대한 數學的 論理展開과 實證的 檢證을 통하여 순수이론을 개발하는 의미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의 계량경제학의 경향은 주로 실증적 분석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계량경제학은 경제이론에 근거한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현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統計的 推定理論에 근거를 둔 계량기법에 의하여 母數의 推定 및 假說檢證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량경제학의 目標은 경제구조의 說明(explanation),

制御(control) 및 豫測(forecasting)의 세 가지에 둔다.

계량경제학의 발전과정을 보면, 1914년에 무어(H. Moore)의 小麥의 需要彈力性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보통은 미국에서는 計量經濟學會(Econometric Society)가 창립되고 계량경제학 저널인 『이코노메트리카(Econometrica)』가 코울즈위원회(Cowles Commission)에서 발간된 1930년대를 그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應用經濟科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슈츠(H. Schultz)를 중심으로 한 需要函數·供給函數·費用函數 등의 추정과 콕(C. Cobb)과 더글라스(P. Douglas)에 의하여 生産函數의 계측 등 개별적이고 靜態的인 微視模型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도 이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경제현상을 寫像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을 경제학이 제공해 줄 수 있고, 古典的 統計推定理論으로 가설을 검정하거나 이론적인 母數들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樂觀主義가 배후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주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그리 널리 퍼지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로는 계산장비가 아직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전문가들 외에는 계량경제학의 유용성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50~60년대에 계량경제학은 經濟政策의 安定化라는 실천적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後期케인지언類의 巨視動態模型의 추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칼레키(P. Kalecki), 턴버젠(J. Tinbergen), 클라인(L. Klein) 등이 定差方程式, 微分

- 계량경제학은 量的 分析에만 치중하고 無心한
- 道具主義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과 여러가지
-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 空理空論이나
- 講壇經濟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方程式 등을 사용, 시간변수를 포함한 모델들의 추정에 광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경제학자들은 정책결정자들에게 경제이론뿐 아니라 계량적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등 경제전문가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계량경제학자 자신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계량경제학의 위기론도 있었으나 80년대에는 계량경제학에 대한 낙관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개발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計量經濟學의 體系

계량경제학의 단계는 모델의 設定, 모델의 推定 및 假說檢定, 推定值의 評價 및 豫測(또는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모델의 설정 및 추정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데 모델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古典的 線型回歸모델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供給理論에 의하면, 여타조건이 동일하다면 재화의 공급량과 재화의 가격 사이에는 正(+ )의 관계가 있다. 재화의 공급량(종속변수)을 Y로 표시하고 價格(獨立變數 또는 說明變數)을 X로 표시한 뒤 선형모델을 가정하면 종속변수 Y는 설명변수 X와 패러미터로 설명되는 부분과 X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誤差項(e로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Y_i = b_0 + b_1 X_i + e_i$  이 된다.

위의 관계식에서 誤差項은 자연환경, 인간행위의 불규칙성, 측정오차나 모델의 수학적 형태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위의 식은 古典的 線型回歸모델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델은 계량경제학의 여러 모델들 중 가장 많은 假定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가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Y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독립변수와 오차항의 선형함수로 표시된다.

(2) 종속변수 Y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3) 오차항 e의 기대값은 0이며 관측치간에 分散이 동일하고 서로 相關되어 있지 않다.

(4) 독립변수 X는 반복적인 표본추출에서 항상 固定的인 값을 가지며 오차항과 獨立的이다.

(5) 독립변수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사이에는 서로 線型的 相關關係가 없다.

위의 가정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전적 선형회귀모델은 實驗室狀況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통제된 실험실에서 X라는 동일한 자극을 반복해서 주었을 때 거기에 따른 반응 Y를 관측하는 경우를想像하면 된다. 이와 같은 고전적 선형회귀모델은 最小自乘法(OLS)에 의하여 추정하며 여기서 얻어진 추정량은 偏倚가 없고 最小分散을 갖는 線型推定量이 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가우스-마르코프 정리).

오차항의 分散이 일정하지 않을 때(異分散) 또는 서로 相關되어 있을 때(自己相關)는 일반화된 最小自乘法(GLS)을 사용하여 추정하며 X로부터 Y로의 일방적인 因果關係가 아니라, 쌍방의 因果關係 즉 X 또한 Y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聯立方程式을 사용하여 間接 最小自乘法(ILS), 2段階 最小自乘法(2SLS) 및 3段階 最小自乘法(3SLS) 등의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패러미터를 추정하게 된다. 기타 종속변수가 연속적이 아닐 때('예' 또는 '아니오')와 같은 경우, 두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서로 선형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多重共線性), 독립변수 X가 고정적인 값이 아니고 확률적일 때, 관계식이 非線型일 때 각각 이에 알맞는 추정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계량경제학에서 다루는 모델들과 추정기법들은 고전적 선형회귀모델의 非現實的인 假定들을 보다 現實에 맞게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모델들이 등장하고, 이에 대응하는 추정기법이 개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이 計量經濟學이라는 학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여러 모델들과 計量技法을 사용하여 경제구조를 나타내는 母數를 추정하고 경제이론과 통계이론에 의하여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며 정책적 함축성을 끌어내게 된다. 간단한 예로 솔츠(H.Schultz)가 추정한 小麥의 수요방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log X = 1.802 - 0.2143 \log P - 0.00163t$$

X : 소맥의 수요량

P : 소맥의 가격      t : 시간

이 추정결과는 정부가 10%의 가격을 올리면 소맥의 수요량은 2% 줄어드는 대신 농가의 販賣收入은 8%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추정된 모델을 현실적인 경제구조의 제약조건으로 보고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묘사한 目的函數를 最適化시키기 위한 정책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制御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모델에서 失業率이나 인플레이션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매년 얼마씩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미시적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在庫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의 매입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때에 추정된 모델은 정책결정자가 당면하고 있는 政策環境이며 목적함수의 制約條件으로서 사용된다.

제어에서 흔히 쓰이는 기법 중의 하나로 動的計劃(dynamic programming)이 있다. 제어와는 다른 개념이나 정책효과분석에 쓰이는 기법으로 시뮬레이션이 있다. 간단한 예로, 特許法の 제정(정책변수)이 민간의 特許活動(종속변수)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특허법이 제정되었던 해로부터 假變數(dummy variable) 1을 만들어 특허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獨立變數로 잡은 다음 다른 獨立變數와 함께 母數를 추정한다. 특허법 제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특허법 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가변수를 0으로 하고, 종속변수의 사후에 측치를 계산한 다음 원래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예측치를 비교하면 특허법 제정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설정과 추정의 방법에 대하여(주로 응용계량경제학자들의 연구태도를 두고) 70년대 이후부터 批判과 反省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계량경제학의 모델은 '檢定'하기보다 '推定'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모델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고 母數의 추정에만 관심을 둬으로써 反證(falsification)보다는 立證(verification)의 입장에 선다는 점(포퍼에 의하면 科學的言表의 眞偽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反證이다)

(2) 실제의 모델설정 및 추정과정을 보면, 사전에 원하는 결과(높은 決定係數, t값 또는 그들의 부호)를 얻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다른 변수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변수를 제하기도 하고 관측치에 對數를 취하게 된다. 또한 한 변수의 관찰값으로 보통은 여러 代用物이 가능하므로 이런 代用物을 차례로 代入하여 다수의 回歸方程式을 '돌려'보게 되고 이 중에서 제일 '쓸 만한' 것을 골라서(마치 중간탐색과정은 없었던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리이머(E. Leamer)는 "세상에 보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세지 만드는 과정이요, 다른 하나는 계량경제모델 추정과정이다"라고 혹평하였다.

전통적인 모델설정과 추정방법에 대한 반성의 하나로 헨드리(D. Hendry), 미존(G. Mizon) 등은 현실의 경제데이터는 不均衡的 過程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단기적인 動學的 調整過程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自己回歸的 分布時差(ADL)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능한 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을 먼저 설정하고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 패러미터의 數를 점차 줄여나가는 모델 모색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가장 간단한 방정식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점차 모델을 일반화시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헨드리의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하여서도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최적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理論 없는 測定'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편 리이머는 고전적인 추정기법은 實驗科學에 적합한 것으로서 실험실이 아닌 社會 속의 경제관계에서 주어지는 경제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베이지안 분석기법(사전적·주관적인 정보를 경제데이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설정의 탐색과정을 모색하였다.

계량경제학에 대한 리이머의 공헌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모델의 探索과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점이며(설록흠즈 추론방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모델설정의 동기를 6가지로 구별하였음), 다른 하나는 회귀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에 관하여 極限分析(Extreme Bound Analysis)이라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사전적 정보에 따라 '자유스러운' 변수(방정식에 확실히 포함되는 변수)와 '의심스러운 변수'(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구분한 다음, 의심스러운 변수에 임의의 加重值를 매겨 패러미터를 추정하고 사전적 정보를 바꾸어가면서 이에 대응하는 추

정치 最大值와 最小值를 검토해 본다. 리이머는 이 방법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변수들에 의한 ‘자유스러운’ 변수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敏感度分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리이머의 노력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며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時系列모델의 고찰

계량경제학의 목표 중의 하나로 예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서도 서술한 바와 같다. 앞에서 논의한 계량경제모델은 經濟主體의 行爲, 制度, 技術的 關係 등 경제구조를 나타내는 構造方程式으로 이루어지는데 추정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을 하려면 예측기간 동안의 정책변수와 같은 獨立變數나 先決變數의 값이 미리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독립변수에 대한 예측을 한 다음 다시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오차가 커져 예측이 어렵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블랙박스과 같아서 그 구조를 알 수 없는 것이며 관찰된 변수는 오차의 덩어리이므로 그 움직이는 역사적 패턴(規則性)을 알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時系列分析家들의 입장이다. 시계열모델은 사전적인 경제이론 없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를 듣는 것’이다. 현실의 경제동향은 確率過程에서 발생하는 時系列이며 적어도 예측에 있어서는 構造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70년에 나온 박스-젠킨스(Box-Jenkins)모델(ARIMA모델이라고도 함)이 있다. 박스-젠킨스의 ARIMA모델은 外插法의 精巧化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모델의 모형설정 및 추정의 어려움과 비교해 볼 때 이 방법은 직접적이고 또한 낮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계열모델에 의한 예측이 구조모델에 의한 예측보다 나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 착안하여 심스(C. Sims)는 ‘無理論的 經濟學’을 주장하였다. 심스는 80년 「巨視經濟學과 現實」이라는 논문에서 구조모델로 聯立方程式體系를 만들고 識別(패러미터의 값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량을 결정하는 것)을 위하여 事前的 制約을 주는 것을 비판하고, 코울즈위원회의 접근법에 대한 代案으로서 벡터自己回歸(Vector Autoregression)분석법을 제시하였

다. 심스에 의하면 모든 변수는 모든 구조방정식에 포함되어야 하며 구조모델의 식별을 위하여 경제이론에 의한 사전적인 제약을 가해서는 안되고 예측이나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식별은 필요없다고 하였다. 그는 계량 경제모델에 등장하는 변수는 모두 內生變數(모델내에서 결정되는 변수)로 취급해야 하며 모델설정을 위하여 특별한 경제이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간단한 예로 물가상승률(X)과 임금상승률(Y)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벡터자기회귀모델을 보면,

$$\begin{aligned} X_t &= aY_{t-1} + bX_{t-1} + e_1 \\ Y_t &= cY_{t-1} + dX_{t-1} + e_2 \end{aligned}$$

위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변수는 對稱的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오른쪽의 선결변수들은 攪亂要因( $e_1, e_2$ )을 제외하고는 두 식에서 모두 같다.

벡터自己回歸를 이용한 예측은 한 期 앞의 값으로부터 反復計算에 의하여 산출된다. 다른 시계열모델과는 달리 벡터자기회귀의 경우에는 政策效果分析을 할 수 있는데 모델내의 어느 변수에 가해진 攪亂要因의 충격이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動學的 波及效果를 시뮬레이션기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벡터자기회귀모델은 因果方向分析이나 假說의 탐색에도 쓰인다.

벡터자기회귀모델은 ARIMA모델의 한 특수형인 自己回歸(AR) 모델의 多變數로의 擴張이라는 점, 모델설정과정에서 경제이론에 의한 사전적 제약을 가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시계열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변수의 선결과정이나, 정책효과분석시 교란요인간에 同時相關이 존재할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변형이 필요한데 이때 변수간의 ‘순서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이론에 기초한 사전적 정보가 필요한 점, 방정식의 모양이 연립방정식의 誘導型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構造모델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벡터자기회귀모델은 구조모델과 시계열모델의 調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벡터자기회귀모델도 정책효과분석이나 예측의 결과가 변수의 선정이나 시차길이의 선택, 변수간의 순서매김의 방법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진다는 점, 여러 변수의 시차를 함께 고려하므로 긴 시계열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 計量經濟學의 한국에의 적용

이상으로 계량경제학의 발전과정과 그 체계 및 용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계량경제학을 받치고 있는 前提와 價値觀은 무엇이며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학(계량경제학을 포함하여)의 전제를 보면 契約에 바탕을 둔 合理性의 行動原理와 사회를 個人單位로 분해할 수 있다는 個人主義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적 합리성과 개인주의적 사고에 덜 익숙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국의 경제를 寫像하고 있는 理論體系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文化的 차이를 간과한 느낌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은 抽象的·直觀的이며 空理空論과 名分論을 좋아하는 경향이 짙어 계량경제학과 같이 具體的·經驗的·分析的인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두루 잘 아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특히 관료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둘째로, 경제변수간의 설명이나 시물레이션 및 예측은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가정 위에서 있다. 이는 세련된 테크닉을 자랑하는 現代數理經濟學의 중요한 가정인데, 經濟外的인 變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이론의 數學的 精緻化를 이룩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社會制度나 政治 등 경제외적인 조건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하에서는 이 가정은(극히 短期間을 제외하고는) 비현실적이기 쉬우므로 경제구조의 설명이나 예측은 偏倚되거나 의미가 줄어들 수 있다.

셋째로, 계량경제학의 모델분석가들은 연구결과를 학술지 등에 발표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모델의 추정결과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예컨대 분석에 쓰인 데이터의 資料源이나 單位 및 디스플레이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넷째로, 경제데이터 時系列의 길이가 아직도 짧아서 긴 시계열을 요구하는 헨드리의 구조모델 설정방법이나 심스의 벡터자기회귀모델의 경우는 적용상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經濟關聯指數가 아직도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한 점, 시계열을 개편한 경우 충분한 과거시점까지 소급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자료이용상의 제약이 있다.

- 오늘날 우리나라의 계량경제학은 한국경제의 문제를
-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정치와
- 사회문제까지도 그 이론들에 수용할 수 있는 큰
- 그릇으로서의 패러다임의 出現을 기다리고 있다.
- 
- 
- 

계량경제학은 量的 分析에만 치중하고 無心한 道具主義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과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 空理空論이나 講壇經濟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비록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책입안자에게 現實經濟의 구조를 알려주거나 相反된 假說을 검정하고, 복수의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장래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는 계량경제모델이 갖는 假定的 현실성을 고려하면서 그것이 제공하는 分析結果와 政策的 代案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계량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계량기법의 精緻化보다는 결과의 政策的 함축성이나 有用性을 보다 重視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지 게재시의 심사기준에도 이런 점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에는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첨부하고 그것의 가공과정을 함께 밝혔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계량경제학은 한국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出現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政治와 社會問題까지도 그 이론들에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서의 패러다임을 말한다. 그것은 비록 이론적인 세련미를 덜 갖추었다 할지라도 현실의 경제를 보다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학을 수립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경제학도들에게 맡겨진 큰 과제이다. 남궁

# 육상운송업 개방에 따른 대응방향



김선태  
교통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무분별한 보호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자유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GATT의 제8차 협상, 소위 우리가 UR이라 부르는 뉴라운드가 86년 9월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를 가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서비스교역이 협상대상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금융·통신·운송 등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多者間協商을 통한 운송서비스시장의 개방압력과 병행하여 선진 각국은 韓·美해운협약, 한·EC 실무회담 등 쌍무협상을 통한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운송업계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개방경위 및 국내육상운송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개방경위 및 영향

미국은 지난 86년부터 미국 육상운송시장에 외국인 참여가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들어 相互主義를 근거로 우리나라 육상운송시장의 개방을 계속 요구하여 한·미 통상협약으로 떠오르면서 마찰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韓·美間 마찰해소 및 해상운송의 차별적 제도 완화 등의 사정을 감안, 지난 91년 7월 8~9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해운협약에서 미국의 즉각적이며 전국적인 육상운송 시장의 개방요구에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육상운송시장에 미국의 부분적 참여를 허용하되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91년 8월 1일부터 부산직할시내의 운송을 허용하고, 92년 12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여 경남지역까지 운송을 허용하며, 93년 6월까지의 경북지역까지 참여를 허용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EC에서도 이 결과의 對EC 동등적용을 강력히 요구하여 정부는 最惠國待遇原則을 존중하고 韓·EC간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91년 11월 27~28일 서울에서 개최된 韓·EC 실무회담에서 韓·美海運協議 결과의 對EC 동등적용을 허용키로 하였다. 이처럼 韓·美, 韓·EC 간 쌍무협상을 통하여 육상운송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으며 92년 1월말 시작되어 3월까지 진행될 UR 서비스 讓許協商에서는 개방의 폭과 시간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화물운송시장의 개방으로 전반적으로 규모나 경영실태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육상화물운송업계가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량은 203만8,606TEU이다. 그 중 外國船社가 처리한 양은 59.8%이며 美國船社와 EC船社가 처리한 비율은 전체 물량의 10%와 13%에 달하고 있어 이들 외국선사가 우리나라 육상운송시장에 참여할 때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세계교역의 추세가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외의존적이므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개방화·국제화는 시

간문제일 뿐 필연적 추세라 하겠다. 또한 개방이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경쟁을 통하여 대고객 화물수송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오고 나아가 기업의 物流費用 절감으로 상품가격을 인하시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개방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국내 육상운송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육상운송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구역·노선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 참여는 일반구역화물과 노선화물은 면허제로, 전국화물과 특수화물은 등록제로 되어 있다. 또한 일반구역화물은 圏域別로 사업구역이 정해지고 당해 사업 구역내에서만 상주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는 混積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들은 영세한 기존 운송업체들을 보호하고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지금은 화물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수송효율을 저하시키며 경쟁을 통한 기업체질의 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외국의 경우 운송업자가 하나의 계약에 의해 육상·해상·항공운송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화주의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수송(door to door service)하는 국제복합운송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화물운송 알선 및 주선제도는 육·해·공 운송수단별로 각기 자동차운송사업법·해운법·항공법 등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이 복합일관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법률과 규칙에 의해 각각의 認·免許를 얻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외국업체와의 서비스경쟁이 불리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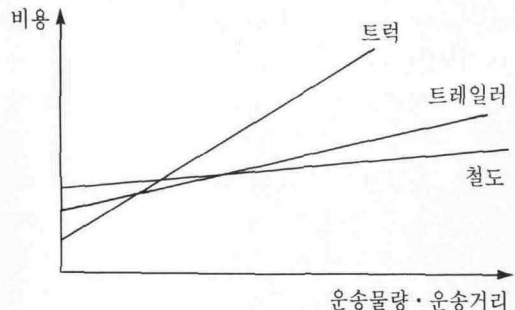
셋째, 터미널 중심의 화물운송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트럭의 평균적재율이 51.4% 空車率이 33.4%로 화물운송효율이 극히 낮다. 화물터미널 중심의 운송체계가 효율적인 가장 큰 이유는 <그림>에서 보듯이 운송수단별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 육상운송업 개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 단계적 또는 제한적 개방으로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 기간을 부여하며,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개방을 통한
- 업체의 체질개선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거리가 짧고 화물량이 적을수록 公路運送手段 특히 소형 트럭이 유리하며, 운송거리가 길고 화물량이 많아질수록 대형트레일러나 철도수송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교통망상의 적절한 위치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여 소형의 수송수단으로 부근의 여러 지역에서 화물을 모아 대형트레일러나 철도로 옮겨 실어 장거리 수송할 경우 혹은 대형의 수송수단으로 장거리 운반된 화물을 소형의 수송수단으로 주변지역으로 단거리 운송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로 화물의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은 여러 곳에 산재된 소량화물을 전산망을 갖춘 화물터미널에 모아 대형트럭이나 철도로 대량수송하여 화물운송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물터미널, 화물정보전산망 등이 미비하여 화물터미널을 경유, 集·配送되는 화물은 18.4%에 불과하며 나머지 81.6%의 화물이 직송됨으로써 불필요한 통행수요를 유발시키고 에너지 과다소비로 운송비용이 증가하여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수송수단별 비교우위



## 경쟁력 강화방안

이와 같은 우리나라 육상화물운송업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국내육상화물 운송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첫째, 육상운송업 개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단계적 또는 제한적 개방으로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기간을 부여하며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개방을 통한 업체의 체질개선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화물운송업체의 보호나 질서 유지 차원의 소극적 정책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 발전과 체질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점차 완화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91년에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92년에는 일반구역화물과 용달화물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노선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현행 운임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구역화물과 용달화물의 공급기준제도를 폐지하여 화물운송사업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설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화물유통과 관련된 수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세계적 추세인 복합운송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화물유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물류표준화의 추진, 복합운송수선제도의 도입, 화물터미널의 조성지원, 창고업 육성 등 화물유통과 관련된 기존법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공포(91.12.14, 법률 제 4433호)한 바 있다. 이 법이 금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면 화물유통의 중심법으로 화물유통의 효율화를 진전시켜 화물운송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러한 제도개선적인 측면과 아울러 화물운송업체의 영업기반을 조성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화물집산지에 수송·보관·포장·하역 및 정보관리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 수송체계를 복합터미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 전국의 주요 화물집산지에 수송·보관·포장·하역
- 및 정보관리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 수 있는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 수송체계를
- 복합터미널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91년 5월 31일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원회를 열어 수도권외의 부곡과 부산권의 양산에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복합화물터미널을 포함하는 내륙화물기지를 각 1개소씩 건설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중 부곡ICD는 92년 말까지 완공기로 하고 양산ICD 및 복합화물터미널은 9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맺음말

이상으로 육상화물운송업의 개선방향과 정부의 육상운송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육상운송업 개방 요구 자체가 외국선사들의 自社貨物을 화주의 문전에서 문전까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비용으로 수송하려는 복합일관수송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해상운송·도로·철도 등 가능한 모든 운송수단을 결합하고 보관·통관기능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복합 一貫輸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서비스향상, 생산성향상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